

정책연구 2024-25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성주 · 김윤승



참여연구진

저 자 김성주, 김윤승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윤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활동은 도시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익숙해있던 소비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저성장, 가처분소득 저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활발해져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유경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충청북도 또한 2022년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동 조례에서 마련토록 한 충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임
 - 이를 위해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사례를 분석한 후 충청도 내 공유경제 대상 사업 발굴 및 보유한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공유경제 정책 비전을 설정함
 - 또한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 및 전략과제와 하위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함

2. 공유경제 정책의 현황 및 쟁점

- 세계 및 국내 민간영역에서의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2016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 지자체의 경우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유경제 개념과 비전을 지방행정에 도입하여 조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왔음
- 공유경제 정책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마련 및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2019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제시 이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나 제도 개선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움
- 지자체의 경우도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여 왔으나 거버넌스 체계 구성의 어려움,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있어 책임소재 여부, 공유경제 사업 참여자간 신뢰형성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해 공유경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 사례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

- 국내·외의 공유경제 정책 사례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를 모두 공공서비스로 해결하려는 것은 재정이나 인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여기에 공유경제를 이용 및 활용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떠오름
 - 적자비용의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하는 민간이용자 모집이나 인건비를 지불하는 방법
 - 취업지원에 있어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훈련이 아닌, 여러 선택의 폭이 넓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우드소싱과 스킬셰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법
 - 다만, 공유경제의 지나친 의존은 역으로 재정분야의 정부후퇴를 불러올 우려가 있음
- 지자체와 세어사업자(플랫폼, 중간지원조직) 연계의 메리트
 - 공유경제의 추진 체제는 ‘지자체’, ‘플랫폼’, ‘중간지원조직’임
- 지역별 과제 포인트 : 육아 양육 지원, 커뮤니티, 지역의 발(이동수단) 확보, 방재분야, 취업기회 창출, 관광진흥 등

【표 1】 공유경제로 해결가능한 지역과제와 주요 예시

	지역과제	공유자원(주요 예시)
보육지원	육아지원, 가사부담의 경감 등을 통한 여성 활약 지원	가사세어, 육아 세어, 클라우드소싱 텔레워크
커뮤니티	지역커뮤니티의 형성, 강화, 다양화를 꾀하는 주민 니즈에의 대응	스킬(특별히 업무 내용을 한정하지 않음) 등
지역의 이동수단 확보	공공교통공백지역의 이동수단 확보, 장보기 지원	카 셰어링(자가용차, 공용차 등), 합승(드라이버)
방재	재해 발생시 물자 부족의 상정	지원물자, 가옥, 이동 화장실 등
취업기회의 창출	주민 소득 향상,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일자리 제공	클라우드 소싱 텔레워크, 인재 세어
관광진흥	지역의 매력을 발산, 교류의 활발화	체험 서비스, 민박, 주차장 세어

출처: 일본 총무성(2020) “세어 이코노미 활용 핸드북” p.4

- 셰어링 서비스를 지자체의 인프라로서 침투시켜, 유희공공자원과 지역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인적 물적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과제를 해결
 - 지자체의 공조를 각 공유경제서비스로 실현 즉, 구민회관과 회의실을 ‘스페이스 마켓(스페이스 세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 등
 - 보육시설을 늘리는 대신 ‘AsMama’(보육세어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개개인의 육아분담 서비스 기능을 도입
-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활성화: 유희공공자원, 유희자산(빈 집 및 미활용 인적 자원)을 재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참가를 유도
 - 육아를 마친 여성을 ‘Anytimes’의 가사대행의뢰서비스에 참가시켜, 직장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
 - 빈 집을 Airbnb의 숙박시설로서 대여하여 유희자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
-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 충북의 공유경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시사점
 - 준비기와 실시기, 계속검토기로 나누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준비기는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과제의 해결을 향해 사업의 구상 정리 및 검토시기, 실시기는 사업의 상세한 사업계획 작성 후 사업실시 시기, 계속 검토기는 사업을 일정 기간 실시한 이후, 사후조사를 거쳐 향후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 사업으로서 계속성을 판단하는 시기임

- 여기서 사업화의 검토는 추진체제의 구축, 사업 스킴의 검토 등일 것이고, 사업계획의 작성은 매칭 구조 작성이나 제도측면의 정리, 안전성면의 시책 구상이고 사업의 계속성 검토나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피드백 등이 될 것임

4. 충북 내 공유경제 정책 사업 조사 및 도민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 충북의 공유경제 정책 사업 조사결과

- 충청북도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 시, 6개 군, 충북도 산하기관 다수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수행되는 정책사업에는 편차가 존재했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이나 수요의 차이에 따라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유형별 빈도 차이에 따른 것임을 시사함
 - 시 지역의 경우 공간공유 및 지식 및 재능 공유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데 반해, 군지역의 경우 물건공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중앙정부(행안부 및 기재부)에서 조사한 충청북도 지역별 공유자원 현황과 비교할 때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 공유경제 정책사업 수행 현황과 괴리가 있었음
 - 시 지역의 경우 다양하고 풍부한 공유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유경제 정책사업 추진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북 도민의 공유경제 인식 조사결과

- 충청북도 도민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 설계에 따라 199건(명)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설문 응답자 중 53.8%는 공유경제를 경험해 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84.1%는 공유경제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3.6%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공유경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충북 공유경제 서비스 중 이용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개방된 청사시설 이용(15.3%)이며 공동 육아 나눔터(14.1%), 농기계 임대사업 및 공동연구장비 공유사업(11.3%) 순으로 나타남

- 충북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사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3.46(보통 3.0)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편이었음
- 경험해 본 공유경제 서비스는 공유주차장(9.8%), 숙박공간 및 승차공유(각 8.5%), 생활용품(기타) 공유(4.5%)순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만족도는 3.66이었음
- 공유경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성(2.62), 비용 저렴(2.37), 높은 만족도(1.39)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공유경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이 67.6%이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80.5%로 나타나 도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정보부족(7.42), 필요하지 않기 때문(7.08), 대체수단 존재(7.03), 신뢰성 부족(6.89),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남(6.77)
 - 이러한 결과는 도민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41.4%)이 긍정적 인식(15.6%)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발전 전망에 대해 긍정적 반응(64.6%)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해)부족(3.36), 지역 내 공유경제 자원부족(3.04),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2.69),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2.10) 순으로 나타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민들은 홍보를 통한 관심유도 및 참여 독려(5.66),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4.79),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3.96),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3.30), 공유경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2.73)순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공유경제 서비스의 수요 의향을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공유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 및 공간 공유와 생활용품 공유 및 숙박공간, 재능/지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 의향과 관련하여 생활용품 및 공유주차장, 재능/지식 서비스, 체육관, 멘토링 서비스 등 민간 차원에서 물품뿐만 아니라 시설(공간), 재능 및 일자리, 이동수단 등 모든 유형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유희자원 제공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인식 조사결과 시사점

- 이러한 공유경제 서비스 수요 의향과 공급 의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충청북도는 유형에 따른 공유경제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활용품 공유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이를 활성화할 플랫폼 형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설(공간) 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나 공급 의향이 낮으므로 유희자원에 대한 조사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재능/지식 서비스나 멘토링서비스의 경우 공급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홍보 등을 통해 해당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충북 공유경제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 공유경제 SWOT 분석 및 세부전략 도출

- 충북의 공유경제 정책관련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내부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 외부요인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공유경제 SWOT 분석

	강점(S)	약점(W)
내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사업 성공 경험 보유 •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의 미비 • 공공 자원의 제한적 활용 • 공유경제 개념의 혼동
	기회(O)	위협(T)
외부 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확대 가능성 •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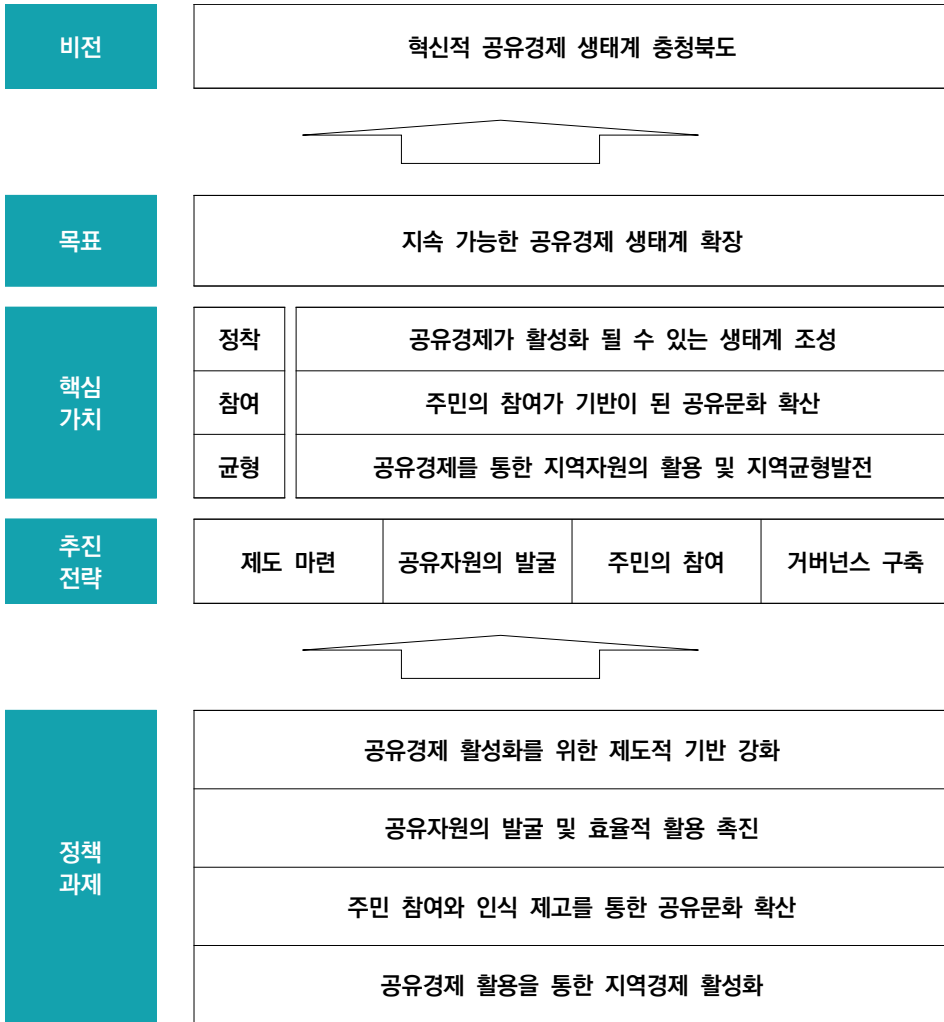
○ SWOT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 정책의 세부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표 3] 공유경제 SWOT 분석을 통한 세부전략 도출

		강점(S)	약점(W)
		내부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 사업 성공 경험 보유 •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 사업 성공 경험 보유 •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의 미비 • 공공 자원의 제한적 활용 • 공유경제 개념의 혼동 	
기회(O)	S-O 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확대 가능성 •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 	<p>SO: 다각적 공유자원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1: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 기반 구축 • SO-2: 공유경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 SO-3: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p>WO: 공유경제 홍보 및 인식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1: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 WO-2: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WO-3: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위협(T)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p>ST: 공유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1: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 ST-1: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 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p>WT: 공유경제 거버넌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1: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WT-2: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조성 • WT-3: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 비전-추진전략-전략별 세부과제

○ 비전체계



○ 4대 추진 전략 및 전략별 11개 세부 추진과제

전략 ① 공유경제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기반 구축

-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 공유경제 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전략 ② 공유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촉진

-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전략 ③ 주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통한 공유문화 확산

-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전략 ④ 공유경제의 협력적 구축으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문제 해결
-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 지원체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충청도 내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서 충주시가 2018년도, 진천군은 2019년도에 '공유촉진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충청도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 시군 모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향후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나머지 9개 시군의 조례제정 확산을 유도하고, 이 때 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11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공유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전담 조직 구성 필요

- 시군별로 공유경제 정책 전담조직의 마련이 필요함
- 충북도 및 시군 대상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8.26~9.6)에서 청주시, 옥천군 등 시군과 제천시립도서관, 진천농업기술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공유경제 정책 사업관련 부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관련 부서에서 복지, 농업, 교육관련 부서까지 매우 다양한 부서에서 매우 의미있는 공유경제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을 시군별로 전담 부서화하여 도와 연계·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민관협력과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공유경제 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탄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민간의 사업 아이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공공영역에서 지원가능한 공유자원의 발굴과 IT 활용, 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의식을 고려한다면 특히 민간기업 및 공익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충북도와 도내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이들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경제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공유자원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관련제도의 마련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업의 성과관리

- 공유경제 정책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도 및 시군의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임을 고려했을 때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의 형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기수립하여 성과평가제도를 운영 중인 인천시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성과평가체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그림 1| 공유경제 정책사업 성과평가체계(사례)



출처: 인천연구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19)

- 성과평가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선행 성과평가제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 수혜자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효과성 등 계획서상의 적정성 평가
- 성과의 정량적 평가: 사업추진 건수, 예산, 참여자 수 등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
- 사업 참여자(중간조직, 공급자,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중간조직의 참여자나 공유자원 공급자, 사용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 2 장 공유경제의 개요와 정책 현황

제1절 공유경제의 개요	11
1.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	11
2. 공유경제의 특징과 유형	16
3. 공유경제 정책의 기대효과 및 사전 점검사항	23
제2절 공유경제의 정책 현황	26
1.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26
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33
제3절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39
1. 시군별 현황	39
2. 충청북도 공유사업 현황	40
3. 충청북도 공유자원 현황	45
제4절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 및 시사점	49

제 3 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사례 분석

제1절 해외의 공유경제 사례	53
1. 일본 사례	53
2. 미국 사례	69
제2절 국내의 공유경제 사례	79
1.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79
2. 기초자치단체의 사례	89
제3절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96

제 4 장 충북의 공유경제 인식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101
제2절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결과	104
1. 정책사업 조사응답 현황	104
2. 유형 및 수혜대상 현황	106
3. 사업방식 및 관련부서 현황	108
제3절 충북도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10
1.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	110
2.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 및 이용 의사	112
3. 공유경제 이용 방식	119
4.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 및 추천 의향	122
5. 공유경제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124
6. 공유경제 서비스를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 인식	128
7.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의향	130
제4절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134

제 5 장 충북 공유경제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제1절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141

 1. 공유경제 SWOT 분석 141

 2. SWOT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 세부전략 도출 143

제2절 비전 및 추진전략 145

 1. 비전체계 145

 2. 정책목표 146

 3. 4대 추진 전략 146

제3절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147

 1. 4대 정책과제와 11개 세부 추진과제 147

 2. 11개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47

 전략 1: 공유경제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기반 구축 147

 전략 2: 공유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촉진 150

 전략 3: 주민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공유문화 확산 및 광역화 153

 전략 4: 공유경제의 협력적 구축으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156

제4절 지원체계 159

 1. 법·제도적 기반 마련 159

 2.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160

 3. 성과관리체계의 마련 162

【 참고문헌 】 167

【 부록 】

 부록1: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조사 결과 169

 부록2: 설문지(도민 대상) 178

표 목차

표 2-1 공유경제 유사 개념	14
표 2-2 공유경제의 필수요소	16
표 2-3 공유경제와 소유경제 비교(2)	18
표 2-4 공유경제와 렌탈 서비스 비교	19
표 2-5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화(1)	19
표 2-6 공유경제와 렌탈 서비스 비교	20
표 2-7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유형화	21
표 2-8 플랫폼 시장구조에 따른 유형화	22
표 2-9 공유경제추진 우선분야	27
표 2-10 공유경제 조례 도입 현황(연도 및 지자체별)	34
표 2-11 공유경제 관련 조례의 지역별 현황	36
표 2-12 충청북도 주요 공유경제 사업 현황	41
표 2-13 공유자원 지역별(도) 현황	46
표 2-14 공유자원의 지역별(충청북도 내) 현황	47
표 3-1 서울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83
표 3-2 전라북도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86
표 3-3 경상남도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88
표 3-4 광명시 발전시책 및 추진과제	91
표 3-5 고양시 추진전략 및 실행사업	94
표 3-6 공유경제로 해결가능한 지역과제와 주요 예시	97
표 4-1 공유경제 설문조사 주요문항 내용	103
표 4-2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개요	104
표 4-3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응답 현황	105
표 4-4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유형	106
표 4-5 충청북도 지자체별 공유경제 정책사업 유형	107
표 4-6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수혜대상	108
표 4-7 충청북도 공공부분 공유경제 사업의 사업방식	109

표 4-8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1
표 4-9 공유경제 경험 여부	112
표 4-10 공유경제 참여 유형	113
표 4-11 충청북도 공유경제 경험 여부	114
표 4-12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 경험	115
표 4-13 충청북도 공유경제 경험 만족도	115
표 4-14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우선순위 선택 - 3순위 까지) ..	116
표 4-15 공유경제 서비스 (재)경험 의사	117
표 4-16 공유경제 (재)경험 의사 (경험자와 미경험자)	118
표 4-17 공유경제 재경험 의사 (시군 차이)	118
표 4-18 공유경제 경험 서비스	120
표 4-19 공유경제 서비스 접근 방법	121
표 4-20 공유경제 서비스 만족도	121
표 4-21 공유경제 서비스 만족도	122
표 4-22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 (우선순위 선택 - 3순위 까지)	122
표 4-23 공유경제 서비스 추천 의향	123
표 4-24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역 발전 도움 정도	124
표 4-25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정도	125
표 4-26 공유경제 활성화 정도	125
표 4-27 공유경제 서비스의 향후 발전 전망	126
표 4-28 공유경제 발전 전망	126
표 4-29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요인	127
표 4-30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	129
표 4-31 경험 또는 참여하고 싶은 공유경제 서비스	131
표 4-32 공유경제 서비스 항목별 수요 및 공급 의도 분포	133
표 5-1 공유경제 SWOT 분석	143
표 5-2 공유경제 SWOT 분석을 통한 세부전략 도출	144
표 5-3 조사표 응답 총복 10개 시군 및 6개 공공기관 공유경제 정책사업 운영부서	161
표 5-4 지방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164
표 5-5 공유경제 성과지표(안)	166

그림 목차

그림 2-1	공유경제와 소유경제 비교(1)	17
그림 2-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31
그림 2-3	공유경제 조례 도입 추세	38
그림 2-4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진행절차	43
그림 2-5	충청북도 공유경제 사례 2-농기계임대사업	45
그림 2-6	충청북도 공유가능한 공공자원 보유 현황	48
그림 3-1	서울시 공유경제 추진체계	80
그림 3-2	서울시 공유경제 정책비전 체계	82
그림 3-3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84
그림 3-4	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87
그림 3-5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개요	90
그림 3-6	고양시 공유경제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93
그림 4-1	공유경제 경험 여부	113
그림 4-2	공유경제 참여 유형	113
그림 4-3	공유경제 경험 여부(충청북도)	114
그림 4-4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	117
그림 4-5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	123
그림 4-6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	127
그림 4-7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충청북도의 역할)	129
그림 4-8	공유경제 서비스 항목별 수요 및 공급 의도 분포	132
그림 5-1	공유자원 온라인 플랫폼(서울시, 청주시)	151
그림 5-2	충북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구축(안)	162
그림 5-3	공유경제 정책사업 평가	164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공유경제의 가치지향적 활동성 제고 및 정책화 의식 고조

- 공유경제(Sharing Economy)¹⁾는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과거의 공유적 경제활동들이 200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부상하게 된 개념임(Benkler, 2004)
 -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에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리믹스(Remix)'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레식 교수는 저작권 법률로 인해 창작의욕이 떨어진다며 '디지털 정보 공유 운동을 펼쳤고, 이는 이후 저작권 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경제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성영조, 2016)
- 이후 공유경제 활동은 도시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익숙해 있던 소비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저성장, 가처분소득 저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한층 더 활발해져오고 있음

1) 공유경제에 대해 위키백과(2024.5.2.)에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매일경제(2024. 5. 7 검색)에서는 물건을 기존 소유에서 공유개념으로 바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라고 정의함

- 공유경제는 이와 같은 가치지향적인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관심과 활용 필요성으로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초부터 개별부처 정책에 시범 반영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정부정책 전반에 대해 공유경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5년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에서임(강남기 외, 2023)

□ **지역단위의 활발한 공유경제 정책 개발과 함께 충북의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필요**

- 지역단위에서 공유경제는 지역 내 유휴 공간, 물적자원의 공유, 공유기업 형성 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정책 개발과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2년 서울시(이하 광역 본청 기준)가 처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광주시, 2014년 부산시 및 경기도, 2015년 대전시, 2017년 대구시, 인천시, 전북도, 2018년 전남도, 2021년 충청도가 공유경제 정책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음
- 충청북도 또한 2022년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음
-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충북 조례)에는 제5조에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충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충북의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이 후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을 위한 공유경제 논의 및 사례연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해 우선 공유경제의 본질적 논의를 하고, 공유경제 전반의 정책환경을 분석한 후 충북의 공유경제 정책 비전을 마련함

- 충북의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전략과제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먼저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한계점을 분석한 후 개선된 방향으로의 계획수립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함

□ 충북의 지역맞춤형 공유경제 핵심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별 정책과제 도출

- 충북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 도출을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 분석이 필요한데, 이 지역 여건 분석결과와 국·내외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의 핵심목표와 목표별 추진전략을 도출함
 - 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11개 정부 및 준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어 이들 공공기관의 시설 활용이나 교육연계 등이 가능할 것임
 - 특히 충북은 지역여건상 농업관련 산업이나 빈집 활용, 마을 HACCP 기업, 주차장이나 택시공유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충북도 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전략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충북의 공유자원 발굴이 필요한 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공유경제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도민 의식조사를 통해 공유자원화 가능한 대상들을 넓게 발굴할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사례 분석, 발굴된 충북도내 공유경제 대상사업 및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 및 전략과제와 하위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시

- 그 밖에 이상의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사항 즉,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담조직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함
- 또한 공유경제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안)을 발굴하여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로 나누어 살펴봄
- 먼저,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본청과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 특히 충북혁신도시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 만큼 이들의 활용도가 높을 예정임
- 시간적 범위는 분석은 가장 최근 자료로 진행하되, 법·제도적 검토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임
 - 연구의 시의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은 가장 최근 자료로 진행하되 법·제도적 검토의 경우 지자체 첫 조례 제정인 2012년(서울) 이후를 검토함
- 내용적 범위는 공유경제이론 등 충북의 여건 등 공유경제 관련 전반에 대해 살펴봄
 - 공유경제의 도입배경과 정의 등 이론 전반, 국·내외 사례, 충북의 공유경제 여건, 공유자원 등에 대해 분석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선행연구 등 문헌과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조사,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각종 문헌 및 참고자료 조사
 - 선행연구를 통해 공유경제 사회적, 기술적 도입배경이나 유형,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살펴봄
 - 특히 공유경제 정책 도입시의 사전 점검사항 등에 대해서도 살펴봄

○ 국·내외 사례 조사

- 공유경제의 개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기술을 상업화 하면서 시작된 만큼(김상민·임태경, 2019)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함
- 우리나라 지역단위 공유경제 정책은 2012년 서울, 2014년 부산과 경기도 등이 가장 빠르게 도입한 만큼 이들의 선행정책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함

○ 설문조사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도민 인식조사는 충북에 적합한 공유자원을 발굴하는데 가장 유효할 것이므로 도민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함

제 2 장

공유경제의 개요와 정책 현황

제1절 공유경제의 개요

제2절 공유경제의 정책 현황

제3절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제4절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 및
시사점

02 공유경제의 개요와 정책 현황

제1절 공유경제의 개요

1.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

1)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부상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이라기보다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과거의 공유적 경제활동들이 200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부상하게 된 개념임(Benkler, 2004)

- 한국의 과거 공유경제 형태로는 품앗이와 두레 등이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18)

-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공유경제

-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환경 측면으로도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으며(충남연구원, 2020),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친환경적 상품 소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늘고 있음(황영모, 2019)

- 전통적 사회에서는 일상화 되어 있던 이웃 간의 교류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단절되고 익명성은 커지게 되어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시민의 주도적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정경석, 2016)²⁾

- 또한 인구의 노령화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공유경제 확대의 배경이 됨(김민정, 2015)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공유경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는 잉여 및 유희재화의 발생, 저성장, 실업·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김상민, 임태경, 2019)
- 테일러리즘(Taylorism) 또는 포드니즘(Fordism)으로 대변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의 욕구는 생상품 소비·소유보다 공동소유와 협력적 소비, 다양한 기능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로 변화였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문화로서의 공유경제가 확산됨(정경석, 2016, 전지훈 외, 2020)

□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통한 새로운 거래구조의 등장

- 초고속 무선인터넷,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공유경제 촉진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음(전지훈 외, 2020)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달은 사람들이 개인 간 소통 및 참여를 통해 유희화된 자원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구조를 등장시켰음(권애라, 2013)
-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높고 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속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고(조용수, 2015), 개인 간 거래나 타인에 대한 신뢰와 평판 조회 등이 편리해지는 등 기술진보로 인하여 과거의 공유활동이 누릴 수 없었던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해짐(Benkler, 2004)

2) 공유경제 개념의 기원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려는 시도로 1991년에 시작되어 포콜라레(이탈리아어로 “난로”를 의미)운동으로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이 상실된 지역과 사람간에 굳게 닫힌 관계망을 치유하고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정경석, 2016: 10)

- 요약하면, 공유경제의 등장은 시장의 필요성과 공동체적 필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서, 경제적 위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공동체의 부활, 환경문제,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이 공유경제 촉발의 기반이 됨

2) 공유경제의 개념

(1) 정의

- 공유경제의 정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유희화된 자산을 개인만의 소유가 아닌 타인과 공유(교환-대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김상민, 임태경, 2019)
-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Lessig(2008)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비하여 “비가격적인 사회관계(social relations)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으로 보고, 사회관계가 공유경제 개념에서 핵심임을 강조함
- Scholz(2016)는 공유경제의 혜택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혜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 (Platform Cooperativism)’에 기반한다고 보았음
- Botsman(2010)은 생산된 상품의 공유활동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협력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로 보았음
- 이와 같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자본주의’로 정의될 수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 유사개념

- 공유경제의 개념은 위와 같은 기본적 개념의 형성 이후 그 발달과 함께 다양하게 확대 및 다변화하였으며 여러 유사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먼저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미국 연방공정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OECD,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효율성, 지속성,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유희자원을 공유하는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Vaughan & Hawksworth, 2014)

- 유럽에서는 공유경제를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의 의미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공유경제를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개방된 시장을 형성하는 협동적 플랫폼에 의해 활동하는 비즈니스 모형으로 정의함(European Commission, 2018)
-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는 공유경제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협동에 의해 조직화된 공유, 물물교환, 대여, 거래, 기증, 교환의 조직화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개인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 소유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며 환경오염의 영향도 감소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임

| 표 2-1 | 공유경제 유사 개념

개념	내용
접근경제 (Access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access)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했을 시장 행동, 즉 임대, 대출, 교환, 선물기증, 공유 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소비자 행동 시스템 • 일회성의 1차적 구매자/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 및 그룹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유, 교환, 거래 또는 대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모델을 모두 포괄
협동경제 (Collaborative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으로 스이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을 바로 이어주며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 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및 마켓 플레이스의 경제적 시스템을 포괄, 전통 기관을 건너뛰고 필요한 이와 갖고 있는 이른 바로 연결하여 미사용 자산의 가치를 개선
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사람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 시 바로 배달, 전달하는 시스템
피어경제 (Peer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간에 자산 교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 자산이나 서비스의 매매를 위한 공식 시장이 없는 분산형 경제 모델로서 온라인 P2P에 의존
긱경제 (Gig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계약직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잠재 직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구성
렌탈경제 (Rent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내고 빌리는 시스템

출처: Botsman and Rogers(2010); Pais and Provasi (2015); 박건철 외(2016); WEF(2017); 김시정(2018) 재인용

- 이 외에도 광의의 공유경제 중에서 특히 개인간 (P2P) 네트워크에 근거한 공유 경제에 초점을 맞춘 용어인 “P2P 경제(peer-to-peer economy)”, 일시적인 일(gig)을 통해 노동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용어인 “긱 경제(gig economy)”, 공유경제의 특성 중 하나인 재화나 서비스 공급의 즉시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용어인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일반대중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제모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인 “군중 경제(crowd economies)”와 같은 유사한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음 (WEF, 2017)

(3) 요소

- 공유경제가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Bostman & Rogers, 2010)
- 첫째, 공유경제는 적절한 규모(critical mass)의 재화를 가져야 함
 - 적절한 규모란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이는 이용자들에게 이용 목적과 사용 욕구에 부합한다는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며 지속가능한 거래가 가능하게 함
- 둘째, 활용되지 않고 유휴 상태인 여분의 자산(idling capacity)이 있어야 함
 - 공유경제의 자원으로써 여분의 자산은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을 의미하며,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로 자원 활용의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셋째, 공유자원(Belief in the Commons)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
 -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이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여럿이 공유하면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고 공동체가 발전하고 사용의 가치가 커진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공유지의 비극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넷째,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Trust between Strangers)가 있어야 함
 - 상업경제와는 달리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여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가 전제되어야 상호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함

| 표 2-2 | 공유경제의 필수요소

구분	주요내용
적정한 규모 (critical mass)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여분의 자산 (idling capacity)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공유재 믿음 (belief in the commos)	여럿이 공유하면 사용의 가치가 커진다는 공유재의 믿음
당사자 신뢰 (trust between stranger)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

출처: Botsman 외, 2010; 김형균 외, 2013; 황영모 외, 2015, 김상민, 임태경, 2019 재인용

2. 공유경제의 특징과 유형

1) 특징

- 공유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업경제와 달리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하면서 웹과 모바일 등의 혁신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Botsman, 2013)
- Botsman(2013)이 규정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특징은 ‘사회적이고(social), 지역적이며(local), 모바일(mobile)에 기반하는 생활경제 양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황영모, 2019)
- 더욱 자세한 공유경제의 특징은 전통적 방식의 소유경제와 공유경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음(아래 표 참조)
- 전통적인 소유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유를 기반으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의 사용가치 극대화와 공급자의 이윤 극대화를 주된 목표로 삼아 왔음
 - 소유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며 거래구조는 B2C(Business to Consumer) 구조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됨
 - 소비 방식은 개별적 소비로 과거의 거래경험이나 평판이 신뢰 확보의 주요 요소가 됨
 - 자원의 사용은 일방적이며 사용 횟수는 적고 사용 기간은 장기적인 특징이 있음

- 반면 공유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용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공급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 공유경제는 주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며 거래구조는 P2P(peer-to-peer) 방식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연계됨
 - 소비 방식은 협력적 소비로 인터넷 상의 평가나 평판이 신뢰 확보의 주요 요소가 됨
 - 자원의 사용은 순환적이며 사용 횟수는 많고 사용 기간은 단기적인 특징이 있음
- 공유경제에서 협력적 소비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모델로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경기 위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과잉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유가 아닌 공유를 선택하면서 효율적 소비문화를 원하는 능동적 소비자들이 등장하였음
-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소비자에게는 정보탐색 비용 절감 및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SNS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품 생산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함

| 그림 2-1 | 공유경제와 소유경제 비교(1)



출처: 김점산 외(2014), 전지훈 외(2020)

| 표 2-3 | 공유경제와 소유경제 비교(2)

구분	공유경제	소유경제
형태	이용	소유
목표	가치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목적	재화·용역의 이용권 이전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
거래체계	플랫폼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거래관계	주체 간 신뢰	주체 간 경쟁
거래구조	P2P 기본	B2C
거래주체	공급자와 소비자 연계	공급자와 소비자 분리
중개자	중개자≠공급자, 플랫폼	중개자=공급자, 전문기업
소비방식	협력적 소비	개별적 소비
신뢰확보	인터넷 평가·평판	과거 거래경험·평판
비용	저가	고가
자원사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자원의 일방적 사용
기간	단기, 사용횟수 많음	장기, 사용횟수 적음

출처: 황영모(2019)

- 공유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를 대여한다는 측면에서 렌탈 서비스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거래주체에 있어 공유경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기본으로 하지만 렌탈 서비스는 렌탈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임
 - 상품 가치의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자원의 잔존가치까지 거래가 지속가능 하지만 렌탈 서비스는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상품의 자원수명이 종료된다는 차이가 있음
 - 상품의 이용기간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시간 또는 일과 같이 짧은 기간인 반면 렌탈 서비스는 1일에서 수년까지 장기간이라는 차이가 있음
 - 유희시간의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자원의 유희시간을 최소화하지만 렌탈 서비스는 미 이용되는 유희시간이 많다는 차이가 있음

| 표 2-4 | 공유경제와 렌탈 서비스 비교

구분	공유경제	렌탈 서비스
거래주체	개인과 개인	렌탈기업과 개인
상품가치	자원 잔존가치까지 거래 지속 가능	대여기간 종료 후 자원수명 종료
이용기간	시간~일 단위	1일~수년간 장기간
유희시간	자원 유희시간 최소화	미 이용 유희시간 많음

출처: 황영모(2015)

2) 유형

- 공유경제의 유형화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논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용자 자원이나 서비스 제공 형태, 플랫폼 시장구조등에 따른 유형화를 들 수 있음

(1) 이용자별 유형

- 공유경제에서 거래되는 자원은 크게 유형적 비 소모자원, 유형적 소모자원, 무형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형적 비 소모자원은 공간, 교통, 물품 등 일반적인 재화로 이용을 통해 소모되지 않는 자원으로 상시적인 이용 목적을 가짐
 - 유형적 소모자원은 거래를 통해 상품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소비와 유사하지만 가치의 공유를 위한 소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무형적 자산은 지식, 경험, 시간 등 측정이 어려운 추상적 자원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임

| 표 2-5 |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화(1)

구분	유형자원		무형자원
	비소모자원	소모자원	
형태	소모가 안되는 자원	소모되는 자원	정보 및 서비스
특징	상시적 이용 목적	이용으로 가치창출	관계를 통한 가치창출
사례	공간, 교통, 물품 등	소셜 다이닝 등	지식, 경험, 시간 등

출처: 권애라(2013)

- 유형자원은 위와 같이 소모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 자원의 특성에 따라 공간, 교통, 물건으로 구분하기도 함
 - 공간공유는 유휴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표 사례로는 주거, 주차장, 숙박, 사무공간이 있음
 - 교통공유는 유휴상태에 있는 탈 것을 시간단위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카셰어링 (Car-Sharing)이 대표적임
 - 물건공유는 각종 물건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판매, 대여, 교환 등의 방식을 모두 포함하며, 대표 사례로는 공구, 의류, 도서가 있음
 - 무형자원이 경우 지식공유로 구분되며 무형적 자원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경험, 재능, 시간, 정보, 서비스 등의 경우를 의미함

| 표 2-6 | 공유경제와 렌탈 서비스 비교

공유자원 유형	세부분류	주요내용	대표 사례
유형자원	공간공유	유휴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주거, 주차장, 숙박, 사무공간
	교통공유	유휴상태에 있는 탈 것을 시간단위로 임대하는 사업	카셰어링 (car-sharing)
	물건공유	각종 물건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판매, 대여, 교환 등의 방식 모두 포함	공구, 의류, 도서
무형자원	지식공유	무형적 자원들을 공유하는 서비스	경험, 재능, 시간, 정보 및 서비스

출처: 경상남도(2020)

(2) 서비스 제공 형태별 유형

-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상품 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로 구분할 수 있음
 - 상품 서비스는 사용자가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와 실리적 이익을 강조하는 사용중심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도서 등을 공유하며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임

- 재분배 시장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해서 이용가치를 새롭게 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중고물품 거래, 경매시장, 물물교환 시장 등이 있음
- 협력적 커뮤니티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적 이용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며, 유무형 자원 전체를 포괄하며 공간공유, 구인구직, 경험 또는 지식의 공유 등이 이에 해당함

| 표 2-7 |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유형화

구분	거래방식	공유자원
상품 서비스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소비보다 상품의 이용을 통한 가치 및 실리적 이익에 집중하는 사용 중심의 방식 •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상품을 다른 주체와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도서 등
재분배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물교환, 현금이나 포인트로 물품 구매 • 이용되지 않는 재화나 중고품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 되는 형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 환경문제 최소화 등의 사회적 가치가 내포 	각종 의류, 무료 혹은 상품권 교환, 경매시장
협력적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건, 공간 등의 유형자산과 기술, 시간, 경험 등의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유형 • 유사한 생활방식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상호 작용이 되어 새로운 사회 연결망을 형성 	공간, 구인, 경험, 지식 등

출처: Bostman(2011), 황영모·신동훈(2016)

(3) 플랫폼 시장구조별 유형

- 플랫폼의 유형과 시장구조에 따른 유형화는 공유경제를 크게 이상적인 공유, 새로운 비즈니스, 리디자인(redesign) 비즈니스로 구분함(Petrini et al., 2017)
 - 먼저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직적 나눔 활동은 전통적 나눔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는 플랫폼 상의 거래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공유를 의미함
 - 이상적인 공유는 금융거래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공유로서,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둔 것을 의미함
 - 새로운 비즈니스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인한 혁신적인 모델로 P2P에 기반한 모델이 주로 활용됨

- 리디자인 비즈니스는 B2P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이 소유한 자원에 대해 개인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존 산업의 혁신적 모델을 의미함

| 표 2-8 | 플랫폼 시장구조에 따른 유형화

유형	특징
이상적인 공유	금융거래 없는 순수한 공유 모델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이 특징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인한 혁신적 모델로 P2P모델이 주로 활용됨
리디자인 비즈니스	B2P 모델 위주로 전통산업의 혁신적 모델
전통적 나눔	전통적 조직적 나눔 활동

출처: 김시정(2018)

(4) 기타

- 앞에서 살펴본 유형화 기준 외에도 공유경제 유형화 논의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외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유 방식에 의한 유형화

-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유방식에 따라 P2P(혹은 C2C)방식과 B2P(혹은 B2C)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Schor, 2014)
- P2P 방식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개인 간의 공유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IT 플랫폼의 존재가 필수적임
- B2B 방식은 특정 기업이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기존 렌탈 서비스나 리스 서비스와 비슷한 방식임

□ 산업 분야에 따른 유형화

- 공유경제 플랫폼이 운영되는 산업 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는 분류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대표적으로 PwC(2015)에서는 공유경제 시장에 존재하는 플랫폼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모빌리티 산업, 소매품 및 소비재 산업, 관광 및 호텔 산업, 연애, 멀티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재정 분야, 에너지 분야, 인적자원 분야로 구분함
- 유럽의회의 경우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숙박, 운송, 온라인 노동시장, 재정 등 4가지로 구분함

□ 공유의 목적에 따른 유형화

- 공유의 목적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을 유형화 한 Codagnone & Martens (2016)은 재화의 재활용, 유희자산 활용의 증진, 서비스와 노동의 교환 등 세 개 유형을 제시함
- 재화의 재활용(recirculation of goods)은 중고시장과 잉여제품 시장과 같은 상업적 시장교환 방식으로, 대부분 소규모이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함
- 유희자산 활용의 증진은 상업적, 비상업적 플랫폼이 포함되며 물리적 유희자산 보다는 노동요소에 주로 초점을 맞춤
- 서비스와 노동의 교환 유형은 비상업적 시간은행 활동과 상용 및 일반 노동시장이 포함됨

3. 공유경제 정책의 기대효과 및 사전 점검사항

1) 기대효과

□ 경제적 효율성 제고

- 공유경제는 기존 상업경제에서는 거래되지 않던 유희·미활용 자원을 거래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관계부처 합동, 2019)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사용자 간 원거리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새로운 거래 및 홍보 수단을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함(김상민·임태경, 2019)

□ 사회적 후생 증가

- 공유경제는 유휴·미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공유경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 증대와 안정화,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9)

□ 환경비용 저감

- 공유경제의 유형 중 교통공유의 경우 환경비용 저감의 효과가 기대됨
- 교통공유는 차량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대기오염가스 배출량과 교통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환경자원의 양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김상민·임태경, 2019)

2) 사전 점검사항

□ 기존 사업과의 마찰 우려

- 공유경제는 공급자에게도 새로운 거래 및 홍보 수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업 유형이 기존의 사업을 일부 대체함에 따라 기존 사업과의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표적으로 차량공유의 경우 기존공급자인 택시기사와의 갈등, 숙박공유의 경우 기존사업자인 호텔 및 민박 등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공유경제는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의 쇠퇴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거래 안전성 확보

- 비대면 거래의 경우 이용자 안전성과 거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노출되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김상민·임태경, 2019)

- 역선택의 문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해 역방향으로 선택이 이뤄지고 실망스러운 거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과대 광고로 인해 기존 홍보 내용보다 저품질일 경우에 해당함
 - 도덕적 해이는 공유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사용자들의 행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수요자가 유희자산을 훼손 및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에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용자 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장치 마련이 필요함(박건철, 2016)

□ 규제 체계의 정비

-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거래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경제활동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기술의 혁신에 동반하는 규제적 혁신 등이 요구됨(황영모, 2019)

제2절 공유경제의 정책 현황

1.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 중앙정부 공유경제 정책의 등장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논의 및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2010년대 초중반 국토교통부의 쉐어주택(2013년) 및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유공간(무한상상실)(2014년) 및 R&D 장비공유 사업(2016년) 등 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함
 - 이러한 사업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개별부처에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된 시범사업 성격으로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전지훈 외, 2020)
 - 2015년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에서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중앙정부 정책 차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함(강남기 외, 2023, p. 29)
 - 2016년 이후 공유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함

□ 중앙정부 공유경제 정책의 전개

- 2016년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공유경제 추진 정책 등장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는 2016년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함
 -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공유경제 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증개거래'의 제도권 내 진입, 자율규제 시스템 활용,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최소화 등의 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16. 2)
 - 또한, 국내 공유경제 우선 추진 분야로서 숙박, 교통, 금융을 제시하고 기타 공간·재능 분야의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하는 내역을 제시함

- 정부는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성장가능성, 시장의 요구,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박, 교통, 금융 분야를 공유경제 추진의 우선분야로 선정함
- 숙박분야의 경우 공유 민박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대도시 및 관광지에 대해 연간 120일 내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공유경제 방향을 제시함
 - 차량공유분야는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무인대여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시범도시를 선정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금융분야는 크라우드 펀딩을 공유경제 활성화 대상으로 제안하여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신설을 통해 증권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이 밖에도 정부는 공간(매장, 회의실, 주차장 등) 및 재능(지식·경험 등 공유)를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 계획을 밝힘
 - 아래 [표 2-9]에 공유경제 추진 우선 분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 표 2-9 | 공유경제추진 우선분야

분야	내용
숙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대상: 공유 민박업 • 허용지역: 대도시 및 관광지(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허용) • 연간 영업가능일수: 120일 • 이용자: 내·외국인 • 대상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 도입 후 전국 확대 • 자율규제 실시: 평판조회시스템 등
차량공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대상: 모바일 플랫폼 기반 무인대여 거래 위주(ex: 쏘카, 그린카) • 이용자: 운전면허소지자 • 규제개선 필요: 사업자 면허정보 조회(제공범위 확대), 예약소(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공영주차장 제공 등) • 차량공유 시범도시 지정
금융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대상: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펀딩 플랫폼 기반) •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도입 중) • 제도개선: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2016년부터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을 신설하여 증권형 도입(투자금액 제한)

출처: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관계부처 합동, 2017)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 등 서비스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17)
 - 기획재정부는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와 관련된 신성장·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 정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유형 서비스 발굴 및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천명함
 - 또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희 국·공유 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계획을 제시함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2019년 정부는 2016년에 이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1) 분야별 지원책뿐만 아니라 2)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이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혁신적 공유 플랫폼의 등장 촉진 및 활성화와 ②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 달성이라는 하위 목표를 제시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 및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제안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분야로는 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분야를 포함함
 -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세체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시함
- (주요추진 과제 - 숙박 분야) ·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하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 세계적으로 숙박공유가 확산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에서 주택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방안 추진하고 지역별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숙박 공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 추진

- 투숙객 안전 보장을 위한 서비스·안전·기준 설정 및 범죄자의 도시민박업 등록 제한 검토(관계부처합동, 2019)
 - 새롭게 도입되는 숙박공유업과 기존 숙박업의 상생방안 모색 차원에서 기존 업계 지원책 및 신규업종의 규제 완화와 공정경쟁 강화, 플랫폼 기업의 관리 책임 제고 방안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주요 추진과제 - 교통 분야) 기존 교통수단에 새로운 유형(O2O: online to offline)의 교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마련 추진
-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를 자율화하고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일시상주기관 확대 추진
 - 무인화 등의 환경변화 고려하여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및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 전세·노선버스 공유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한정면허 제도 개선 등을 추진
 -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 발전 및 산업종사자 보호 원칙을 전제로 기존업계와 상생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승차공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공간 분야)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 및 유희 공공자원 개방 움직임에 편승하여 주차장 및 공공자원 공유 확대·활성화를 추진하고 분쟁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차공간 공유 촉진
 -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주거공유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제도 추진 예정(법무부)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약·결재 시스템 구축 추진
 -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의 유희공간을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로 변경 추진
 - 지자체 소유의 유희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교육청 보유 미사용 폐교에 대한 활용 모색 추진

-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교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공유모델을 도입하고 참여학교에 안전관리비용 제공 예정
 -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기타 분야) 자금, 지식 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유확산을 촉진
- 자금공유 차원에서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P2P 업체, 연체 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 및 대출 돌려막기 등의 부실 전가 예방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K-MOOC)에 우수 전문인력 참여 유도, 콘텐츠 질적 강화를 위한 유료 서비스, 이수 결과에 대한 학점 인정을 확대 예정
-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세체계 정비, 공급자 및 소비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과 같은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 공유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과세기준 설정 및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를 위한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 마련
 - 공유경제 기업과 관련된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부 보유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전문센터·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분석기반 구축 추진

| 그림 2-2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출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9)

□ 공유경제 기본법안

-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본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김수민 의원의 대표발의³⁾를 통해 제정 시도가 존재하였으나 이후 폭 넓은 의견수렴과정 및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김수민 의원은 공유가 가능한 유희 자원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하여 타인에 대여하는 공유 경제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안을 제시함(김민창, 2022)
 - 발의된 법안은 공유경제의 법적 정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유경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승차공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음
- 2020년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태영호 의원에 의해 「공유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02377호) 대표발의 되었으나 소관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음
 - 태영호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법안의 목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의 측면에서 김수민 의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공유경제기본법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나 2024년 4월 현재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3) 「공유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제2012610호(2018. 3. 22)

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 (공유경제 도입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이래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였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한 이래 ‘공유도시 서울’의 슬로건을 내걸고 공유경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컨퍼런스, 전시회, BI 및 슬로건 시민공모,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해 왔음(서울시, 2012)
 - 부산광역시는 2014년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공유경제 부산’이라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공유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14년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 적극적 나눔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전주시는 민간단체와 시가 포럼 등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도입 방향 등에 대해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5년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경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14년 4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예술체험과 같은 사업에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공유경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왔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정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송영현 외, 2019)

표 2-10 | 공유경제 조례 도입 현황(연도 및 지자체별)

연도	도입 지자체	건수
2012	서울본청	1
2013	광주본청	1
2014	부산본청, 경기본청, 경기성남, 서울강북, 서울광진, 서울도봉, 서울동대문,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용산, 서울종로, 서울강서,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노원, 서울동작, 서울마포, 서울서대문, 서울영등포, 서울은평, 서울강동, 서울관악, 부산해운대	23
2015	대전본청, 전북전주, 경남거창, 서울양천, 광주동구, 광주광산, 광주북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9
2016	경기수원, 경기구리, 경기시흥, 전북완주, 전남여수, 경남양산, 광주남구, 광주서구, 부산사상, 부산사하, 부산서, 부산영도, 부산중구, 부산기장	14
2017	인천본청, 대구본청, 전북본청, 서울중랑, 서울송파, 부산동래, 충남아산	7
2018	경기광명, 경기안양, 경기평택, 충북충주 , 전남본청, 서울중구	6
2019	경기화성, 충북진천 , 경기고양, 서울서초, 울산중구, 부산동구	6
2020	경기용인, 경기하남, 인천서구, 경기안산, 울산본청	5
2021	전남순천, 충남공주, 경기부천, 충남서산, 충남당진, 경기김포, 강원원주, 충남본청, 경기광명, 대전중구, 강원태백	11
2022	충남천안, 충북본청 , 광주남구, 경기파주	4
2023	전남나주, 전남목포, 전남고흥, 전북군산, 전남해남, 인천남동, 울산중구, 대구남구	9
2024	인천부평, 인천계양, 강원강릉, 강원속초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를 저자가 정리

- (공유경제 조례 도입)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정착 및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현재 1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조례를 도입하고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검색한 결과 121개 조례가 검색되었음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수의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100개에 해당함
 - 2024년 4월까지 12개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7, 도: 5)에서 17개의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87개 자치단체(33개의 시, 6개의 군, 48개 자치구)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하고 있음
 - 위의 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최초로 도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공유경제 도입 현황임
- (조례제정 현황)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지자체는 기본 또는 활성화 조례 외에도 별도의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2014년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도입함(김상민·임태경, 2019)
 -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도입한 뒤 2018년에는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를 도입함
 - 성남시는 2014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도입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분야와 관련된 공유센터를 설치함
 - 광주광역시 동구는 2015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한 뒤 2019년 물품 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3년에는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를 추가로 제정함
 -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촉진 조례’를 도입하고 2019년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대구광역시는 2017년 ‘대구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를 설정한 이후 2023년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도입한 이후 2020년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고양특례시는 2019년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1년 추가로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도입하였음
 - 구리시는 2019년 ‘구리시 공유촉진 조례’를 확정하는데 이어 2020년에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였음
 - 안산시는 2019년 ‘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제정하였으나 이후 2020년에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울산광역시는 2020년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2021년에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추가 도입함
- 용인특례시는 2020년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1년에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입하였음
- 광명시는 2021년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도입한 이래 2023년 광명시 ‘공유부역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 제정함
- 부천시는 2021년 초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입한 뒤 하반기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본격 도입함
- 광주광역시 남구는 2021년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도입하고 2023년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

【표 2-11】 공유경제 관련 조례의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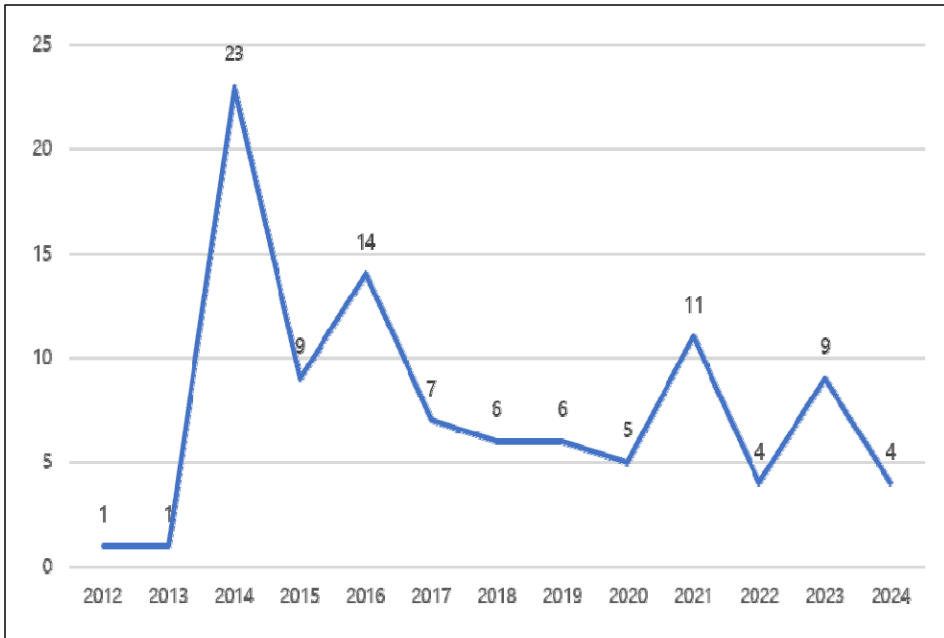
자치단체	도입 지자체 수				조례 수
	본청	시	군	구	
서울특별시	1	.	.	24	27
부산광역시	1	.	.	11	12
인천광역시	1	.	.	4	4
대구광역시	1	.	.	1	1
울산광역시	1	.	.	1	2
광주광역시	1	.	.	5	11
대전광역시	1	.	.	1	1
세종특별자치시	0
강원특별자치도	.	4	.	.	4
경기도	1	15	.	.	23
충청북도	1	1	1	.	2
충청남도	1	6	.	.	6
전북특별자치도	1	2	.	1	3
전라남도	1	4	2	.	6
경상북도	0
경상남도	.	1	1	.	2
제주특별자치도	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를 저자가 정리

- (지자체 유형별 조례 도입현황) 공유경제 조례는 주로 특별시·광역시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공유경제 조례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주로 제정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현상은 특별시·광역시에서 공유경제 자원 및 사업이 도 및 예하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군의 경우 충청북도 진천군과 전라남도 고흥군, 해남군, 경상남도 거창군의 소수 자치단체에서만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됨
- (조례제정 추세) 공유경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 최초로 도입되어 2014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후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과 2023년 큰 폭 증가하였음
 -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 공유경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 이듬해 광주광역시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14년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 및 부산광역시 등에서 조례를 도입하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5년에는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이 이어졌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이 발표된 2016년에는 광주와 부산 외에 경기 지역 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여수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공유경제 도입이 급증하였음
 - 2017년과 2018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꾸준히 이어졌고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가 2017년, 전라남도가 2018년에 조례를 도입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충주시가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최초로 도입함
 - 2019년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소속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도입하였고 2020년까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유경제 조례가 제정됨

-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 공유서울 3기를 발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붐이 일면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조례 도입이 급증하였음
- 2022년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조례 제정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그림 2-3| 공유경제 조례 도입 추세



출처: 저자작성

제3절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1. 시군별 현황

-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가 2018년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9년 진천군이 ‘공유 촉진 조례’를 광역차원에서는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기본 및 실행 계획이나 전담조직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임
 - 2018년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한 충주시의 경우 조례에서 목적, 촉진정책, 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 지정, 재정지원, 공유촉진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 및 실행 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내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진천군의 ‘공유 촉진 조례’의 경우 충주시와 유사한 조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022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시와 진천군 사례와 유사하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제15조)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충주시와 진천군의 조례 담당부서나 타부서에서 공유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 등 관련 정책의 추진 및 집행 체계가 확인되지 않음
 - 진천군의 경우 중부 3개군(음성, 괴산, 증평)과 공유도시 차원에서 상품권 통합, 농기계 임대 공유, 휴양림 등의 기반시설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공유경제로 보기에는 공유경제 개념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충청북도의 경우 공유경제 관련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상공인 정책과에서 공동체정책 및 사회적경제정책 차원에서 공유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정착·추진하기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아직 자리잡지 않은 상황임

-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2021-2040)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외부환경(국가 전략 투자 분야 선정 등) 및 행정수요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확산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2021-2040)에서는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위해 모바일 on-demand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 및 국가 3대 전략 투자 분야의 하나로서 공유경제를 중요한 외부여건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충청북도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공유경제는 주요한 현안과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충청북도 공유사업 현황

1) 공유경제 관련 주요 사업현황

- 2024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공간공유, 재능공유, 물건공유와 관련된 공유경제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시설 및 공간공유의 경우 미래여성플라자, 창업공간 및 복합문화센터, 육아 공간, 회의실, 공공청사시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재능공유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지역주민에 대한 고교생 및 대학(원)생 재능기부, 도내 유휴인력 기업 지원, 도시 유휴인력 영농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중임
 -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산과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여 유휴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아래 [표 2-12]에 충청북도 공공부분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 사례가 정리되어 있음

| 표 2-12 | 충청북도 주요 공유경제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공간 공유	미래여성플라자 공유시설 대관	대강당 및 문화이벤트홀, 영상미디어실 등 7개소 공간 제공	양성평등 가족정책관
	공동육아나눔터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청소년 창업공간 / 복합문화센터 설치	공유공간, 창업공간, 동아리방 및 사무공간 조성	
	열린 학사 운영	서,동서울관 시설 개방(열린숙실 7실, 열린 회의실 4실) / 온라인 사용승인 신청	충북학사
	청사시설 개방 운영	북부권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시설 무료 개방	북부출장소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 공장 구축	충북대학교 전문랩에서 구체화 된 상품 등을 다수 기업이 동시에 공장 활용하여 양산	경제기업과
재능 공유	충북 인재 멘토링	1:1 온오프라인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학업 동기부여 및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	충북인재평생 교육진흥원
	충북인재 재능나눔	고교생 및 대학(원)생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 재능 공유	
	도내 고교생 멘토링 지원사업 협업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사업 연계 및 공동 추진	충북학사
	중량 디딤돌 멘토링 사업	재능기부를 통한 중량구 교육 나눔 문화사업에 동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유휴인력 수요(퇴직, 재취업 등) 반영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일자리정책과
	충북형 도시농부육성	도시 유휴인력 활용으로 영농인력 부족 해소	농업정책과
물품장비 공유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공유)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 확산 촉진	스마트농산과

출처: 충청북도 내부자료

2) 충청북도 공공부문 공유경제 사례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

- 충청북도는 2023년부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유휴인력을 농업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해주는 사업을 시작함
 - 농촌 고령화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농촌 지역에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농촌 임금이 상승하고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도시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인력을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연결해주는 사업임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자 모집

- 참여 대상** 만 20~75세 비농업인
- 근로 기간** 2023. 4. ~ 12.
- 활동 내용** 충청북도내 영농 농가 일손 지원(농작물 파종, 수확, 정식 등)
- 지원 내용** 1일 4시간 기준 인건비 6만원 외 교통비(최대 25,000원), 상해보험 가입, 영농작업반장 수당(5,000원) 등

충북형 도시농부 구인농가 모집

- 참여 대상** 도내에 주소를 두어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농업법인
- 지원 내용** 도시농부 4시간 인력 및 도시농부 인건비 중 24,000원 지원 [단 친인척이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으로 참여시 지원 제외]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출처: 충청북도 공식 블로그

- 충청북도는 이미 2016년부터 충청북도 생산적일손봉사 사업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한 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도시농부사업은 기존사업을 보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시농부 사업은 2016년에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실시한 생산적일손봉사 사업과 유사
 - 그러나, 생산적일손봉사 사업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별도 교육 없이 단순 농작업에 투입한 것에 반해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농부 육성 전문교육을 거쳐 농촌에 취업하는 근로개념으로 인건비와 이동 및 교육에 대한 실비 등이 지급됨

|그림 2-4|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진행절차



출처: 충청북도 공식 블로그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으로 도시농부중개센터가 도시의 유희인력과 인력 수요처(농가)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유경제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도시농부 참여대상은 만20세부터 75세까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희인력)
 - 고용농가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이며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및 소규모 경작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
 - 도시농부는 근무를 희망하는 시군 및 도시농부중개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수요농가는 주소지 시군 및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해 중개·알선을 받을 수 있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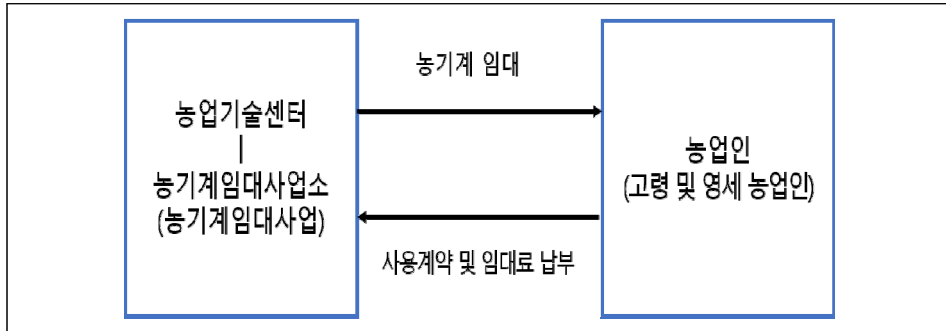
- 충청북도에서는 1999년 음성군을 시작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와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군에서 고가의 농기계 등을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통해 고령 및 영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임
 - 1999년 음성군을 시작으로 청주시(2000년), 영동군(2001년), 청원군(2006년), 옥천군(2007년)등으로 확대⁴⁾되어 2004년 1월 현재 충청북도 내 11개 자치단체(3개 시, 8개 군) 모두에 총 45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등록 및 임대가능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1인 최대 2일간 임대가능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연장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⁵⁾

4) NewsWire (2008. 6. 25), '충북도, 농기계 임대사업 전시군 확대설치,'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43546>, 접속일자: 2024년 5월 8일

5)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http://aml.cheongju.go.kr/sub02.jsp>, 접속일자: 2024년 5월 8일

- 충청북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수 백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서 공유경제 모델로 볼 수 있음

| 그림 2-5 | 충청북도 공유경제 사례 2-농기계임대사업



출처: 함창모, 2018, p. 66

3. 충청북도 공유자원 현황

-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충청북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유가능 공공 자원 현황을 조사함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과 공유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의 경우 ‘공유누리⁶⁾’ 라는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알리오 플러스⁷⁾’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공유 가능한 시설 및 물품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를 포함 9개 광역도의 공유가능한 공공자원 현황을 8개 항목(문화숙박, 회의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6) 공유누리: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

7) 알리오 플러스: <https://www.alioplus.go.kr/>

【표 2-13】 공유자원 지역별(도) 현황

자치단체	문화 숙박	회의실	강의실 강당	체육 시설	주차장	물품	연구 실험장비	교육 강좌
경기도	177	105	111	107	463	172	0	12
강원특별자치도	436	279	143	497	530	353	0	109
충청북도	120	219	83	147	294	215	118	93
충청남도	836	297	158	824	727	1,063	0	929
전북특별자치도	318	293	163	204	451	256	131	273
전라남도	423	296	133	286	556	477	2	193
경상북도	169	357	185	284	696	234	120	31
경상남도	714	326	182	660	768	1,832	37	1,200
제주특별자치도	132	43	35	58	125	546	77	96

출처: 공유누리, 알리오 플러스

-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충청북도의 공유 가능한 공공 자원의 풀(pool)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⁸⁾
 - 광역자치단체(도)에서 경상남도가 공유가능한 공공자원의 수 5,79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11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충청북도에서 공유가능한 공공자원은 1,289개로 확인되어 9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충청북도의 경우 연구 및 실험장비의 경우 공유가능한 공공자원의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강의실 및 강당 시설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및 공유자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 적극적으로 공유 가능한 공공자원을 파악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공유자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단,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공유가능한 공공자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고하여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공유가능한 공유자원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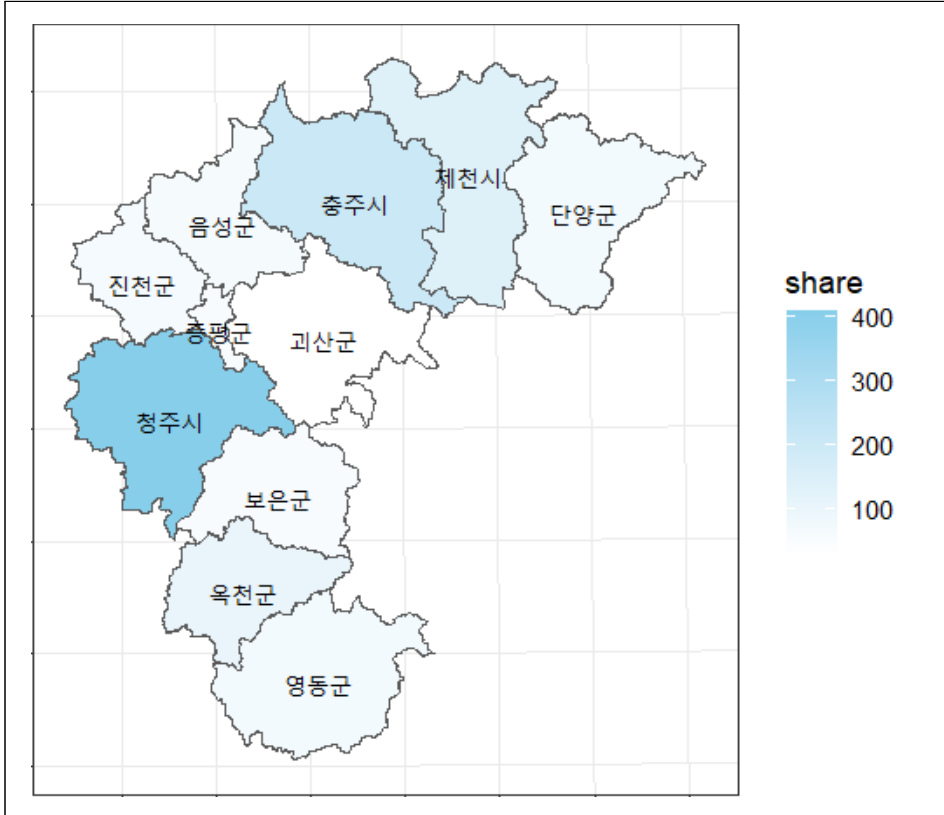
- 다음으로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의 공유가능한 공공자원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시와 군사이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표 2-14]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409개로 공유자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괴산군이 31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에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군보다 공유가능한 공공자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많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청주시와 충주시에 공유가능한 연구실험장비 자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같은 시 유형의 자치단체라도 지역에 따라 보유한 공유자원의 유형에 차이가 존재함

| 표 2-14 | 공유자원의 지역별(충청북도 내) 현황

자치단체	문화 숙박	회의실	강의실 강당	체육 시설	주차장	물품	연구 실험장비	교육 강좌	합계
청주시	47	41	42	50	75	98	54	2	409
충주시	9	9	4	21	19	44	63	38	207
제천시	17	33	9	7	37	32	0	7	142
보은군	4	23	1	18	3	9	1	0	59
옥천군	8	19	4	3	69	1	0	3	107
영동군	9	31	8	9	15	0	0	0	72
증평군	1	3	3	5	8	6	0	33	59
진천군	4	10	2	14	18	10	0	9	67
괴산군	1	15	2	2	11	0	0	0	31
음성군	9	23	6	10	13	3	0	0	64
단양군	11	12	2	8	26	12	0	1	72

출처: 공유누리, 알리오 플러스

| 그림 2-6 | 충청북도 공유가능한 공공자원 보유 현황



출처: 저자작성

제4절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정책) 세계 및 국내 민간영역에서의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경제의 개념과 방식을 정부에서도 공공의 영역에 도입하고자 시도하여 왔음
 - 2016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공유경제 계획 및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우선 추진 분야로 숙박, 교통, 금융 분야 등을 설정함
 - 이후 2017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 정부는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 지원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제시함
-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마련 및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이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나 제도 개선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다시 말해, 정부가 공유경제의 우선분야로 숙박, 교통, 금융 분야를 제시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이후 일부 규제개선(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의한 여객 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경제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일부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 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공유경제 개념과 비전을 시정에 도입하여 조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왔음
 -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와 성남시와 전주시 같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이후 10여년 간 공유경제 관련 제도도입(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유경제 도입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등 의도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행된 경향이 있음(김상민·임태경, 2019)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예: 서울시) 공공부문과 기업, 시민단체와 시민 등의 협력을 통한 공유경제 활동 및 이에 확산을 추진함
- 또한 민간 기업에 기반한 공유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통해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추진 방향 및 유형에 편차가 확인됨
- 전주시, 충주시, 청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광역 자치단체에 앞서 도입하는 경우가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존재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공유경제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로 공유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 도입되던 것이 농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의 어려움,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있어 책임소재 여부, 공유경제 사업 참여자간 신뢰형성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해 공유경제가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 3 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사례 분석

제1절 해외의 공유경제 사례

제2절 국내의 공유경제 사례

제3절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03 국내·외 공유경제의 사례 분석

제1절 해외의 공유경제 사례

1. 일본 사례

1) 육아양육 지원

- (개요) 공유경제에 의한 육아양육지원에는 가사, 육아 같은 스킬케어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스킬과 시간을 서로 공유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사회에서 유연하게 육아세대의 부담을 경감함
 - 풀타임 노동이 곤란한 육아세대에게 유연한 노동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제공하는 크라우드소싱을 도입함

- (공유경제 수법 활용의 장점) 니즈시즈의 개방화
 - 매칭의 효율화: 플랫폼 활용에 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스킬, 시간의 여유가 있는 이를 매칭하여 제공(소정의 사례금 발생)

- (사례) 사이타마 시 미소노 지구
 - 지역 공조의 창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취업률의 향상 및 육아 세어 활용에 의한 보육세대의 개인간 공조로 과제해결 촉진
 - 공유경제의 주체: 사이타마 시, 일반사단법인 미소노 타운매니지먼트, 주식회사 AsMama
 - 도입 전 상황
 - 미소노 지구는 도심과 직결되는 사이타마 고속철도선 '우라와미소노 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 인구는 약 1만3천(2019년 시점), 매년 30~40대의 육아세대층을 중심으로 1000~2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 도시부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입세대 중 상당수는 주변에 의존할 지인이 적은 상황으로,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도 미성숙된 상황
- 앙케이트에 의하면 주 5일 모두 보육원에 맡기지는 않고, 주 3일의 파트타임 근무 혹은 장보기, 미용실 이용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

○ 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

- ICT 온라인 서비스 ‘육아 셰어(子育てシェア)’의 활용에 의해 안심 안전과 저부담을 양립한 보육공조 체제의 실현
- 공조 서포터 ‘마마서포터(ママサポ)’의 발굴 육성, 연수 과정에서의 ICT활용, e-러닝과 온라인 영상통화 시스템 활용으로 각지에서 교류회 개최 및 탁아에 관한 노하우의 적시 정보공유 실현
- 정기적으로 양육부모의 매칭 및 교류이벤트 Mama’s meet up를 개최하여 주민간의 교류촉진 및 자녀 탁아 체험기회의 창출
- 또한, 지역내의 홍보물 배부 및 어플리케이션과 SNS활용 정보 발신 강화

○ 도입 후 상황: 육아셰어 활용에 의한 동 지역 내의 탁아이용 건수 100건

- 교류이벤트 Mama’s meet up 매월 4회 개최
- 지역 내 등록 회원 수 목표 150명 중 첫 해 120명 달성 등

○ 도입의 포인트

- 서비스 인지도 향상 작업
 - 정기적으로 홍보물 작성 후, AsMama 미소노 타운매니지먼트협회, 시 홈페이지, 공보지, SNS에 주지
 - 공공시설, 민간시설, 이벤트 등에 홍보물 배부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모집 작업
 - 사업자(AsMama)에 의한 사전 설명회 개최
 - 지역 보육지원센터, 유치원 및 보육원, 방과후 교실, 카페 등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홍보물 배부 등의 협조와 연계를 의뢰

-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한 이용자를 위한 작업
 - 설명회, 교류회 개최 중에 ‘보육셰어’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지원을 실시
 - 공조 서포터 ‘마마서포터’가 지역 내 서포터 활동을 실시
- 민간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
 - 주식회사 AsMama의 공조 플랫폼 ‘보육셰어’의 등록료와 수수료 일절 무료,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
- 서비스 안전, 안심 확보 작업
 - ‘보육셰어’ 문의를 사업자 사이트에 설치
 - ‘보육셰어’는 전지원자에게 손해배상보험을 적용
 - 셰어링이코노미 협회의 인증 마크를 취득한 사업자와 연계
- 법률,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이 사례에는 존재하지 않음
-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보완, 연계 내용
 - 미소노타운매니지먼트협회사업으로서 지역서비스부회, 보육공조분과회에서 진척관리
- 광역연계를 위한 조직
 - 서비스이용지원, 공조촉진을 담당하는 ‘마마서포터’는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참가 가능

○ 해결과제

- Mama’s meet up을 통한 주민교류에서 개개인의 자발적 공조 양성,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구성과 공조서포터 ‘마마서포터’의 발굴육성 강화의 지속적인 실시

2) 커뮤니티

□ (개요) 공유경제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사, 육아 등의 스킬셰어의 활용

- 기존 커뮤니티(마을 회의, 반상회, 농촌진흥회 등)조직의 약체화와 멤버의 고령화에 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공조의 조직과 특정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

- 지역 특화형의 SNS의 활용에 의해 주민간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간 세어에 의한 커뮤니티 활동 거점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례가 다수(기업등의 유휴 스페이스를 구민활동의 장으로 활용)

□ (공유경제 수법 활용의 장점)

- 종래의 자치회, 정내회(마을회의)의 가입률이 저하되어 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감소하는 가운데, 플랫폼의 활용에 의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에 저항감이 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결고리의 마련에 기여
- 주민간의 매칭과 함께 연동하여 플랫폼에 지역 내의 기업과 단체등이 참가하여 서비스와 자원 개방을 통해 커뮤니티의 확장에 기여

□ (사례) 이바라키 미토 시

- 미토 시 내의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지역사회 실현'을 향해, 이웃SNS를 이용하여 기존 주민과 전입자의 커뮤니티 참가를 용이화
- 도입 전 상황
 - 도시부에서 전근자가 많고, 일정기간 한정으로 거주하기에 지역커뮤니티 참가가 힘들어서 정보 취득이 곤란하고 커뮤니티로부터의 고립이 문제화
 - 지역자치 유지, 전근자의 커뮤니티 참가를 목적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가 불가결
- 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
 - SNS어플리케이션인 '마치마치(마을마을)' 를 이용하여 전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신
 - 지역의 정보를 가시화 하여 전입자가 지역 커뮤니티에 참가하기 쉬운 토대를 구축
 - '마치마치' 상에서는 전입자가 질문하면 기존 주민이 회답하는 형식을 취함
 - 태풍으로 인한 강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사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활발한 정보교환발생

○ 도입 후 상황

- 미토 시와 ‘마치마치’의 협정 체결 후 미토 시내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여, 2년만에 25배
- 전입자와 기존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방법 및 방재 역량의 강화 및 전근자의 정주 촉진 유도 효과 증가

○ 도입의 포인트

- 서비스 인지도 향상 작업
 - 이용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기 위해 구의 사이트, Facebook, X(Twitter) 등과도 연동함과 동시에 시설, 출장소,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유인물을 설치, 배부 실시
 - 전입자 신고서에도 안내자료 소개
 - 지역의 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해 시의 직원과 지역단체가 적극적으로 ‘마치마치’ 이용자에게 회답을 실시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모집 작업
 - 도입 당시의 홍보강화, 마을회관, 자치회, 상가회, NPO 등의 지역조직을 이용한 고지 실시
 - ‘마치마치’의 스태프가 지역의 조직, 단체 고지, 영업을 행하여 성공적인 주지 효과
-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를 위한 작업
 - 지자체와 ‘마치마치’의 공동 주최에 의한 지역 내 점포를 이용한 주민교류회를 실시하여,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상가의 지원을 행함
- 서비스 안전, 안심 확보 작업: 사업자인 ‘마치마치’ 스태프에 의한 목시, 시스템에 의한 감시. 협정 체결 후 문제 발생이 거의 없음
-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보완, 연계 내용: 지자체가 운영하는 Facebook, X(Twitter), 구청게시판, 종이홍보물 등을 ‘마치마치’에서 축약하여 정보 발신 실시
- 광역연대를 위한 체계: 전국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자체를 넘은 확대적 연대가 가능

○ 해결 과제

- 매년 태풍(집중 호우)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해 시의 지자체와 주민에 의한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강화해야 할 필요
- 미토 시의 추가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 '마치마치'의 보급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필요

3) 지역의 발 확보

□ (개요) 공유경제에 의한 지역의 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동'의 세어를 통한 이동수단의 확보가 있음

- 합승 등을 통해 공공교통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동수단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
- 2차 교통수단⁹⁾이 적은 지역의 관광객의 이동과 재해 직후의 일시적인 이동 곤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공유경제를 통한 대응 사례가 있음
 - 지역의 발 확보 예: 비용절감형 합승, 주문형의 셔틀버스 매칭 서비스, 합승 택시에 주문형 시스템을 부여
 - 지역의 발 확보+방재: 커뮤니티 카 셰어링(미야기 현 이시마키 시)
 - 지역의 발 확보+관광: 렌터카 형 카 셰어링(미야기 계센누마 시), 자전거 공유

□ (공유경제 수법 활용의 장점):

- 니즈 시즈(Needs Seeds)의 개방화
 - 2차 교통의 보완에 공유경제를 사용, 지역 내의 유희자원(자동차, 자전거 등)을 역외 관광객들의 이동수요에 개방하여, 관광의 편리성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립이 기대(주민의 이동 니즈 파악을 위한 양케이트르 병존)
- 매칭의 효율화
 - 정시 운행의 노선 등에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던 이동의 수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여, 공공교통 불편지역에서의 거주 지속가능성을 높임

9) 철도나 공항등의 교통거점에서 관광 등의 목적지를 잇는 교통 연결(셔틀버스, 노선버스, 전철 등)을 2차교통이라 칭함

□ (법률 및 규제에 관한 대응) 합승의 경우 ‘도로운송법’에 의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지역의 니즈 뿐만이 아니라 법규제를 고려하며 운행형태의 서비스 제공체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도로운송법 상, 버스 및 택시 사업 성립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지역의 운송수단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 후, 시정촌과 NPO법인 등이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이 가능
 - 일본 도로운송법 제78조의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조항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으로 운송의 용도로 제공해서는 안 됨
 - ① 재해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② 시정촌,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및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 의해 정해진 자가 공공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아 지역 혹은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의 용도를 제공하는 경우

□ (사례) 홋카이도 테시오 군 테시오 정

- 코스트셰어 형의 합승 매칭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 상호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 주민의 이동수단을 확보
- 도입 전 상황
 - 1955년 인구는 약 1만이었으나 60년간 1/3로 감소하는 등 소자고령화가 심화
 - 종합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약 70km 가량 떨어진 왓카나이稚内 시에 소재 하기에 자동차로 편도 1시간 거리
 - 왓카나이 시까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버스, 철도 환승으로 최대 3시간을 요하기에 사실상 만나질 왕복이 불가능
 - 운전이 불가능한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의 이동수단 확보가 중요과제로 떠오름
- 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
 - 국가 보조금에 의한 노선증설 및 존속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 이 인식을 바탕으로 ‘테시오-왓카나이’ 간 정기 이동 자동차의 공석을 활용한 합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착상

- 동승자가 이동에 필요한 비용(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합승 매칭 서비스를 도입

○ 도입 후 상황

- ‘테시오-왓카나이’ 간의 이동 시간과 비용 저감
(3시간→1시간, 1,800~2930엔+숙박료→600~800엔)
- 종래의 공공교통기관에 의한 추가수송의 경우 연간 2,626만엔을 요하나, 합승수송의 운영비용은 연간 100만에 불과함
- 2019년 11월말 시점에서 33개월 누적 이용자수는 437명
- 동승 이용자의 수요는 현재도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 도입의 포인트

- 서비스 인지도 향상 작업
 - 공보물의 경우 문자 크기가 작아 고령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유인물을 발부하는 한편 전화 설명 대응을 추가
 - 병원통원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함을 홍보(합승 시범투어를 4회 개최)
 - 수입차 판매 딜러와 연계하여 전용차량을 기간 한정으로 무상대여 캠페인을 실시하여, 화제를 만들고, 자가용 이용에 저항감이 있는 드라이버의 참여를 유도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모집 작업
 - 폭 넓게 드라이버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시 공보지와 주민회랑의 게재 외에도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의견교환 실시(연간 3회 정도)
-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를 위한 작업
 - 합승 매칭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otteco와 연계하여 실증실험을 실시. 전용 사이트 및 전화 대응 상담창구를 개설. 배차대응의 안내상담요원, 이용매뉴얼 작성 등 서포트 충실화
- 서비스 안전, 안심 확보 작업
 - 낯선 이의 자동차에 탑승하는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드라이버와 대면 교류회 개최

- 테시오 정(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합승 승차 중 사고 시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
- 법률,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 관련 작업 개시 직후, 기존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산하 지방 운수국에 상담과 확인을 거침. 경제산업성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한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성과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

○ 해결 과제

- 2~3인의 소수 드라이버에 과도한 의존 경향(사고 시 대체자를 구하기 곤란). 버스 및 택시와 같은 서비스로 오해할 소지가 존재 -> 홍보와 합승 투어 체험을 실시하여 인지도를 향상하는 조치를 계속 실행할 필요가 있음

4) 취업기회 창출

□ (개요) 공유경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노동참가율과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 소싱의 도입촉진이 대표적. 일반적으로 일거리가 적은 지역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한 역외의 일거리 수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

- 인재와 스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역내외의 자원과 기업을 매칭하여 문제해결이 가능
- 지역주민의 저조한 노동참가율, 저소득, 사무직 일거리 부족한 상황에서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유연한 노동형태의 보급
- 지역 기업 경영진의 사업계승이 힘든 상황-부업 매칭으로 인한 도시권에서의 인재스카웃 및 지역 기업에의 인재 매칭플랫폼 도입
- 주민의 여가시간에 유연한 노동 기회 부족 및 기업설립의 거점 부족 상황을 유희시절을 활용하여 셰어오피스를 정비하여 제공하여 해결

□ (공유경제 수법 활용의 장점)

- 니즈 시즈의 개방화
 - 크라우드소싱에 의해 역내의 유희 스킬(시즈)의 역외 니즈에의 개방화가 가능

- 부업인재의 모집은 대도시권의 인재 시즈를 역내기업에 연결하여 인재부족 해소 및 관련 인구 증가가 기대
- 매칭의 효율화
 - 스킬을 가진 인재가 플랫폼 상에서 일거리를 수주하여 풀타임 통근 뿐만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형태가 실현 가능
 - 지자체 등 시책으로서의 텔레워크 거점의 정비, 디렉터 인재육성, 팀 수주 시스템과의 병용은 효율적인 매칭이 기대됨

□ (사례) 이와테 현 하치만타이 시

- 도시부의 하이스킬 인재를 하치만타이 시의 중소기업에 부업사원으로서 매칭,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관계인구의 증가를 도모
- 도입 전 상황
 - 인구감소(특히 노동인구), 인구유출이 과제인 상황에서 시내 중소기업의 채용난 발생. 시내에 있는 하이스킬 인재, 특히 기업의 확대에 필요한 기획 계통의 인재가 부족
 -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구직인재소개회사인 그루브즈가 하치만타이 시와 업무연계를 하고 있는 이와테은행의 그룹회사인 이와킨 사업창조캐피털에서 자금조달을 하여, 그루브즈가 기획하는 지방기업과 인재의 매칭 프로젝트인 Skill Shift에 하치만타이 시가 참여
- 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
 - 그루브즈의 Skill Shift를 이용하여 도시부의 하이스킬 인재를 부업인재로서 채용
 - 지역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영기획, 마케팅, 광고상품개발 강화의 중요성을 계몽함과 동시에 채용방법을 공유
- 도입 후 상황
 - 15사 21명이 연구회에 참가, 6사가 프로젝트 참가 즉결
 - 정사원 구인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부업구인'란이 새로 생기며 약 반년 간 6사에 72명의 응모가 발생

- 2사의 경우 인재 채용 이전에는 착수가 힘들었던 경영기획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 및 마케팅 정보발신 강화에 활약
- 외부인재의 유입으로 객관적인 업무 파악에 의한 업무 개선이 가능해짐
- 지역과 연이 없던 이까지 새로운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작성

○ 도입의 포인트

-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작업: 제휴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실시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모집 작업: 시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공회와 지역 은행 연계를 공지하며 집객 실시
-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한 이용자를 위한 작업: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마케팅용지에 기입하는 등 입력대행을 실시
- 서비스 안전, 안심 확보 작업: 세미나 채용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

○ 해결 과제

- 도시부 인재의 스킬세어는 지역기업에 있어 무리없이 유효활용되어 부업 인재를 채용한 기업도 높은 만족도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추진하는 경영자를 모집'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
- 부업인재의 활용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의 세어가 향후 과제. 또한, 지역금융 기관이나 상공회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사명으로 삼는 기관과 밀접한 연계가 필요

5) 관광진흥

□ (개요) 공유경제에 의한 관광진흥으로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세어에 의한 관광객 수용규모의 향상과 스킬 세어에 의한 새로운 관광 자원의 창출을 들 수 있음

- 스페이스세어에는 유희 가옥 혹은 주차장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숙박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여 수용능력 향상이 가능
- 또한, 주민이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의한 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됨

□ (공유경제 수법 활용의 장점)

- 니즈 시즈의 개방화
 - 종래의 관광상품에서는 중시되지 않은 자원을 플랫폼을 통해 외부에 발신함으로써 역내의 관광객에게 새로운 콘텐츠(스페이스 혹은 관광상품)의 제공이 가능
- 매칭의 효율화
 - 특정 타이밍(마우 축제 등)에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호텔이나 주차장이 만실이 되는 한편 빈집이나 주민이용 주차장이 사용불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
 - 플랫폼의 활용으로 수급의 미스매칭 개선 가능

□ (사례) 시즈오카 현 하마마쓰 시

- 스페이스 셰어 및 체험형 관광의 매칭사이트와 제휴하여 중산간지역의 활성화 및 시정촌 합병에 의해 증가한 공공시설의 유효활용을 도모
- 도입 전 상황
 - 하마마쓰 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넓은 시 면적을 보유하고, 해안에서 산간부까지 남북으로 뻗어 있어, 도시부와 과소지역 등 다채로운 지역을 포함한 도시
 - 중산간 지역의 인구감소가 현저하여, 정주민구와 교류인구의 확대가 과제
 - 2005년 12개 지역 시정촌 합병에 의해 대대적인 공공시설의 통폐합을 실시하였으나, 유휴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이 과제
 - 대규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회장 부설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변 정체 발생
- 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
 - 지역밀착형 관광안내, 기업TABICA와 연계하여 중산간지역의 관광체험 플랫폼을 제공
 - 스페이스마켓과 제휴하여 유휴자산의 정보를 웹페이지에 게재
 - 이벤트 회장의 일시적인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서비스회사 Times24, 손해보험재팬(자동차보험회사)와 연계를 통해 이벤트 회장 근린의 주택 및 사업소 등의 유휴스페이스를 활용한 주차장 셰어의 실증실험을 실시 (하마마쓰 성 공원 앞 사쿠라거리, 전국고교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등)

○ 도입 후 상황

- 중산간지역의 매력을 전국에 발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 제공
- 시의 매력을 전국으로 발신하여 웹페이지를 통한 유희자산 활용 신청이 증가
- 하마마쓰 공원 앞 사쿠라거리에서는 156대가 서비스 등록, 전국 고교 배드민턴 선수권에서는 215대 서비스 등록 등, 외부 방문객의 편리성 향상 및 주변 교통정체 억제에 기여

○ 도입의 포인트

- 서비스 인지도 향상 작업
 - 하마마쓰 홍보지(2017년 6월호)에 시장의 칼럼 및 하마마쓰시 공식 홈페이지에 셰어이코노미의 추진을 게재
 - 체험, 이벤트 정보를 주식회사 가이악스가 운영하는 TABICA의 웹페이지(체험형 당일여행코너)에 게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발신
 - 스페이스 마켓의 웹페이지에 하마마쓰 시의 특설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사유시설 및 민간시설 정보를 게재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모집 작업: 대규모 이벤트에 의한 정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재팬과 Times24와 협정 체결, 2018년에는 실증실험 실시
- 기타 사항: 셰어이코노미의 요소를 습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년 연속으로 주식회사 스페이스마켓에 시의 직원을 파견하여 노하우를 축적하여 지자체 경영의 보완서비스로 활용을 추가로 추진

○ 해결 과제

- 셰어이코노미 개념의 보급을 위한 계몽활동 및 셰어링 서비스 도입분야의 추가확대
-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실시가 이상적이나, 지자체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를 행정운영의 하나의 수법으로 상시 활용하고, 지역경영수법으로서도 소개

6) 문화 예술 공간 유치 사례

□ 니가타 현 토카마치 시:

- 마을의 노포기업이 소유한 창고의 빈 공간을 개수하여 '대지의 예술제 마을'로서 아티스트들이 가진 감성을 잘 살린 장소 및 기업 창업을 원하는 이들의 Co-Creation의 장소로 창출
- 도입주체: 니가타현토카마치시, 타키초 상점(기모노 도소매업), 주식회사 toiz (이벤트회사)
- 도입 전 상황
 - 토카마치 시의 지역전통산업인 기모노 산업이 경제정세 변화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증가
 - 기모노 문화와 역사, 전통기술을 살린 새로운 산업 전개를 모색
 - 마을 재건을 위한 젊은 세대와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이 부족한 상황
 - '대지의 예술제 마을'로서 아티스트가 가진 감성을 살리면서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
 - 타키초 상점이 자사가 보유한 활용가능한 창고2층의 빈 공간을 셰어스페이스로 개조
 - 단순한 렌털 스페이스가 아닌, 이용자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asto(Art Scape of Tokamachi)를 설립(2018년10월)
 - 사업 종류
 - 셰어스페이스 사업: 아트리에, 오피스, 셰어라운지(카페 등 자유공간), 갤러리, 스튜디오
 - 아트 서포트 사업: 지역전통산업을 활용한 아트굿즈의 기획 판매 및 아티스트의 제작활동의 지원(아티스트 거주 아파트 형 공간 등). 개인이 선호하는 취미, 희망을 직업으로 하고 싶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회원간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며 지원을 행함

○ 도입 후 상황

- 시개업 후 1년 간 회원수 증가 (라운지 회원 14명, 부스 회원 3명, facebook 팔로워 402인 획득)
- 회원간 새로운 만남의 장을 창출하여 시내외를 막론하고 ‘사람, 일, 정보’가 모여 다양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됨
- 창업 100년을 넘는 지역전통산업을 지탱해온 노포기업이 형태를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며 예술을 활용한 지역 형성에 공헌
- 새로운 굿즈의 기획 판매에 의해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도모
- 니가타현 내의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거점’으로서 인정되어, 신규 사업을 일으키는 이의 지원체제를 강화(2019년 8월)

○ 도입의 포인트

- 서비스 인지도 향상 작업
 - 창고 2층 빈 공간을 개수함과 동시에 고가구 리메이크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 사항에 흥미를 가진 아티스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공간을 제작한 후, 그 화제성을 SNS로 홍보
 - ‘대지의 예술제 아트 트리에날레 2018’에서는 굿즈 제작 판매를 통해 ‘asto’를 홍보
 - 자사 홈페이지와 SNS에서 주지 및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게재 등
 - 스타트업 거점으로서 니가타 현의 기업 창업지원시설로 인정된 것을 어필하여 이용자에게 소구력 향상을 목표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모집 작업
 - 운영은 역외에서 온 이주자들로 이뤄진 기업인 toiz와 공동으로 행하여, 셰어스페이스 활용에 폭 넓은 시점을 제공
 - 이용요금은 시가의 1/3 정도로 억제하여, 이용의 허들을 낮추고 회원의 활동 및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의 연계를 중시
 - 스태프는 이용자가 실현하고 싶은 일에 관여하며 기업 매니지먼트 등 상담창구의 역할도 맡음
 - 기업 창업의 계기를 만들고, 의욕적인 이들 간의 교류 촉진 이벤트를 주최

-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한 이용자를 위한 작업: 지역 신문과 무가지에 기사 게재, 팸플릿과 이벤트 홍보물 배포
- 서비스 안전, 안심 확보 작업: 이용자는 면접을 거친 회원제로 선정
- 법률, 조례와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이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보완, 연계 내용: 토카마치 시청과 상공회의소가 기업, 창업 희망자의 초기 상담창구로서의 기능을 맡음
- 광역 연계를 위한 작업: 니가타현이 주도하는 '관민연계창업지원네트워크 창업지원 플랫폼'에 가맹
- 기타 사항
 - 회원들이 사법 어드바이저(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
 - 아트 매니지먼트를 비롯하여 '대지의 예술제 마을'이라는 특징이 있는 지역성을 민간레벨에서 발신
 - asto의 조직을 비롯하여, 관광 문화 시설과 지역의 조직에 대해서도 시외의 시찰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전개하여 다양한 관계를 창출

○ 해결 과제

- 향후 이용자 증가를 염두해 둔 PR, 이벤트를 추가로 실시하고 이용빈도가 낮아도 이용하기 쉬운 요금플랜을 설정하여 니가타현 외부 지역 및 수도권 회원들을 배려
- 행정과 연계(눈축제 등 지역이벤트와의 제휴 및 이주희망자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의 장 형성 등)
- 현립고교 앞의 입지를 활용하여 지역 고교생 및 젊은 세대가 지역 외의 교류를 통해 지역에 흥미를 갖고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자부심을 고양
- asto를 통해 육성한 인재가 시 중심가에 진출하여 비어 있는 주택 및 점포를 재활용하여 상점가의 활성화로 연결
- 도쿄의 공동 워킹스페이스 및 세어오피스와 제휴하여 이주 및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 및 세어링 이코모니 플랫폼의 활용을 검토

2. 미국 사례

1) 공구 및 공유센터

□ 동네 도구 창고(A Neighborhood Tool Library, 오클라호마주 툴사)¹⁰⁾

- (개요) 툴사 시는 시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및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구창고’(Toolki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 ‘도구창고’ 프로그램은 이웃을 조직하고 시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도구창고’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동네 도구 창고’ 프로젝트가 있음
- (과정)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집안 일에 필요해서 구입한 도구가 구매 이후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확장 사다리, 원형 톱 또는 특정 드릴 비트 등이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데 구매한 도구가 이웃에게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도구와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이웃과 도구를 빌리고 공유하거나, 함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고려. 도구 공유는 돈을 절약하고 귀중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도구 공유를 몇 명의 이웃과 도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웃 도구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음. 이러한 ‘도서관’ 형식의 동네 도구 창고 프로그램을 시작
- (소규모 도구 공유) 주민들이 이웃과 도구를 공유 또는 빌려줄 수 있는 도구/장비 목록, 연락처 정보 및 기대 사항이나 규칙을 포함한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게 함
 - 각종 온라인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게 함
 - sharestarter.org/tools/, freestyle.org, near-me.com

10) <https://tulsaplanning.org/docs/toolkit/Tulsa-Neighborhood-Toolkit.pdf>

- (프로그램 목표) 톨사 시는 ‘동네도구창고’ 프로그램이 모든 톨사 시 주민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길 바램
 - 이 프로그램은 시의 포괄적 계획 또는 많은 소규모 지역 계획 중 하나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램

- **3D 프린팅 모델링, 프린팅, 스캐닝 서비스(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¹¹⁾**
 - (개요) 2017년 12월 22일부터 클리브랜드 시의 공공도서관은 클리브랜드 시 도서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도서관 카드를 소지한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의 3D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클리브랜드 공공 도서관의 3D 프린팅 서비스는 빠른 프린팅과 이용자의 즐거움 및 창의성을 위해 설계됨
 - 이 서비스는 생산이나 제조를 위한 것이 아니며, 클리브랜드 공공 도서관의 3D 프린터와 스캐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
 -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메인주 포틀랜드시의 시니어 테크 대여 도서관¹²⁾이 있음
 - 노인들에게 태블릿 및 기타 기술 기기를 대여하고 사용 방법 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

2) 친환경 이니셔티브

- **수리 워크샵 (Fix-it Clinics, Fix-It-Repair,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¹³⁾**
 - (개요) 미네소타 주 헤너핀 카운티의 지방정부는 수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폐기물 관리 목표에 맞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함. 카운티는 매월 수리 클리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헤너핀 카운티에서 수리 클리닉은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음

11) <https://cpl.org/aboutthelibrary/usingthelibrary/policy-3d-printing/>

12) https://portlandmainetoollibrary.org/?page_id=28

13) <https://www.hennepin.us/en/choose-to-reuse/tips/fix-it-repair>
<https://www.hennepin.us/residents/recycling-hazardous-waste/fix-it-clinics>

- 환경 및 에너지부서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단위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근무시간의 약 25%를 수리 클리닉을 조정하는 데 할애
 - 매월 열리는 클리닉의 날짜와 장소를 설정하고, 웹 홍보 및 짧은 라디오 방송과 같은 홍보를 돕고, 각 행사에서 설치 및 철수를 주도
 - 자원봉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며 코디네이터의 근무 시간 비용 외에 카운티가 지불하는 유일한 비용은 간식과 음료임
 - 클리닉은 도서관, 시청사, 교회와 같은 장소에서 열리므로 대부분 건물 임대 비용이 들지 않음
- (운영) - 일정한 그룹의 자원봉사자 '수리공'과 함께 꾸준히 워크숍을 개최. 많은 일정 덕분에 주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워크숍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목표는 폐기물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는 워크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측정함—고장 난 헤어드라이어, 빵 제조기, 장난감, DVD 플레이어, 지퍼가 망가진 옷 등등의 유입물들을 계산함
 - 그런 다음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추적하고 어떤 물품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리되었는지를 파악.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는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의 무게를 추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
 - 2012년 9월에 매월 수리 클리닉을 시작한 이래 2015년 기준, 약 2,000명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2,956개의 수리할 물품을 가져왔고 그 중 73%가 성공적으로 고쳐짐. 최종 결과는 13,946파운드의 폐기물이 매립지로 가는 것을 막음
 - 소송 관련 문제에 대비해서 카운티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클리닉 참가자들이 서명해야 하는 책임 면제 서류를 개발
- (서비스 내용) 헤너핀 카운티는 의류수리를 위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는데 Choose to Reuse 라는 사이트 (<https://www.hennepin.us/choose-to-reuse/#directory>)를 통해 이용가능한 수리점을 찾을 수 있음

- 수리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수리가 가능한 목록등의 정보를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제공함
 - 예를 들어, 'Sew Biz Tailoring Inc. 전화번호: 612-332-6364, 주소: Baker Building, 706 2nd Avenue South #145, Minneapolis, MN 55402, 전문분야: 의류수리, 밑단 처리, 재봉서비스, 직물재직, 맞춤 서비스, 의류 스타일 변경, 의류수리, 가죽수리, 드레스 수정, 아웃도어 의류 및 캠핑 장비 수리'과 같은 정보가 제공됨
- 헤너핀 카운티는 직접 수리하기 어려운 전자 제품이 있는 경우 첫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제공. 헤너핀 카운티의 Choose to Reuse 사이트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문 분야 등의 정보를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제공하는 기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재봉틀 수리
 - 가구 수리
 - 의류와 각종 기구 수리 및 렌탈
 - 핸디맨 수리
 - 보석 및 시계
 - 악기
 - 스포츠 용품과 아웃도어 기기, 자전거
 - 신발 및 가죽
 - 청소기
- 헤너핀 카운티는 주택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최대 \$30,000달러까지 대출을 제공함. 이 대출은 0% 이자율의 적용을 받으며, 월별 상환 의무가 없음. 대출은 집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탕감될 수 있음

3) 공공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 건강한 코너 매장프로그램(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City of Minneapolis, Minnesota)¹⁴⁾

- (개요) 지역 코너 스토어가 신선한 농산물 및 건강한 식품 옵션을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공공 건강을 개선하고 도시 지역의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건강한 코너 매장을 2,000 제곱피트 미만, 4개 이하의 통로와 단 하나의 계산대를 갖춘 소매점으로 정의하지만, 일부는 단순히 편의점이라고 부르는데 건강 코너 매장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종류의 매장에서 건강한 식품의 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배경) 미네소타 주의 캐스 및 클레이 카운티에서의 생활은 다른 주들의 대부분 지역에서의 생활과 다른데 주민들은 극도로 덥고 습한 여름과 몹시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함
 -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의 도시들은 확산되었으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도시와 농촌 커뮤니티를 모두 고려해야 함
 - 차량이나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확산된 환경, 교통 수단의 부족과 기타 장벽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한 식품에 접근성이 떨어짐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건강 코너 매장 이니셔티브를 통하는 것. 미국에서 건강한 식품 소매 이니셔티브는 필라델피아의 한 단체인 The Food Trust가 주도하여 저소득 지역에서 가까운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은 코너 가게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나왔으며, 이러한 코너 가게나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건강한 옵션이 종종 부족
 - 건강한 소매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과 기타 건강한 옵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소매 개발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발생함

14) <https://healthyfoodpolicyproject.org/case-studies/minneapolis-mn>
https://download.fargond.gov/0/blueprinthealthycornerstores_final.pdf

- 저소득 지역에서는 건강한 식품 옵션을 늘리는 것이 특히 큰 이점을 가져옴. 미국 농무부가 보고한 바(2018년 기준)에 따르면 2천 5백만에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식료품점이나 기타 건강한 식품 소매점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없는 식품 사막에 살고 있으며, 식품 접근 문제를 해결하면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네아폴리스 정책) 관련 건강한 코너 매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많은 도시들이 정책보다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 지원 없이 성공적인 정책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
 - 2008년에 미네아폴리스 시는 소매점에서 일정량의 농산물과 기타 필수 식품 (통곡물, 고기, 콩, 유제품) 등을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통과. 그러나 1년 후, 미네아폴리스 보건부는 일부 매장을 평가했고, 대부분의 매장이 조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큰 필요성은 매장 변경을 지원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매장 주인들을 돕는 것임
 - 프로그램은 단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식품 공급을 늘리는 것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켜야 함.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교육하여 식품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커뮤니티에 마케팅을 하며, 매장에서 행사를 개최, 지역 커뮤니티 조직과 협력하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방법임
 - 미네아폴리스시에서 제시한 건강한 코너 매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전략
 1. 전략적으로 매장을 선택. 변경을 원하는 매장 주인을 찾고, 주변 지역의 구성을 검토하며, 다른 식료품 소매점과의 거리를 고려
 2. 매장 주인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제공 마케팅, 기술 지원
 3. 자금을 인센티브로 제공. 매장 주인이 장비(예: 신선한 농산물을 위한 냉장고)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대출이나 보조금을 제공
 4. 식료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보기 좋게 식품을 진열하는 방법은 건강한 식품의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음
 5. 매장 주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
 6.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해야 함

○ (예상되는 문제들/장벽들)

1. 건강한 식품을 다루거나 진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할 수 있음
2. 일주일에 몇 번씩 소량의 농산물을 배송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3. 건강한 식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할 수 있음
4. 인프라 제한(예: 냉장고 없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 (시 및 군 정부의 대응) 미네아폴리스시는 소매점들이 일정량의 건강식품을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고정 식품 조례(SFO)를 통과시킴(조례는 아래에서 설명함)

- 다른 도시들이 적용하고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소매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실행
-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건강한 코너 매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필요를 느낄 것임.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지역 공공 보건부를 통해 보조금을 제공함

○ (주변 지역의 건강코너 스토어 정책 비교)

- 비스마르크, 노스다코타주
 - 비스마르크 시는 건강한 코너 스토어나 건강한 식품 접근성 증대에 관한 정책이나 조례는 규정하지 않음
 - 커뮤니티 개발부는 최근 스넵 혜택을 받는 식료품점과 소매점 위치를 모두 매핑(mapping)했으나,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가 변경 사항은 제안되지 않음
 - 최근 채택된 재개발 계획에는 “완전한 동네의 형성과 성장”을 언급하는 몇 가지 디자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자인 목표 중 하나는 “기본 편의 시설, 특히 건강한 식품이 도시 지역 주택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다”는 것임.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례를 규정하지 않음

- 더글라스 카운티, 네브래스카주
 - 더글라스 카운티 보건부와 라이브 웰 오마하(지역 기관 협력을 통한 주민 건강 개선 목표)는 건강한 이웃 상점 프로그램에 참여할 열 개 상점을 전략적으로 모집. 이 프로그램은 네브래스카 그로서스 협회의 지원을 받아 상점 주인과 효과적으로 협력. 상점 주인들에게는 건강한 식품 옵션을 진열하고 다루는 데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었고, 네브래스카 대학교 링컨 캠퍼스 확장 부서에서 현장 요리 시연 및 시식 이벤트를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들 상점의 매출이 증가
-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주
 - 2008년 시는 스테이플 식품 조례 및 정책을 통과시켰고, 준수 부족으로 인해 미네아폴리스 보건부(MHD)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한 코너 스토어 프로그램을 추가. 시는 조례를 수정하였고, M현재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상점이 준수하도록 돕는 수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작업에 대한 자금은 주 전역 건강 개선 파트너십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음
 - 프로그램 운영시 0.5 FTE(half- full time) 이상의 인력을 사용했으며 각 상점에 상품 진열 및 지급금을 위해 500달러를 지원. 수정된 조례 하에서 0.3 FTE와 일부 자료 인쇄 비용을 추가 지원함. 수정된 조례를 통과할 때 일부 상점 주인들로부터 반발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의 불만이 없음
- 미네소타 주 정부
 - 미네소타 주 전역 건강 개선 파트너십은 'Good Food Small Stores'라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함. 이 프로그램은 만성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상점에 의해 자금이 지원됨. 이 프로그램은 농촌 보건부서 및 연장 사무소와 협력하여 30~40개의 상점을 모집하여 건강한 코너 상점 노력을 시행함. 6개월마다 상점 변경의 효과를 평가를 평가함
 - 미네소타 농업부 또한 상점 주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Good Food Access 프로그램을 운영함.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는 건강한 식품 소매 노력을 위해 250,000 달러를 배정. 상점 주인들은 기술 지원과 건강한 식품과 관련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최근에는 보조금의 절반가량이 신선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매하는 상점 주인들에게 지급됨

4) 공간공유 프로그램

□ 갱플랭크 프로젝트(GangPlank HQ, 애리조나주 찬들러)¹⁵⁾

- (개요) 갱플랭크는 찬들러 다운타운에 위치한 12,000 평방 피트 규모의 열린 공동작업 공간으로서 창업가, 소프트웨어, 게임, 웹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회사들이 연결되고 혁신을 이루는 비영리 공동작업 장소
 - 갱플랭크는 개방형 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 연1회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찬들러를 선도적인 기술 허브로 브랜드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 회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월별 및 분기별 투자 수익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과정) 2007년 제이드 메스킬과 데릭 네이버스가 창립하였으며, 사설 부문(건물 개조에 40만 달러 포함)과 나중에 애리조나 찬들러 시의 상당한 지원과 관리를 받음
 - 갱플랭크는 매월 평균 2,400회의 방문을 기록하며, 비즈니스 개발, 고객 미팅, 크리에이티브 먼데이, 해커나이트 등 정기 이벤트를 개최. 또한 갱플랭크는 워드캠프, 데저트 코드 캠프 등의 행사를 개최
 - 찬들러시의 시의회에서는 결의안 번호 5123을 2018년 1월 25일에 채택하여 갱플랭크와 협업을 위한 공동작업 공간, 웹 및 기술 개발, 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찬들러 시의회의 결의안)
 - 제1조: 갱플랭크는 찬들러시와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 계약은 첨부된 전시A로 제시된 형태대로 수행
 - 제2조: 전문 서비스 계약은 찬들러 시 법률 고문의 승인을 받은 형태로 진행
 - 제3조: 시장은 전문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이는 갱플랭크가 찬들러시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명시된 시간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가능함

15) https://www.chandleraz.gov/sites/default/files/content/20180125_16.PDF

- 제4조: 이 계약의 모든 금융적 조건과 지급은 찬들러 시의 전략적 경제 개발 예비 자금에서 지급될 예정
- 제5조: 이 결의안은 찬들러 시 법률 고문이 승인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갱플랭크 콜렉티브 찬들러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제2절 국내외 공유경제 사례

1.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1) 서울시¹⁶⁾

□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후 「공유촉진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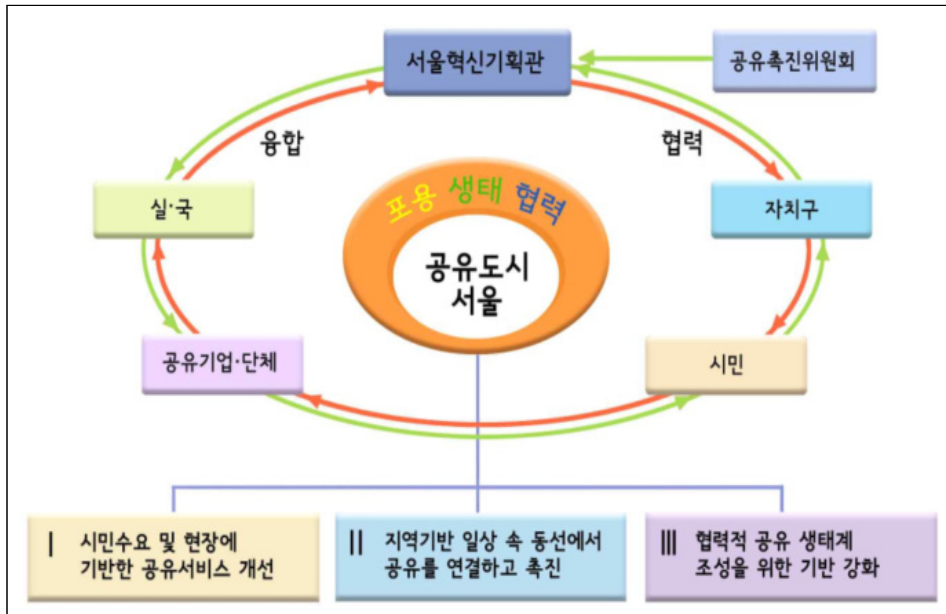
-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 선언 후 2012년 12월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2월에는 민관 협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함
- 공유촉진위원회는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 심의, 공유촉진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공유포털 사이트인 공유허브(sharehub.kr)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 2014년에는 교통, 관광, 세무, 보험 등 공유와 충돌되는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2014년 7월 19개 자치구에서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함

□ 서울시, 자치구, 공유기업·단체, 시민 등이 융합과 협력을 통해 추진

- 초기의 공유경제 추진체계는 서울시와 공유기업, 자치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각 사업비 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주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최근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 자치구, 공유기업 및 단체, 시민이 융합과 협력을 통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16) 서울혁신기획관(2021),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일부 인용하여 정리함

| 그림 3-1 | 서울시 공유경제 추진체계



출처: 서울혁신기획관(2021: 8)

□ 공유서울 1기는 공유도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자치구가 주체가 된 공급자 중심 계획이었으며, 2기는 도시문제 및 생활문제 해결에 주력한 수요자 중심 계획이었음

- 1기는 공간, 물건, 재능 등 공유의 대상 중심 사업 추진, 공유경제 생태계 지원, 서울시·자치구 공유 확산이라는 특징을 가짐
- 2기는 마을학교, 주부, 청년, 직장인, 은퇴자 등 공유의 주체를 다각화하고 공유 대표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전국 및 전세계로 공유를 확산시켜 공유서울을 브랜드화하고자 함
- 공유서울 1·2기는 공유도시 서울의 국·내외 위상 강화, 시민 인식 향상,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지원을 통한 공유 확대의 성과가 있었음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 (교통) O2O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이동서비스 활성화

- (물건) 공구, 아이옷, 장난감 등 공유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정보)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여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 한편 시민들이 공유정책을 분절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유도시 차원의 시너지가 부족하고 시민들이 수혜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 공유가치 측정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그간 정책의 한계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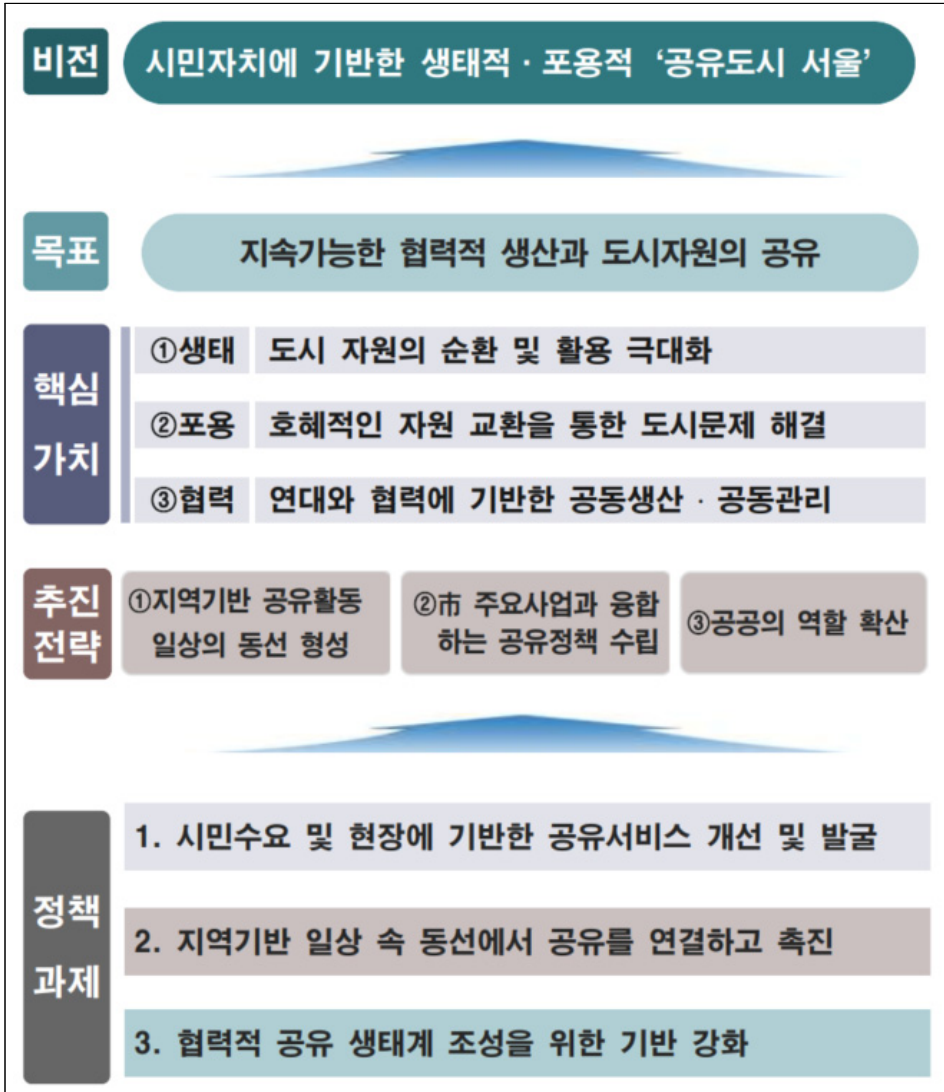
□ 현재는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중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2021년 2월 발표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함”
- 공유서울 3기의 정책비전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생태, 포용,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음
 - 생태: 도시 자원의 순환 및 활용 극대화
 - 포용: 호혜적인 자원 교환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 협력: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생산·공동관리

□ 공유서울 3기의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함께 3단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

- 1단계(2021년):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 서비스 개선 및 발굴로 시민 주도 공유활동 기반 마련
- 2단계(2022~2023년):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공유자원이 생산·소비·관리되는 환경 조성
- 3단계(2024~2025년): 시민의 일상 속 동선이 공유로 연결, 15분 이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유서비스 제공

| 그림 3-2 | 서울시 공유경제 정책비전 체계



출처: 서울혁신기획관(2021: 6)

| 표 3-1 | 서울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업
I.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 서비스 개선 및 발굴	1-1. 공유로 누리는 편리한 이동서비스 (이동) ① 공공자전거 따릉이 ②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1-2. 모두를 위한 공간 공유 (공간) ① 거주자우선주차장 ② 부설주차장 ③ 공공시설 개방 ④융합형 한지붕 세대공감
	1-3. 아껴쓰고 나눠쓰는 물건 공유 (물건) ① 장난감 대여 ② 생활공구 대여
	1-4. 정보격차를 줄이는 디지털 공유 (정보) ① 공공데이터 개방 ② 공공 와이파이 ③ 민관 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II. 지역주민 일상 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	2-1. 지역주민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2-2.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활용 모델 개발
	2-3. 시민참여형 공유활동 발굴
	2-4. 지역 상생형 공유 일자리 창출
	2-5. 지역단위 공유 네트워크 구축(공유마을 조성)
	2-6. 공유기업·단체 분야별 육성
	2-7.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
III. 협력적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	3-1. 공유활동 R&D 추진
	3-2.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3-3. 공유가치 지표 수립
	3-4. 공유관련 제도 개선
	3-5.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3-6. 공유허브 활성화
	3-7. 국·내외 도시 간 정책협업 및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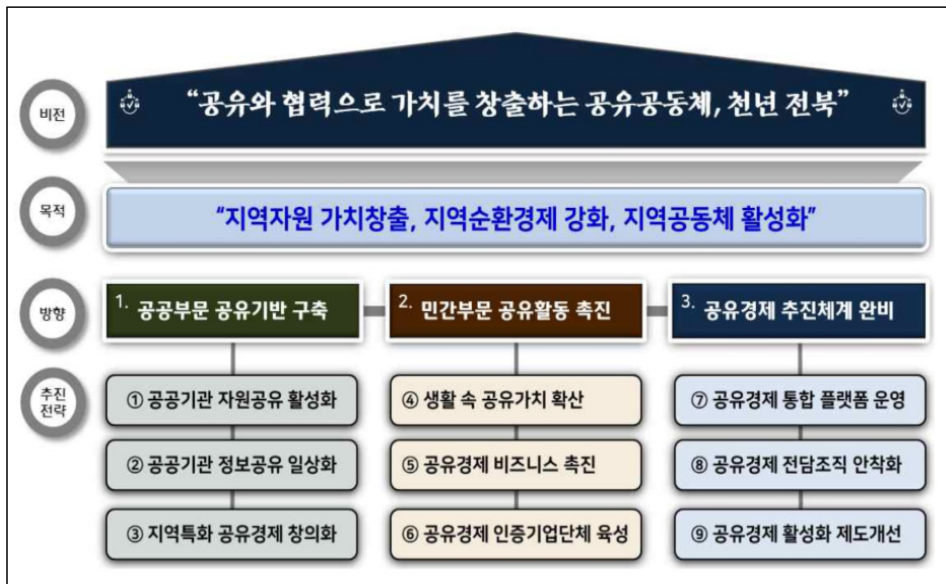
출처: 서울혁신기획관(2021: 9)

2) 전라북도17)

□ 2019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 비전은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천년 전북”으로 공유사회 ‘작동원리’, 공유경제 ‘정책목적’이 지역사회에 구현되는 그랜드 이미지를 통한 ‘의미발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 공유사회 작동원리: 공유가능 자원의 ‘공유와 협력적 소비’라는 공유경제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공유경제 정책목적: 공유자원의 이용은 새로운 지역자원의 ‘이용가치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을 반영
 - 지역사회 발신의미: 공유경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이 반영된 ‘공동체’를 표현

| 그림 3-3 |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출처: 황영모(2019: 111)

17) 황영모(2019)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일부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 목적은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임
 -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정보자원의 공유로 자원이용의 가치를 창출함을 제시
 - 지역순환경제 확산: 자원공유의 이용가치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반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구성원 및 전체에서 신뢰에 기반한 공유가치 확산의 시작과 마무리가 ‘지역공동체’임을 명시
- 정책방향은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로 설정함
 -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1) 공공기관의 공유 가능한 자원을 우선 공유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정책영역에서 선도,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가능 자산의 우선공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와 통계정보 등의 공유,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사업 촉진 등
 -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1) 일상 생활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촉진하고 지원, 2) 생활 속에 공유경제 가치의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창업·보육 촉진,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의 지정 관리
 -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1) 공유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담당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2)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평가·개선 등
- 추진전략은 앞의 그림과 같이 9가지로 제시되며, 전략별 세부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2】 전라북도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방향	전략	no	세 부 사 업
공공부문 기반구축	공공기관 자원공유	1-1	• 공공자원 개발 및 공유자원화
		1-2	• 공공자원 이용 모니터링 및 현행화
		1-3	• 공공기관 대표 공유자원화 지원 사업
		1-4	• 도 사업부서 ‘공유자원 대표사업’
	공공기관 정보공유	2-1	•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운영
		2-2	• 공공기관 정보공유 행정 시스템 수립 시행
	지역특화 공유경제	3-1	• 지역특화 공유경제 프로젝트
		3-2	• 사회혁신 공유경제 프로젝트
민간부문 활동촉진	생활 속 공유가치 확산	4-1	• 공유경제 교육과 공유체험 프로그램
		4-2	• 공유경제 홍보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
		4-3	• 공유경제 활성화 혁신 아이디어 발굴
		4-4	•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및 리빙랩 운영
		4-5	•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5-1	• 공유경제 비즈니스 패키지 지원
		5-2	• 공유경제 비즈니스 표준기술 개발 지원
		5-3	•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상품 개발 지원
		5-4	• 민간기업 공유가치 창출 자원공유 촉진
		5-5	• 산업(농공)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5-6	• 공유경제 팝업 팩토리 구축
	공유경제 기업단체 육성	6-1	• 전라북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6-2	• 공유경제 기업·단체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6-3	•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
		6-4	• 공유경제 주체 네트워킹 지원
	추진체계 완비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7-1
7-2			• 공유경제 웹진 및 도서 발간
7-3			• 공유경제 포럼 운영
공유경제 전담조직 강화		8-1	•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
		8-2	•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8-3	• 전라북도 공유경제위원회 운영
공유경제 제도개선		9-1	•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9-2	• 공유정책 평가 및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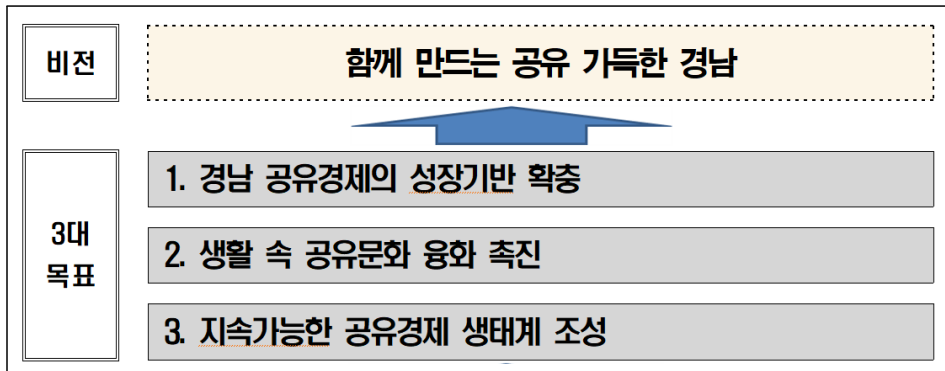
출처: 황영모(2019: 205) 재구성

3) 경상남도¹⁸⁾

□ 2021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 경상남도는 2019년 5월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2월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비전은 “함께 만드는 공유 가득한 경남”이며, 3대 목표는 1. 경남 공유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2. 생활 속 공유문화 융화 촉진, 3.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임

|그림 3-4| 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출처: 사회적경제추진단(2021)

- 추진전략별 정책과제와 세부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18) 사회적경제추진단. (2021) 「2021년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을 일부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표 3-3】 경상남도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사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	추진체계 구성	[1-1]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운영
		[1-2]	공유경제 사업추진 전담 중간 지원조직 운영
		[1-3]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네트워크 구축	[1-4]	지역 공유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5]	외부 유관단체 간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원
	이해갈등 조정 관리	[1-6]	도·시·군간 공유경제 정책조정회의 구성
		[1-7]	이해갈등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제도시스템 기반 개선	[1-8]	공유경제 성과평가 및 연차보고서 발간
		[1-9]	공유경제 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도민 공유경제 수요 창출	공공수요 확대	[2-1]	공유경제 서비스 공공수요 확대
	민간수요 확대	[2-2]	공유경제 참여포인트제 운영
		[2-3]	지역축제 및 행사 맞춤형 한시적 규제 완화
		[2-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검토단 운영
	공유문화 활성화	[2-5]	공유경제 지역 활동가 양성
		[2-6]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2-7]	공유경제모델 기반 대학 창업경진대회 개최
		[2-8]	경남 공유경제의 날 행사 진행
		[2-9]	공유경제학교 및 정책포럼 운영
		[2-10]	청소년 공유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내 공유경제 공급역량 제고	공공 공유자원 확대	[3-1]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3-2]	공공 공유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지원
		[3-3]	공공기관 구내식당 공유주방 시범사업 추진
	민간 공유자원 확대	[3-4]	민간분야 신규 공유자원 발굴 활동 지원
		[3-5]	민간 공유자원 공급 확대 지원
		[3-6]	공유의 거리 및 공유시범구역 지정
		[3-7]	도심 내 빈공간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활성화 지원
	공유경제 사회적자본 축적	[3-8]	공유경제 상생협력 기금 조성 및 운용
		[3-9]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보험 가입
		[3-10]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사업	
공유 서비스 확대 지원	공유기업/단체 육성	[4-1]	경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인증
		[4-2]	경남 공유경제 로고 제작 및 사용권 허여
		[4-3]	공유경제 스타트업 창업 육성 지원
		[4-4]	도내기업 공유경제 신사업 진출 지원
		[4-5]	공유경제 선도기업 유치지원사업
	지역특화 공유서비스 발굴	[4-6]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4-6-1]	스마트 그린 공유공장 단지구축사업
		[4-7]	그린에너지 전력 공유서비스 실증특례 추진
		[4-8]	연구실험장비 공유 활성화 지원
		[4-9]	해상교통 세어링(선박공유) 사업
		[4-10]	경남 청년 공유 플랫폼 구축
		[4-11]	공유 섬마을 조성 프로젝트 추진
		[4-12]	지역 경력단절여성 재능공유플랫폼 구축
		[4-13]	장난감 공유서비스 확대
		[4-14]	아동급식카드 공공기관 급식시설 이용 확대
		[4-15]	탈플라스틱 순환형 공동체 구축
		[4-16]	못난이 농산물 공유경제를 통한 천연비료 제작
[4-17]	친환경 자연농법의 지역 자산화		

2. 기초자치단체의 사례

1) 광명시¹⁹⁾

□ 2023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유경제, 공유도시 광명’으로 광명시 시정방침,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토대로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정의함
- 주요 추진목표는 안정적인 공유자원 구축(안정), 지속가능한 공유환경 조성(참여), 공유경제 행정 기반 강화(지원)

19) 입법정책연구원(2023).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을 일부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 그림 3-5 |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개요



출처: 입법정책연구원(2023: 148)

□ 9개 발전시책 및 36개 추진과제 제시

- ‘안정적인 공유자원 구축’은 공유경제의 기본요소로서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공유자원의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유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지속가능한 공유환경 조성’은 시민들이 광명시의 공유자원을 통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함
- ‘공유경제 행정 기반 강화’는 공유경제 및 공유도시에 관한 시민 인식의 제고 및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제공하고 공유경제 지원행정체계를 구축하며,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유경제 지원행정 및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표 3-4 | 광명시 발전시책 및 추진과제

발전시책	추진과제
1.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육성·지원	① 광명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②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투자 유치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③ 광명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영역을 신설
2. 공공재산의 공유자원화 확충	① 공유부엌 활성화
	② 대관시설(회의실 등) 및 행사, 체험강좌 등 확대 발굴
	③ 공유주택 시설기준 및 지원기준 제정
	④ 공유공간 갖춘 코리빙하우스
3. 생활밀착형 및 특화된 공유자원 발굴	① 공구, 장난감 유희자원 대여 사업
	②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③ 관용차 대체 EV 공유차량
	④ 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에 관한 수요조사(공모 등) 및 발굴
	⑤ 민간자산의 공유자원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
	⑥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
	⑦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⑧ 외국인 민박사업
	⑨ 악기 및 악기 도서 대여 사업 및 소속예술가 공연 및 재능기부
	⑩ 공유서가 지원
4. 미래세대 공유가치 확산	① 초중고생 대상 공유경제 교육 수요조사 및 공유경제학교 운영 지원
	② 청년 대상 공유기업 창업교육 또는 공유활동 교육
	③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청년 인턴 지원
5. 마을공동체 중심 공유가치 실천	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② 공유마을지정 및 지원
	③ 공동체 활성화 공유공간지원
6. 취약계층 대상 공유가치 실현	① 재활의료 장비 및 휠체어 등 대여
	② '사회적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원룸형 공동주거공간 설치)
	③ 마을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
	④ 노인-청년 쉼어하우스 사업
7.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이해 증진	① 공유스쿨 확대 실시
	② 디지털배움터 확대 실시
	③ 시민대상 공유경제 이해증진 교육서비스 제공(공공포럼 및 워크숍 개최)
8. 공유경제 지원행정체계 구축	① 사회적경제과 내에 공유경제지원팀 신설
	② 공유경제 지원시설 설치 및 사무위탁
	③ 공유경제위원회 독립적 운영
	④ 광명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9.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①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② 상위법령 및 정부 정책 건의

출처: 입법정책연구원(2023: 14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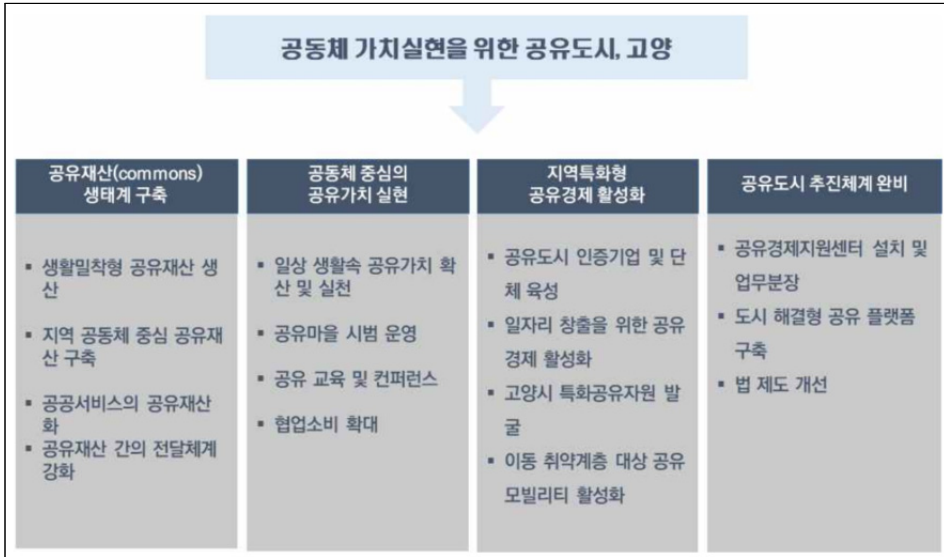
2) 고양시²⁰⁾

□ 2023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유경제, 공유도시 광명’으로 광명시 시정방침,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토대로 광명시 공유경제
- 공유재산 생태계 구축: 시민사회의 주도적 구상 속에서 시민 자신이 도시와 지역 자원을 공동 생산해 관리하며, 그 가치를 사회적 전체로 확산하려는 일종의 시민 코윈(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수립한 혁명적 자치 정부)적 자치 구상을 의미
- 공동체 중심의 공유가치 실현: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공유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유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유문화를 확산
- 지역특화형 공유경제 활성화: 주요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들과 연계한 공유경제 사업 및 고양시 특화 공유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며, 공유경제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공유경제 부문의 기업가를 양성하고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기반 공유기업체를 육성
- 공유도시 추진체계 완비: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자체 플랫폼을 세워 공유경제 DB를 구축하고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킴

20) 윤신희. (2022). 「고양시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일부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 그림 3-6 | 고양시 공유경제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출처: 윤신희(2022: 120)

| 표 3-5 | 고양시 추진전략 및 실행사업

목표	추진전략	실행사업
공유재산 생태계 구축	① 생활밀착형 공유재산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돌봄 공동체 텃밭 공유 및 관리 공원 공유 및 관리 유희놀이터활용, 키즈카페재탄생 지역 교육 공동체 지역 공유지 관리 및 활용 버려진 공간 문화공간 재탄생
	② 지역공동체 연계 공유재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유재산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 공유재산 활동가 지원 지역 공유재산 활동가 토론회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③ 공공서비스의 공유재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활동가(Commoner) 의견수렴을 통한 도시 공유재산 공동발굴 및 기획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와 실제 도시 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④ 공유재산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자원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공동체 중심의 공유가치 실현	① 일상생활속공유 가치확산및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및 시민 실험의 발굴 진행 주민주도 공유참여 리빙랩사업 공모 자원 줄이기, 자원순환 기여 단체 우선적 지원 정책 다양한 유형의 사업 발굴 도시 실험 참여 촉진
	② 공유마을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대상 공유경제 교육(인식향상교육) 시민토론회 공유활동가, 연구자,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공유활동 측정용 위한 공유가치 지표 수립 논의, 자료 및 정보 수집
	③ 공유교육 및 콘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단위 공유활동의 종합 모델 기반 구축 공유활동 거점 연결로 공유생활망조성 공유활동 거점센터 활동 지원 공유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시민의식 수준 향상 공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공유(Sharing)에서 공유재산(Common)으로 확장 공유도시와 관련된 국제회의 개최 세계와 교류 확대하여 공유의 가치확산에 기여 콘퍼런스 형태로 개최 추진 공유축진자(도시재생, 마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공유 활동가) 양성을 위한 현장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공유가치, 문화,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육, 연수, 현장체험 기회 제공 교육, 연수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목표	추진전략	실행사업
	④ 협업소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촉진자(도시재생, 마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공유 활동가) 양성을 위한 현장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공유가치, 문화,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육, 연수, 현장체험 기회 제공 교육, 연수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형 공유경제 활성화	① 공유도시인증기업 및 단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형 공유경제 주체 발굴 고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공유기업 지정을 통한 보조금 지원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사업에 대한 지정 및 재정 지원
	②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유경제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유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인력의 일자리화 단기프로젝트의 중장기화 혹은 공유활동거점센터의 인력을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제공 지역공유거점센터인턴십, 공유활동 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수료 주민이 공유활동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게 진행 공유경제단체및기업일자리고용지원금, 장려금 지원
	③ 고양시특화공유 자원 및 사업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공간중학습공간 DB구축 민간 공유공간 DB구축 학습공간 플랫폼 구축
	④ 이동취약계층대상 공유모빌리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취약계층 대상 공유형 스마트모빌리티시스템도입 교통취약계층 대상 차량공유문화 확산프로그램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도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안 조례와 정책자료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음
공유도시 추진체계 완비	①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제안 및 사업기획, 공유단체 및 기업지원, 행사 및 포럼개최, 홍보 및 교육 지원, 공모사업 집행 등의 역할 수행 생활 연계 공유 물품 대여소 운영 서비스 연계 물품 대여소 운영자 선정 및 지원
	② 도시해결형공유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전환 주요 의제를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 개선 공유데이터를 활용한 오픈API를 통해 개방형 온라인 공유 생태계 구축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데이터공유
	③ 법·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층위에서 시민주도 공유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안정된 기반 조성 안정된 공유사업 추진과 활용방안,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개선 추진

출처: 윤신희(2022: 149-152) 재구성

제3절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를 모두 공공서비스로 해결하려는 것은 재정이나 인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여기에 공유경제를 이용 및 활용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떠오름
 - 적자비용의 공공시설
 - 이용료 지불하는 민간이용자 모집
 - 인건비를 지불
 - 취업지원에 있어서 고비용 부담을 절감
 -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훈련이 아닌, 여러 선택의 폭이 넓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우드소싱과 스킬셰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
 - 고비용부담 복지서비스의 적자탈피를 목표
 - 적자운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양육셰어, 가사대행셰어, 이동셰어서비스 이용 촉진으로 지역 내 상호보조시스템을 구축
 - 재산성 도외시의 관광촉진정책에서 탈피
 - 기존의 지역 브랜드화, 프로모션 등 재산성을 도외시 한 비슷비슷한 관광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 안내인에 의한 지역 특유의 인력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관광을 추진
 - 제한된 지방예산 및 과도한 중앙의존에서 탈피
 - 중앙정부의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부족한 재원은 클라우드 펀딩의 적극 활용으로 충당
 - 다만, 공유경제의 지나친 의존은 역으로 재정분야의 정부후퇴를 불러올 우려가 있음
- 지자체와 셰어사업자(플랫폼머, 중간지원조직) 연계의 메리트 21)
 - 공유경제의 추진 체제는 ‘지자체’, ‘플랫폼머’, ‘중간지원조직’임

21)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중 셰어링 이코노미 협회(2017). ‘셰어링이코노미에 의한 지속가능형의 새로운 사회의 실현’ pp.22-23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49843.pdf (2024년 6월 21일 액세스)

지자체	추진 체제의 조정역할. 플랫폼의 구축, 주민의 지원
플랫폼머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전문가로서 지자체에 실무적 노하우 제공
중간지원조직	서비스제공 및 이용자의 발굴, 주민대상 공유경제 보급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실시

- 지역별 과제 포인트 : 육아 양육 지원, 커뮤니티, 지역의 발(이동수단) 확보, 방재분야, 취업기회 창출, 관광진흥²²⁾

【표 3-6】 공유경제로 해결가능한 지역과제와 주요 예시

지역과제	공유자원(주요 예시)	
보육지원	육아지원, 가사부담의 경감 등을 통한 여성 활약 지원	가사세어, 육아 세어, 클라우드소싱 텔레워크
커뮤니티	지역커뮤니티의 형성, 강화, 다양화를 꾀하는 주민 니즈에의 대응	스킬(특별히 업무 내용을 한정하지 않음) 등
지역의 이동수단 확보	공공교통공백지역의 이동수단 확보, 장보기 지원	카 셰어링(자가용차, 공용차 등), 합승(드라이버)
방재	재해 발생시 물자 부족의 상정	지원물자, 가옥, 이동 화장실 등
취업기회의 창출	주민 소득 향상,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일자리 제공	클라우드 소싱 텔레워크, 인재 세어
관광진흥	지역의 매력을 발신, 교류의 활발화	체험 서비스, 민박, 주차장 세어

출처: 총무성(2020) “세어 이코노미 활용 핸드북” p.4

□ 셰어링 시티 구상

- 셰어링 서비스를 지자체의 인프라로서 침투시켜, 유희공공자원과 지역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인적 물적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과제를 해결. 공조와 지속가능한 마을조성을 실현하여 경제효과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공유경제를 보급하고 침투시키는 구상
- 지자체의 과제해결: 지자체의 공조를 각 공유경제서비스로 실현
 - 구민회관과 회의실을 ‘스페이스 마켓(스페이스 세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

22) 이하 총무성(2020) “세어 이코노미 활용 핸드북”에서 주요 내용 발췌

- 보육시설을 늘리는 대신 ‘AsMama’(보육셰어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개개인의 육아분담 서비스 기능을 도입
-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활성화: 유희공공자원, 유희자산(빈 집 및 미활용 인적 자원)을 재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참가를 유도
 - 육아를 마친 여성을 ‘Anytimes’의 가사대행의뢰서비스에 참가시켜, 직장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
 - 빈 집을 Airbnb의 숙박시설로서 대여하여 유희자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

□ 충북의 셰어링 사업 추진과정의 시사점

- ① 준비기: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과제의 해결을 향해 셰어링 사업의 구상을 정리 후 사업화 검토하는 시기
- ② 실시기: 셰어링 사업의 상세한 사업계획을 작성 후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시기
- ③ 계속검토기: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실시한 이후, 사후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 셰어링사업으로서 계속성을 판단하는 시기
 - a. 셰어링사업의 구상-지역 과제의 해결을 향한 셰어링 사업의 구상
 - b. 사업화의 검토 - 추진체제의 구축, 사업 스킴의 검토
 - c. 사업계획의 작성- 매칭 구조 작성, 제도면 정리, 안전면의 시책
 - d. 셰어링 사업의 실시- 플랫폼의 운영, 인지도 향상
 - e. 사업의 계속, 개선- 모니터링 피드백, 사업계속성의 담보

제 4 장

충북의 공유경제 인식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제2절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결과

제3절 충북도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제4절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04 충북의 공유경제 인식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 충청북도 공유경제 현황 조사 및 충청도민 인식 조사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목표는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성공적인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비전 및 전략, 핵심 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음
- 효과적인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한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현황 및 충청도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파악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우선,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경제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업안의 도출을 위해 조례 제정 이후 현재 충청북도 시·군에서 수립하여 시행 중인 공유경제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공유경제 경험 여부, 공유경제의 역할, 효과 등에 대한 인식,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별 수요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이러한 현황조사와 충청도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비전과 전략,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각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안을 도출하고자 함

□ 공유경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1차)의 수립을 위해 2024년 현재 충청북도 전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함

- 충청북도 시와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유경제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 충청북도 시와 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였음
 -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조사는 충청북도 3개 시와 8개 군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중 실시되었음
 - 현황 조사는 현황조사표를 충청북도 내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사업담당 부서에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현황조사표는 공유경제 정책사업과 관련한 사업명, 제공서비스, 사업기간(개시년도), 주요 정책수혜대상, 사업예산규모, 사업유형(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추정) 이용자수, 사업방식(직영 또는 위탁 등), 관련부서, 참여 민간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충청북도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 이러한 계획의 정책방향 및 세부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충북도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사업별 수요, 참여 의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북도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충청북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11개 시·군 도민 2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공유경제 사업에 대한 수요, 공유경제 참여 의지, 공유경제에 대한 충청북도 정책방향에 대한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도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설문을 위한 표본설계는 충청북도 사회조사 표본 설계에서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을 참고하였음
 - 구체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층화 집락추출법(행정구역 및 인구/가구/거처 변수 고려)을 활용하여 충청북도 시·군 거주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설문조사는 2024년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16일간 수행되었으며 온라인 (Googleform)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음

| 표 4-1 | 공유경제 설문조사 주요문항 내용

구분	설문항목
공유경제의 인지 및 경험	공유경제 인지, 공유경제 경험, 충북 공유경제 경험
공유경제 경험 유형	물품, 시설(공간), 이동수단, 재능 및 일자리, 금융 공유
공유경제 이용 태도	공유경제 이용 이유, 전반적 만족도, 주변 추천 여부
공유경제 이용 태도	공유경제 미경험 이유, 공유경제 향후 사용의향
서비스 접근방식	스마트폰 앱, 유/무선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
공유경제 효과/사용	공유경제 효과, 공유경제 사용
공유경제 현황/전망	서비스 활성화 정도, 향후 발전 전망
공유경제 영향요인	활성화 저해 요인
공유경제 정책방향	공유경제를 위한 도의 역할(홍보, 지원, 제도개선 등)
공유경제 사용의향	유형별(물품, 시설, 이동수단, 재능 및 일자리 등)
공유경제 공급의향	유형별(물품, 시설, 이동수단, 재능 및 일자리 등)
공유경제 역할/선호	공유경제의 역할, 공유경제에 대한 선호

제2절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결과

- 본 절에서는 충청북도 본청을 포함하여 시·군 및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내 공공부분에서 실시 중인 공유경제 사업의 파악을 위해 충청북도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 조사표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함
 -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는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충청북도 내부망을 통해 배포되어 온라인을 통해 회수함
 - 조사항목은 사업명, 제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포함

표 4-2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개요

	내 용
조사대상	•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공공)기관
조사기간	• 2024년 8월 26일 - 9월 6일
조사방법	• 충청북도 내부망 통해 조사표 배부 및 온라인 회수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 사업명, 제공서비스, 사업기간(개시년도), 주요 정책수혜대상, 사업예산규모, 사업유형(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추정) 이용자수, 사업 방식(직영 또는 위탁 등), 관련부서, 참여 민간기관

1. 정책사업 조사응답 현황

- 조사결과 18개 공공기관(본청, 3개 시청, 7개 군청 및 면사무소, 시립도서관 등 6개 공공기관)에서 본 조사에 응답하여 78개의 공유경제 정책사업이 확인됨
 - 충청북도 내 3개 시(청주, 충주, 제천)뿐만 아니라 6개 군(옥천, 영동, 진천, 보은, 증평, 음성, 단양)에서 조사에 응답
 - 시와 군 외에 제천시립도서관, 진천 및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 출장소 등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응답하였음

| 표 4-3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응답 현황

소속	빈도	비율(%)
충청북도 본청	3	3.9
청주시청	1	1.3
제천시청	5	6.4
충주시청	3	3.9
옥천군청	20	25.6
영동군청	10	12.8
진천군청	7	9.0
보은군청	6	7.7
증평군청	6	7.7
음성군청	4	5.1
단양군청	1	1.3
단양군 영춘면	1	1.3
제천시립도서관	1	1.3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	1.3
옥천군농업기술센터	6	7.7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1.3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1	1.3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1	1.3
Total	78	100.0

- 응답기관 별로 살펴보았을 때 공유경제 정책사업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옥천군(20개 사업)이었으며 영동군(10개)과 진천군(7개)이 뒤를 따르고 있음
-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공유경제 관련 3개 정책사업이 보고되었고 제천시 5개 사업, 충주시 3개, 청주시 1개로 충청북도 내 3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유경제 사업이 다른 지역(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유형 및 수혜대상 현황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유형은 공간공유의 비율이 44.9%(35건)으로 가장 높고 지식 및 재능공유(41.0%, 32건), 물건공유(12.8%, 10건) 순으로 확인됨
 - 충청북도 공공부분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간공유는 회의실, 강의실, 사무실, 동아리실, 체육시설, 귀농귀촌 주거시설, 주차장, 공연장 등을 포함
 - 지식 및 재능 공유의 경우 농촌일손지원, 도시농부 육성, 아동돌봄 등이 해당
 - 물건공유는 농기계 공유, 연구장비, 사무용품(파쇄기 등)을 포함
 - 교통공유는 옥천군에서 제공되고 있는 택시공유 사업(다람쥐 택시)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 불편지역 택시지원 사업임

표 4-4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공간공유	35	44.9
지식 및 재능공유	32	41.0
물건공유	10	12.8
교통공유	1	1.3
합계	78	100.0

- 충청북도 지자체(시군)별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 지역에서는 공간공유 및 지식공유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군 지역에서는 공간공유, 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물건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지자체 자체 응답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청에서는 공유경제 관련하여 공간, 교통, 지식공유 유형의 정책사업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충청북도 내 3개 시의 경우 시청에서 정책사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공간공유와 지식공유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군 지역의 경우 공간 및 지식공유 사업뿐만 아니라 물건공유 사업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옥천군의 경우 공간공유, 지식공유, 물건공유 외에 군민을 위한 교통공유 서비스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아래 [표 4-5]에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형별 공유경제 정책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표 4-5 | 충청북도 지자체별 공유경제 정책사업 유형

(단위: 개, %)

구분	공간공유	교통공유	물건공유	지식공유	계
충북도청	3(50)	0(0)	2(33.33)	1(16.67)	6(100)
청주시	0(0)	0(0)	0(0)	1(100)	1(100)
충주시	1(33.33)	0(0)	0(0)	2(66.67)	3(100)
제천시	6(100)	0(0)	0(0)	0(0)	6(100)
옥천군	8(30.77)	1(3.85)	4(15.38)	13(50)	26(100)
영동군	6(60)	0(0)	1(10)	3(30)	10(100)
진천군	6(75)	0(0)	1(12.5)	1(12.5)	8(100)
보은군	2(33.33)	0(0)	1(16.67)	3(50)	6(100)
음성군	0(0)	0(0)	1(25)	3(75)	4(100)
증평군	2(33.33)	0(0)	0(0)	4(66.67)	6(100)
단양군	1(50)	0(0)	0(0)	1(50)	2(100)
계	35(44.87)	1(1.28)	10(12.82)	32(41.03)	78(100)

- 충청북도 공공부문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은 일반주민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농업인, 기업, 청소년, 각종 단체 등을 포함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에 따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8건 (23.08%)으로 확인됨
 - 한편, 공유경제 사업에 따라 지역주민 중 특정 대상을 명시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바, 농업인 대상 사업(14건)이 가장 큰 비중 (17.95%)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기업(11건, 14.1%), 청소년(8건, 10.26%), 각종단체(4건, 5.13%), 부모 및 자녀(4건, 5.13%), 구직자 및 기업(3건, 3.85%), 대학생(3건, 3.85%)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표 4-6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수혜대상

대상	빈도	비율(%)
일반주민	18	23.08
농업인	14	17.95
기업	11	14.1
청소년	8	10.26
각종단체	4	5.13
부모,자녀	4	5.13
구직자,기업	3	3.85
대학생	3	3.85
아동	3	3.85
예비귀농귀촌인	3	3.85
구직자	1	1.28
마을	1	1.28
비농업인,농가	1	1.28
소기업	1	1.28
아동및청소년	1	1.28
어린이	1	1.28
합계	78	100.00

3. 사업방식 및 관련부서 현황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사업방식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 (직영)하는 경우가 57.7%(4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났으며 민간에 의해 수행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공유경제 정책사업이 공공부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직영사업(45건, 57.7%)과 공기간 위탁대행(7건, 9.0%) 방식으로 확인됨
 - 반면, 민간에 사업이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19건(24.4%)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혼합(직영 및 민간) 1건(1.3%), 기타(마을회 운영 등) 6건(7.7%)으로 조사 되었음

| 표 4-7 | 충청북도 공공부분 공유경제 사업의 사업방식

구분	빈도(건)	비율(%)
직영	45	57.7
공기관 위탁대행	7	9.0
민간위탁	19	24.4
혼합	1	1.3
기타	6	7.7
합계	78	100.0

- 한편,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주관 또는 관련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농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농산과, 문화예술산업과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음
-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조사된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사업 중 16건을 수행하거나 관련되어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농업정책과(12건, 19.05%), 일자리정책과(11건, 17.46%), 스마트농산과(6건, 9.32%)로 주로 지역 특성과 관련한 농업이나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가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문화예술산업과(4건, 6.35%), 미래인재육성과(3건, 4.76%), 소상공인정책과(2건, 3.17%), 혁신도시발전과(2건)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부 공유경제 정책사업 관여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음

제3절 충북도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충청북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시·군 거주도민 199명의 설문 결과를 확보하였음
 - 1차 설문조사 결과 344부의 설문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회수되었음
 - 이 중 110건의 응답지의 경우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34건의 경우 불성실 응답항목이 존재하여 제외하였음
- 일부 지역에서 표본설계 시 설정되었던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음

1.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

-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 성별, 나이, 학력과 관련된 일반현황 분석결과가 아래 [표 4-8]에 제시되어 있음
- (거주지역) 응답자의 18.1%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충주시 11.6%, 제천시 10.6%의 순으로 나타남
-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음성군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 및 진천군 8.5%, 영동군 7.5%, 괴산군 7.0% 보은군 및 증평군 6.5%, 그리고 단양군이 6.0%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종합하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거주지역 중 시지역은 40.3%, 군지역은 59.7%임
- (성별) 응답자 중 남성은 4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52.3%인 것으로 확인됨
- (연령대) 연령대별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33명으로 22%, 30대가 50명으로 33.3%, 40대가 43명으로 28.7%, 50대 이상이 24명으로 16%인 것으로 조사됨

- (학력) 설문응답자 중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1명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 재학 또는 졸업이 71.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반면, 대학원 재학 이상은 12.8%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 표 4-8 |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역	청주시	36	18.1
	충주시	23	11.6
	제천시	21	10.6
	보은군	13	6.5
	옥천군	17	8.5
	영동군	15	7.5
	증평군	13	6.5
	진천군	17	8.5
	괴산군	14	7.0
	음성군	18	9.1
	단양군	12	6.0
	소계	199	100.0
성별	남자	95	47.7
	여자	104	52.3
	소계	199	100.0
나이	20대	33	22.0
	30대	50	33.3
	40대	43	28.7
	50대	20	13.3
	60대 이상	4	2.7
	소계	15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5
	고등학교 졸업	30	15.3
	대학 재학 또는 졸업	140	71.4
	대학원 재학	7	3.6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18	9.2
	소계	196	100.0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	공무원	108	54.1
	서비스, 판매	13	6.5
	농업/어업	14	7.1
	사무직	39	19.7
	관리, 전문직	11	5.6
	현장(생산)직	3	1.5
	학생	1	0.5
	무직	6	3.0
	기타	4	2.0
	소계	199	100.0

2.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 및 이용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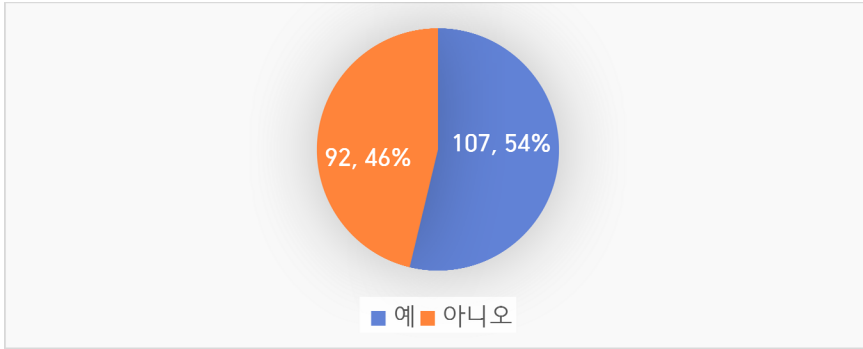
1) 경험여부

-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에서는 공유경제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제시한 후 공유경제에 대해 실제 경험해보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음
- 아래 [표 4-9] 공유경제 경험 여부 결과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대해 인지하고 (들어보거나 알고있는) 응답자 중 공유경제를 경험해본 응답자는 53.8%(107명) 이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2%(92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9 | 공유경제 경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07	53.8
아니오	92	46.2
계	199	100.0

| 그림 4-1 | 공유경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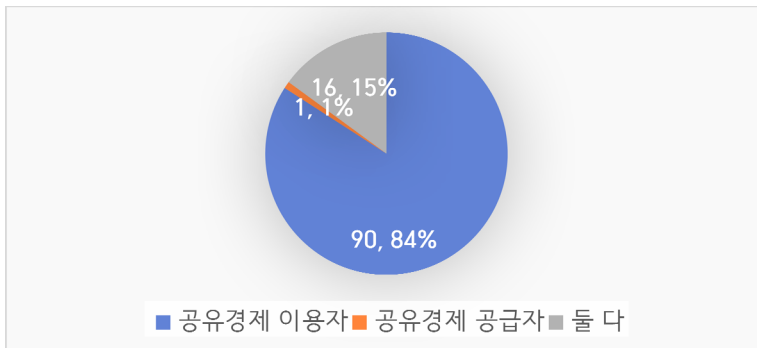


- 공유경제 경험자 중 공유경제의 참여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 84.1%(90명)는 공유경제 이용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0.9%(1명)만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5%의 응답자의 경우 이용자와 공급자로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 표 4-10 | 공유경제 참여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공유경제 이용자	90	84.1
공유경제 공급자	1	0.9
둘 다	16	15.0
계	107	100.0

| 그림 4-2 | 공유경제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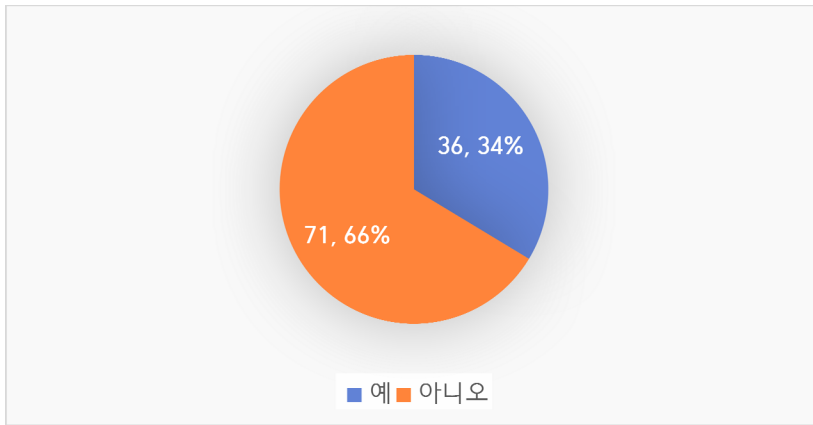
2) 충청북도 공유경제 이용경험

-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33.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충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66.4%(71명)는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표 4-11 | 충청북도 공유경제 경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6	33.6
아니오	71	66.4
계	107	100.0

| 그림 4-3 | 공유경제 경험 여부(충청북도)



- [표 4-12]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사이에서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 중 가장 이용빈도가 높았던 것은 개방된 청사시설 이용(15.3%)이었으며 공동 육아 나눔터(14.1%), 농기계임대사업 및 공동 연구장비 공유사업(11.3%)순인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시된 충청북도 공유경제 사업 중에서 응답자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던 것은 공간공유 유형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고 재능/일자리 공유 27%, 물품/장비공유 23.6%인 것으로 나타남

| 표 4-12 |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공간 공유	미래여성플라자 공유시설 대관	2	2.4
	공동 육아 나눔터	12	14.1
	청소년 창업공간 / 복합문화센터 설치	9	10.6
	열린 학사 운영	3	3.5
	청사시설 개방 운영	13	15.3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3	3.5
재능 또는 일자리 공유	충북 인재 멘토링	3	3.5
	충북인재 재능나눔	5	5.9
	도내 고교생 멘토링 지원사업 협업	3	3.5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5	5.9
	충북형 도시농부육성	7	8.2
물품 장비공유	농기계 임대사업	10	11.8
	공동 연구장비 공유사업	10	11.8
계		85	100.0

- 이러한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다(35.1%)와 매우 높다(16.2%)의 긍정적 반응이 51.3%로 낮다(10.8%)와 매우 낮다(5.4%)의 부정적 반응(16.2%)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만족도 평균은 3.46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며 긍정적 반응으로 확인됨

| 표 4-13 | 충청북도 공유경제 경험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높다	6	16.2
높다	13	35.1
보통이다	12	32.4
낮다	4	10.8
매우 낮다	2	5.4
계	37	100.0
평균(표준편차)	3.4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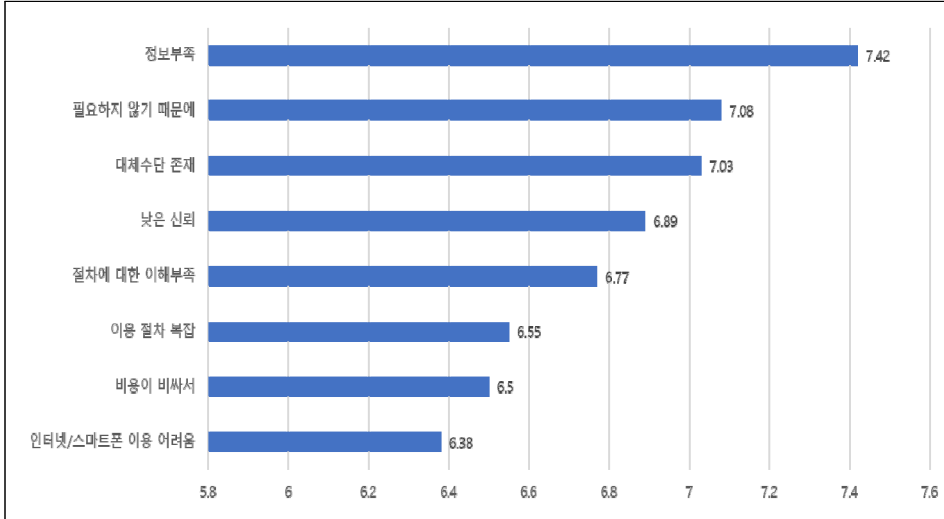
3)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

- 설문에 응답한 충청북도민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빈도 및 평균이 높은 것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서(정보부족)인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이어 공유경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아니어도 다른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공유경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와 ‘공유경제를 사용하는 절차를 알지 못해서’를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의 절차나 비용, 접근 방식을 공유경제 사용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기타 의견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부족’, ‘직장인 이용 불가 시간 및 직장 인근 이용시설 부재’, ‘접근성 부족’ 등이 확인되었음

【 표 4-14 】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우선순위 선택 - 3순위 까지)

구분	우선순위	빈도(명)	평균(표준편차)
공유경제(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서(정보부족)	1	60	7.42 (0.74)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	48	7.08 (0.94)
공유경제가 아니어도 다른 적절한 수단이 존재해서	3	58	7.03 (0.77)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4	35	6.89 (0.83)
공유경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용하는 절차를 알지 못해서	5	39	6.77 (0.67)
이용 절차가 까다로워서	6	20	6.55 (0.60)
비용이 비싸서	7	6	6.50 (0.84)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8	8	6.38 (0.74)
계		274	-

| 그림 4-4 |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



4) 공유경제 서비스 향후 이용에 대한 의사

- 설문결과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경험해 본 경우 추후 재경험이나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 경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8.1%의 응답자가 긍정적(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인 반응을 보였음
-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6.4%와 부정적(아니다)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5.6%인 것으로 확인됨

| 표 4-15 | 공유경제 서비스 (재)경험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36	18.3
그렇다	98	49.8
보통이다	52	26.4
아니다	11	5.6
매우 아니다	-	-
계	197	100.0
평균(표준편차)	3.81(0.80)	

-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공유경제 서비스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추후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의사를 분석한 결과 경험자의 이용 의사 평균(3.98)이 미경험자(3.60)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공유경제 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유의수준 0.01)으로 확인되었음
 -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공유경제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공유 경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함

| 표 4-16 | 공유경제 (재)경험 의사 (경험자와 미경험자)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t(p)
경험자	25 (12.7)	58 (29.4)	19 (9.6)	4 (2.0)	0 (0)	106 (53.8)	3.98 (0.76)	3.39*** (0.001)
미경험자	11 (5.6)	40 (20.3)	33 (16.8)	7 (3.6)	0 (0)	91 (46.2)	3.60 (0.80)	
합계	36 (18.3)	98 (49.7)	52 (26.4)	11 (5.6)	0 (0)	197 (100.0)		

- 한편, 공유경제 서비스 (재)경험 의사에 대해 시와 군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시의 평균이 군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표 4-17 | 공유경제 재경험 의사 (시군 차이)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t(p)
시	18 (9.1)	35 (17.8)	22 (11.2)	4 (2.0)	79 (40.1)	38 (100.0)	3.85 (0.83)	0.59 (0.556)
군	18 (9.1)	63 (32.0)	30 (15.2)	7 (3.6)	118 (59.9)	52 (100.0)	3.78 (0.77)	
합계	36 (18.3)	98 (49.7)	52 (26.4)	11 (5.6)	197 (100.0)	90 (100.0)		

3. 공유경제 이용 방식

-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로서 경험에 관한 설문 결과는 [표 4-18]과 같음
- (공유경제 이용자) 제시된 공유경제 서비스 중 응답자의 이용 빈도가 가장 많았던 것은 공유주차장(9.8%, 44명)이었으며 숙박공간 및 승차공유(카풀 등)이 각각 8.5%, 차량공유 7.8%, 생활용품 공유(기타) 4.5% 순으로 확인됨
- 공유경제 이용 경험 빈도를 서비스 유형별로 확인해보면 시설(공간)공유가 38.7%로 가장 많고, 이동수단 공유 24.3%, 재능 및 일자리 공유 16%, 물품 공유 13%인 것으로 나타남
- (공유경제 공급자) 공유경제 공급자로서 경험 응답을 살펴보면 생활용품공유(기타)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것(10.5%, 6명)으로 나타났으며 공급 경험이 없는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비슷한 빈도를 유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생활용품 공유(아동용품), 자전거 공유, 다른 이동수단 공유, 재능/지식 서비스, 멘토링, 온라인 교육, 일자리 공유, 금융, 육아 나눔터(각각 8.8%)서비스 공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18】 공유경제 경험 서비스

구분		이용경험 빈도(비율)	공급경험 빈도(비율)
물품 공유	생활용품 공유 (아동용품 - 장난감, 육아 용품 등)	18 (4)	5 (8.8)
	생활용품 공유 (취미용품 - 낚시대 등)	7 (1.6)	1 (1.8)
	생활용품 공유 (기타 생활용품 - 옷, 식기 등)	20 (4.5)	6 (10.5)
	농기계 공유	12 (2.7)	0 (0)
	연구장비 공유	1 (0.2)	0 (0)
시설 (공간) 공유	공유 주차장	44 (9.8)	1 (1.8)
	창업공간/제조공유공간	8 (1.8)	0 (0)
	체육관	27 (6)	1 (1.8)
	회의실(비즈니스 공간)	28 (6.3)	1 (1.8)
	강의실 / 강당	16 (3.6)	1 (1.8)
	(공유) 부엌	11 (2.5)	1 (1.8)
	숙박 공간	38 (8.5)	0 (0)
이동수단 공유	승차 공유(카풀 등)	38 (8.5)	0 (0)
	차량 공유	35 (7.8)	0 (0)
	자전거 공유	18 (4)	5 (8.8)
	다른 이동수단 공유(공공 킥보드 등)	18 (4)	5 (8.8)
재능 및 일 자리 공유	재능/지식 서비스	18 (4)	5 (8.8)
	멘토링 서비스	18 (4)	5 (8.8)
	온라인 교육(예: Mooc 등)	18 (4)	5 (8.8)
	일자리 공유(지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 등	18 (4)	5 (8.8)
	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18 (4)	5 (8.8)
	육아 나눔터	18 (4)	5 (8.8)
	계	447 (100)	57 (100)

○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앱) (46.2%, 86명)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활용(홈페이지접수) 29.6%, 직접 방문(공유경제 서비스 제공기관) 9.7%, 공공기관 직접방문 8.0%, 유/무선 전화 이용 6.5% 순으로 나타남

| 표 4-19 | 공유경제 서비스 접근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스마트폰 (앱) 활용	86	46.2
인터넷 활용(홈페이지 접속)	55	29.6
직접 방문(공유경제 서비스 제공기관)	18	9.7
공공기관 직접 방문(도청, 군청, 읍사무소 등)	15	8.0
유/무선 전화	12	6.5
계	186	100.0

- 이러한 전반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평균 3.66으로 보통(3.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공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응답 중 긍정적인 반응은 높다 50.0%, 매우 높다 14.4%, 총 64.4%로 부정적인 반응 12.5%(낮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균(3.66)은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균(3.4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표 4-20 | 공유경제 서비스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높다	15	14.4
높다	52	50.0
보통이다	24	23.1
낮다	13	12.5
매우 낮다	0	0.0
계	104	100.0
평균(표준편차)	3.66 (0.88)	

- 추가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 시와 군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는 바, 시의 평균(3.77)이 군의 평균(3.59)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표 4-21 | 공유경제 서비스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시	3.77	0.13
군	3.59	0.12
t(p)	1.02 (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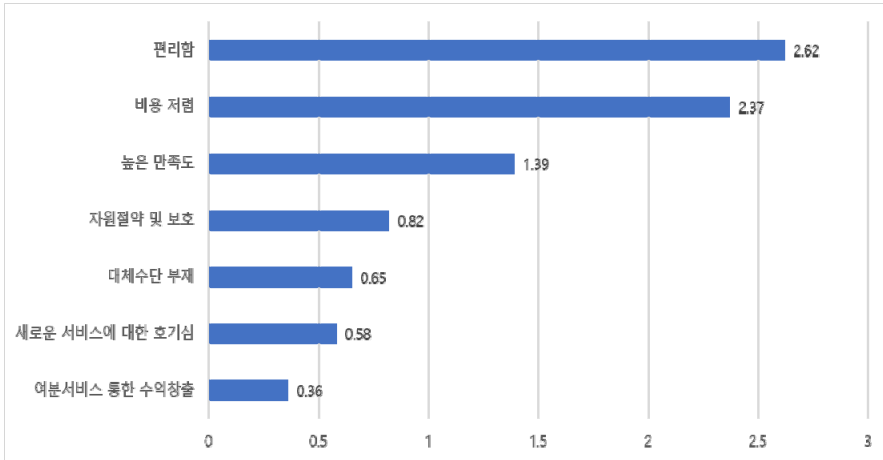
4.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 및 추천 의향

-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를 높은 빈도와 우선순위로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이유로 들었고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밖에도 자원의 절약 및 보호(0.82), 다른 대체 수단의 부재(0.65),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0.58), 여분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0.36)이 뒤를 이었음
 - 기타의견으로 ‘단기사용에 따른 비용절약’, ‘가성비가 좋아서’ 등의 비용 측면의 이유가 언급되었는데 다른 사용 이유를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이유에 해당함

| 표 4-22 |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 (우선순위 선택 - 3순위 까지)

구분	우선순위	빈도(명)	평균
편리하기 때문에	1	86	2.62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2	77	2.37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3	48	1.39
자원의 절약 및 보호를 위해	4	28	0.82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	22	0.65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라서 호기심에	6	20	0.58
여분의 서비스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7	12	0.36
계		293	-

| 그림 4-5 |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



- 공유경제 서비스 경험 후 공유경제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67.62% (71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에, 부정적 반응은 9.52%(10명)인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설문 응답자들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가능함

| 표 4-23 | 공유경제 서비스 추천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20	19.05
그렇다	51	48.57
보통이다	24	22.86
아니다	9	8.57
매우 아니다	1	0.95
계	105	100.00
평균(표준편차)	3.76 (0.89)	

- 또한, 공유경제서비스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80.48%의 응답자들이 긍정적(도움이된다 및 매우 도움이된다)인 반응을 보였음
 - 보통의 경우 18.1%인 반면,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11.43%에 불과하였음

| 표 4-24 |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역 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도움이 된다	25	23.81
도움이 된다	49	46.67
보통이다	19	18.1
거의 도움이 안된다	12	11.43
전혀 도움이 안된다	0	0.0
계	105	100
평균(표준편차)	3.83 (0.92)	

5. 공유경제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1) 공유경제의 활성화 정도 인식

- 충청북도 지역의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정도에 대한 설문의 평균은 2.74로서 보통(3.0)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많다(매우 많다 및 많다)는 의견이 15.6%인 반면, 없다는 의견(거의 없다 및 전혀 없다)이 41.4%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충청북도 지역에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표 4-25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많다	7	3.5
많다	24	12.1
보통이다	85	42.9
거의 없다	75	37.9
전혀 없다	7	3.5
계	198	100.0
평균(표준편차)	2.74(0.85)	

- 시와 군 차원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시 지역의 평균(2.86)이 군 지역의 평균(2.6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다시 말해, 군 지역에서 공유경제 서비스의 활성화 정도가 시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확인됨

| 표 4-26 | 공유경제 활성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많다	어느 정도 많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평균(표준편차)	t(p)
시	3 (1.5)	9 (4.6)	42 (21.2)	24 (12.1)	1 (0.5)	79 (39.9)	2.86 (0.78)	1.61* (0.091)
군	4 (2.0)	15 (7.6)	43 (21.7)	51 (25.8)	6 (3.0)	119 (60.1)	2.66 (0.08)	
합계	7 (3.5)	24 (12.1)	85 (42.9)	75 (37.9)	7 (3.5)	198 (100.0)		

- 한편, 공유 경제 서비스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적 및 긍정적) 반응이 64.7%인 반면 부정적 반응은 7.6%에 그치고 있음
- 해당 설문에 대한 평균은 3.73으로 보통(3.0)을 상회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민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의 향후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4-27 | 공유경제 서비스의 향후 발전 전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긍정적이다	35	17.7
긍정적이다	93	47.0
보통이다	55	27.8
부정적이다	11	5.6
매우 부정적이다	4	2.0
계	198	100.0
평균(표준편차)	3.73(0.89)	

- 공유 경제 서비스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시와 군 사이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시의 평균이 3.85로 군의 평균 3.65보다 높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의 경우 공유경제 자원이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를 통해 거주 주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이 군 지역의 주민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음

| 표 4-28 | 공유경제 발전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보통 이다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평균(표준 편차)	t(p)
시	18 (9.1)	36 (18.2)	20 (10.1)	5 (2.5)	0 (0.0)	79 (39.9)	3.85 (0.85)	1.57* (0.091)
군	17 (8.6)	57 (28.8)	35 (17.7)	6 (3.0)	4 (2.0)	119 (60.1)	3.65 (0.91)	
합계	35 (17.7)	93 (47.0)	55 (27.8)	11 (5.6)	4 (2.0)	198 (100.0)		

2)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의 저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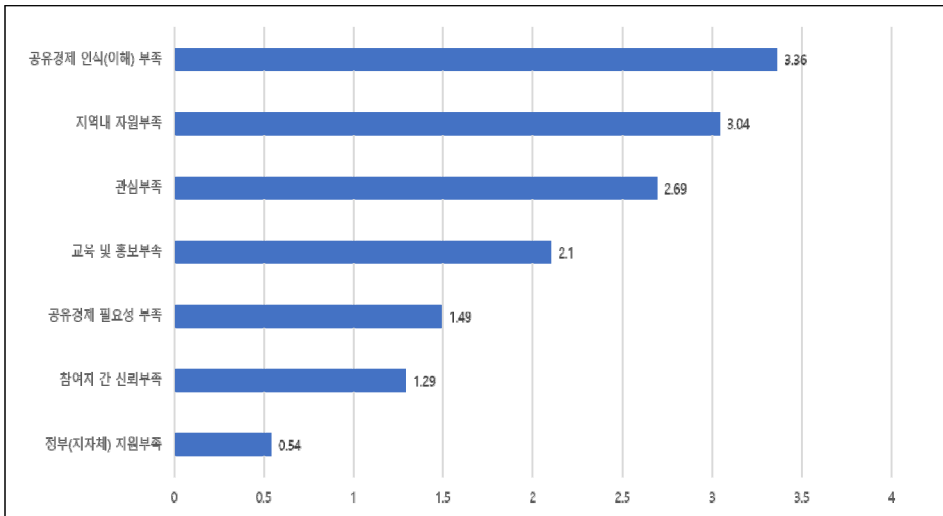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의 저해요인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이해)부족이 가장 큰 저해요인(3.36)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내 공유 경제 자원 부족(3.04),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2.69)이 뒤를 잇고 있음

- 한편, 공유경제 참여자간 신뢰 부족(1.29)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족(0.54)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해요인으로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인원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표 4-29 |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요인

구분	우선순위	빈도(명)	평균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이해) 부족	1	131	3.36
지역 내 공유경제 자원 부족	2	115	3.04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	3	113	2.69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4	85	2.10
공유경제 필요성 부족	5	63	1.49
공유경제 참여자 간 신뢰 부족	6	45	1.29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족	7	22	0.54
계		574	-

| 그림 4-6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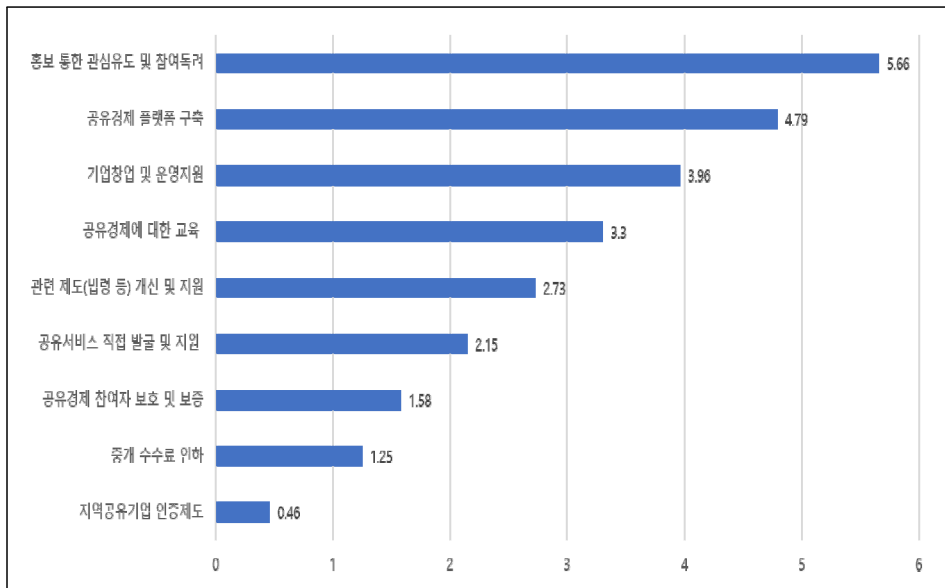
6. 공유경제 서비스를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 인식

- 공유경제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 관련 설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홍보를 통한 도민의 관심 유도 및 참여 독려(5.66)를 가장 우선 순위의 정책과제로 선택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앞의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부족 및 관심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네 번째 순위로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3.30)이 제시되었는 바 이러한 역할 역시 공유경제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에 대한 해결책 필요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이어,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4.79),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3.96)을 선정하여 공유경제의 제도화 내지는 생태계 위해 지자체가 민간영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공유경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2.73) 역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순위가 높지는 않으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직접 공유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2.15)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밖에 공유경제 기업 또는 참여자와 공유경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위에 제시된 충청북도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선호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특정계층만을 위한 공유경제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및 공유경제 관련 규제 강화(스쿠터 면허 및 헬멧 착용의무)에 관한 의견이 제시됨

| 표 4-30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

구분	우선순위	빈도(명)	평균
홍보를 통한 도민의 관심 유도 및 참여 독려	1	122	5.66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2	106	4.79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3	86	3.96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4	73	3.30
공유경제 관련 제도(법령 등) 개선 및 지원	5	60	2.73
공유서비스 직접 발굴 및 지원	6	49	2.15
공유경제 참여자 보호 및 보증	7	37	1.58
중개 수수료 인하	8	29	1.25
지역 공유기업 인증제도 운영	9	11	0.46
계		573	-

| 그림 4-7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충청북도의 역할)



7.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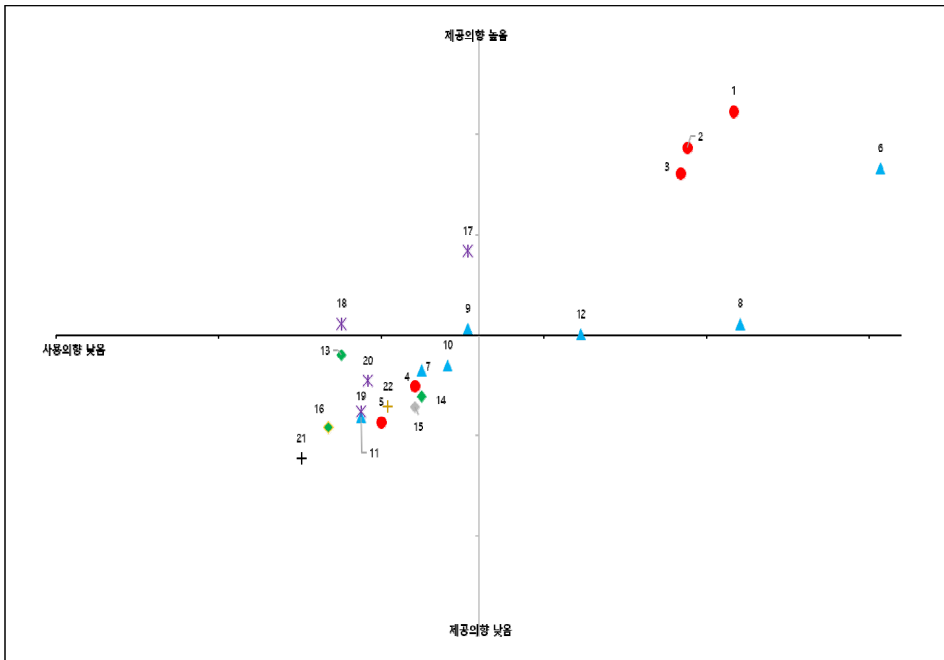
- 다음 [표 4-31]에는 설문에 응답한 충청북도민이 수요를 원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와 공급 가능한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선택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공유경제 서비스 수요 의도) 우선 서비스 수요 의향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충북도민이 가장 수요를 원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공유주차장(0.93, 97명), 체육관(0.72, 87명)으로 시설 및 공간 공유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생활용품 공유 관련하여 아동용품(0.71, 65명), 취미용품(0.64, 73명), 기타 생활용품(0.63, 79명)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숙박공간(0.48, 57명), 재능/지식 서비스(0.44, 40명)도 수요가 존재하였음
- 반면 농기계 공유(0.23, 41명), 일자리 공유(0.16, 30명), 금융(0.06, 11명)에 대한 수요 의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 의도) 다음으로, 설문 응답자의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 의향을 살펴본 결과 생활용품(기타)(0.74 66명), 생활용품(취미용품)(0.67, 76명), 공유 주차장(0.63, 65명) 순으로 공급 여력(의향)있는 것으로 타나났음
- 또한, 생활용품(아동용품), 재능/지식서비스, 체육관, 멘토링 서비스, 회의실, 숙박공간, 승차공유(카풀 등) 순으로 공급의도가 확인되었음
-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충청북도 민간 차원에서 물품뿐만 아니라 시설(공간), 재능 및 일자리, 이동수단 등 모든 유형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희 물품 또는 서비스 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표 4-31 | 경험 또는 참여하고 싶은 공유경제 서비스

구분		수요 의도			공급 의도		
		우선 순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우선 순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시설 (공간)	공유 주차장	1	97	0.93 (0.52)	3	65	0.63 (0.33)
시설 (공간)	체육관	2	87	0.72 (0.40)	6	37	0.33 (0.17)
물품	생활용품 공유 (아동용품 - 장난감, 육아 용품 등)	3	65	0.71 (0.39)	4	85	0.62 (0.39)
물품	생활용품 공유 (취미용품 - 낚시대 등)	4	73	0.64 (0.38)	2	76	0.67 (0.38)
물품	생활용품 공유 (기타 생활용품 - 옷, 식기 등)	5	79	0.63 (0.40)	1	66	0.74 (0.38)
시설 (공간)	숙박 공간	6	57	0.48 (0.24)	9	47	0.31 (0.20)
재능 및 일자리	재능/지식 서비스	7	44	0.31 (0.18)	5	69	0.47 (0.30)
시설 (공간)	회의실(비즈니스 공간)	8	40	0.31 (0.16)	8	40	0.32 (0.17)
시설 (공간)	강의실 / 강당	9	45	0.28 (0.18)	11	28	0.21 (0.12)
시설 (공간)	창업공간/제조공유공간	10	32	0.24 (0.15)	12	30	0.24 (0.13)
이동 수단	차량 공유	11	34	0.24 (0.13)	15	30	0.19 (0.15)
물품	농기계 공유	12	41	0.23 (0.15)	14	28	0.21 (0.12)
이동 수단	자전거 공유	13	32	0.23 (0.13)	16	38	0.17 (0.14)
	육아 나눔터	14	25	0.19 (0.11)	17	24	0.17 (0.08)
물품	연구장비 공유	15	22	0.18 (0.09)	20	19	0.14 (0.08)
재능 및 일자리	일자리 공유(지원)	16	30	0.16 (0.11)	13	42	0.22 (0.15)
재능 및 일자리	온라인 교육(예: Mooc 등)	17	34	0.15 (0.11)	18	25	0.16 (0.09)
시설 (공간)	(공유) 부엌	18	19	0.15 (0.07)	19	18	0.15 (0.07)
이동 수단	승차 공유(카풀 등)	19	21	0.12 (0.10)	10	39	0.27 (0.21)
재능 및 일자리	멘토링 서비스	20	16	0.12 (0.06)	7	40	0.33 (0.15)
이동 수단	다른 이동수단 공유(공공 킷보드 등)	21	20	0.10 (0.05)	21	19	0.13 (0.09)
	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22	11	0.06 (0.03)	22	9	0.07 (0.03)
계			924	-		874	-

- 아래 [표 4-32]와 [그림 4-8]에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수요 의향과 공급 의향을 함께 교차하여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공유경제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우선 활성화 필요 항목과 공급 가능 자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의향과 공급 의향이 높은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우선 대상으로 볼 수 있음(황영모 외, 2015)
 - 예를 들어, 설문에 응답한 충청도민의 경우 생활용품(아동용품, 취미용품, 기타용품)과 공유주차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의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체육관과 숙박공간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향이 높은 편이나 공급의향이 낮으므로 충청북도 내 관련 유희자원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반면 재능지식 서비스나 멘토링서비스의 경우 공급 의향은 있으나 수요 의향이 낮으므로 홍보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여 수요과 공급의 매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림 4-8 | 공유경제 서비스 항목별 수요 및 공급 의도 분포



| 표 4-32 | 공유경제 서비스 항목별 수요 및 공급 의도 분포

구분			평균		표준화값	
			사용 의향	제공 의향	사용 의향	제공 의향
1	물품	생활용품 공유 (아동용품)	0.71	0.74	1.57	2.23
2		생활용품 공유 (취미용품)	0.64	0.67	1.28	1.87
3		생활용품 공유 (기타 생활용품)	0.63	0.62	1.24	1.61
4		농기계 공유	0.23	0.21	-0.39	-0.51
5		연구장비 공유	0.18	0.14	-0.60	-0.87
6	시설 (공간)	공유 주차장	0.93	0.63	2.47	1.66
7		창업공간/제조공유공간	0.24	0.24	-0.35	-0.35
8		체육관	0.72	0.33	1.61	0.11
9		회의실(비즈니스 공간)	0.31	0.32	-0.07	0.06
10		강의실 / 강당	0.28	0.25	-0.19	-0.30
11		(공유) 부엌	0.15	0.15	-0.72	-0.82
12		숙박 공간	0.48	0.31	0.63	0.01
13	이동 수단	승차 공유(카풀 등)	0.12	0.27	-0.84	-0.20
14		차량 공유	0.24	0.19	-0.35	-0.61
15		자전거 공유	0.23	0.17	-0.39	-0.72
16		다른 이동수단 공유(공공 킥보드 등)	0.1	0.13	-0.93	-0.92
17	재능 및 일자리	재능/지식 서비스	0.31	0.47	-0.07	0.83
18		멘토링 서비스	0.12	0.33	-0.84	0.11
19		온라인 교육(예: Mooc 등)	0.15	0.16	-0.72	-0.77
20		일자리 공유(지원)	0.16	0.22	-0.68	-0.46
21	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0.06	0.07	-1.09	-1.23
22	육아 나눔터		0.19	0.17	-0.56	-0.72

제4절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 충청북도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 시, 6개 군, 충북도 산하기관 다수에서 정책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 정책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간공유의 비율이 가장 높고, 지식 및 재능공유, 물건공유, 교통공유 순으로 나타남
 - 공유경제 사업의 수혜 대상은 일반주민 외에도 특정 집단(농업인, 기업,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 방식은 60%에 가까운 사업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민간위탁, 혼합 방식 등도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유경제 정책사업은 지자체 내 특정부서 보다는 다양한 부서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확인됨
- 민간에 의해 공유경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이 낮은 군 지역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이 활발한 것으로 응답결과 확인됨
 - 이러한 응답결과는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부분이 접근하기 힘든 군 지역 등에 공공부분이 이를 보완하여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라 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응답결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 별로 수행되는 정책사업의 유형에 편차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수요의 차이에 따라 공유경제 정책사업의 유형별 빈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시 지역의 경우 공간공유 및 지식 및 재능 공유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데 반해, 군지역의 경우 물건공유 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공유경제 정책사업이 지자체 내의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유사중복사업의 존재, 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등의 부정적 가능성이 존재할 우려 존재함
- 중앙정부(행안부 및 기재부)에서 조사한 충청북도 지역별 공유자원 현황과 비교할 때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 공유경제 정책사업 수행 현황과 괴리가 있었음
 - 시 지역의 경우 다양하고 풍부한 공유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유경제 정책사업 추진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 도민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 설계에 따라 199건(명)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총 설문 응답자 344명 중 31.9%에 해당하는 110명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설문 분석에서 제외됨
 - 이러한 결과는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설문 응답자 중 53.8%는 공유경제를 경험해 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84.1%는 공유경제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3.6%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공유경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설문응답자 중에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 중 가장 이용빈도가 높았던 것은 개방된 청사시설 이용(15.3%)이며 공동 육아 나눔터(14.1%), 농기계 임대 사업 및 공동연구장비 공유사업(11.3%) 순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사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3.46 (보통 3.0)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편이었음
- 설문에 응답한 충청북도민 중 경험해 본 공유경제 서비스는 공유주차장(9.8%), 숙박공간 및 승차공유(각 8.5%), 생활용품(기타) 공유(4.5%)순 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만족도는 3.66이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공유가 38.7%로 가장 많고 이동수단(24.3%), 재능 및 일자리 공유(16%), 물품공유(13%)순이었음
- 충청북도 공유경제 만족도(3.46)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3.66)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공유경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성(2.62), 비용 저렴(2.37), 높은 만족도(1.39)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응답결과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이 67.6%이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80.5%로 나타나 도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정보부족(7.42), 필요하지 않기 때문(7.08), 대체수단 존재(7.03), 신뢰성 부족(6.89),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남(6.77)
 - 이러한 결과는 도민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응답자들은 충청북도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41.4%)이 긍정적 인식(15.6%)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발전 전망에 대해 긍정적 반응(64.6%)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해)부족(3.36), 지역 내 공유경제 자원부족(3.04),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2.69),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2.10) 순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민들은 홍보를 통한 관심유도 및 참여 독려(5.66),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4.79),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3.96),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3.30), 공유경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2.73)순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공유경제 서비스의 수요 의향을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공유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 및 공간 공유와 생활용품 공유 및 숙박공간, 재능/지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 의향과 관련하여 생활용품 및 공유주차장, 재능/지식 서비스, 체육관, 멘토링 서비스 등 민간 차원에서 물품뿐만 아니라 시설(공간), 재능 및 일자리, 이동수단 등 모든 유형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유희자원 제공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공유경제 서비스 수요 의향과 공급 의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충청북도는 유형에 따른 공유경제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활용품 공유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이를 활성화 할 플랫폼 형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설(공간) 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나 공급 의향이 낮으므로 유희자원에 대한 조사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재능/지식 서비스나 멘토링서비스의 경우 공급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홍보 등을 통해 해당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 5 장

충북 공유경제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제1절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제2절 비전 및 추진전략

제3절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제4절 지원체계

05 충북 공유경제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제1절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1. 공유경제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 충청북도는 공간공유, 재능공유, 물품공유 등 여러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사업 성공 경험 보유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의 유희인력을 농촌에 연결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
-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 충청북도는 창업공간 및 복합문화센터, 육아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공유 인프라로 활용

□ 약점(Weaknesses)

- 제도적 기반의 미비
 - 충청북도는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전담 조직이 부족
- 공공 자원의 제한적 활용
 - 충청북도의 공유 가능한 공공자원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자원 분포가 고르지 않음

- 공유경제 개념의 혼동
 -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과 실제 정책 사이에 혼동이 발생(상품권 통합은 엄밀히 말해 공유경제의 본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기회(Opportunities)

-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2021-2040)에서는 공유경제를 신산업 기반으로 인식, 국가 전략 투자 분야로서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확대 가능성
 - 충청북도는 지역 사회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
 -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공유사업 및 콘텐츠 확산에 적합함

□ 위협(Threats)

-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 간의 공유 자원 격차가 크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공유 자원 불균형
-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 공유경제 추진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 구성의 어려움과 책임소재 문제, 참여자 간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정책 도입이 지체

| 표 5-1 | 공유경제 SWOT 분석

	강점(S)	약점(W)
내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사업 성공 경험 보유 •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의 미비 • 공공 자원의 제한적 활용 • 공유경제 개념의 혼동
	기회(O)	위협(T)
외부 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확대 가능성 •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2. SWOT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 세부전략 도출

□ S-O 전략: 다각적 공유자원 발굴

- SO-1: 기 시행 시군 공유사업의 인지도 제고
- SO-2: 도민 인식 바탕 공유자원 발굴
- SO-3: 공유자원화 성공사례 기반 공유자원 발굴

□ W-O 전략: 공유경제 홍보 및 인식 확대

- WO-1: 공유경제 개념의 인식 확대
- WO-2: 생활 속 공유경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인식 확대
- WO-3: 공유경제 착한 역할 홍보를 통한 인식 확대

□ S-T 전략: 공유사업 모델 확산

- ST-1: 유형공유(공간, 도구) 모델 확산
- ST-2: 무형공유(재능, 지식) 모델 확산
- ST-3: 공급형 공유 모델 확산

□ W-T 전략: 공유경제 거버넌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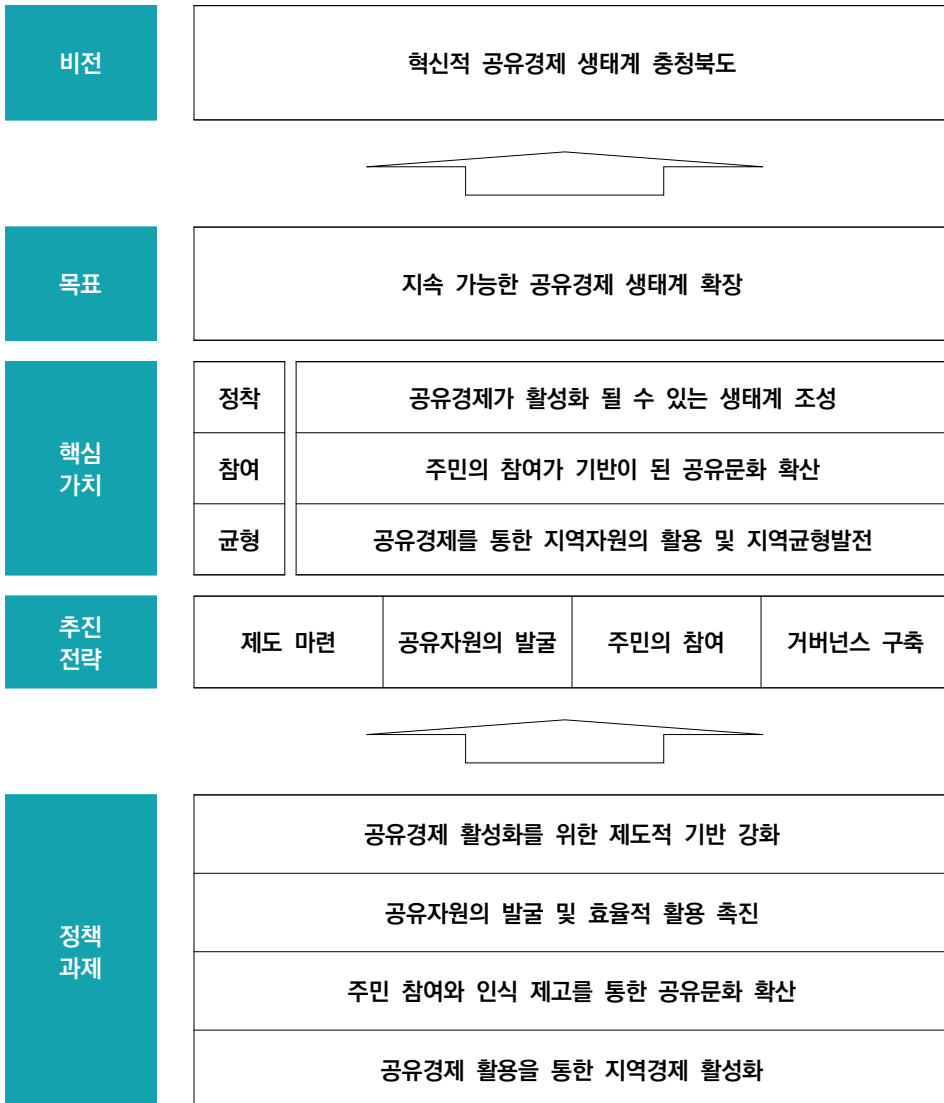
- WT-1: 시군과의 협력적 운영체계 강화
- WT-2: 시민단체와의 협조적 교류 정례화
- WT-3: 인근 시도와의 협력으로 공유경제 광역화 및 시너지 제고

【 표 5-2 】 공유경제 SWOT 분석을 통한 세부전략 도출

내부역량 외부여건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도입 •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등 유사 사업 성공 경험 보유 • 공유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의 미비 • 공공 자원의 제한적 활용 • 공유경제 개념의 혼동
기회(O)	S-O 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확대 가능성 • 모바일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 	<p>SO: 다각적 공유자원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1: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 기반 구축 • SO-2: 공유경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 SO-3: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p>WO: 공유경제 홍보 및 인식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1: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 WO-2: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WO-3: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위협(T)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p>ST: 공유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1: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 ST-1: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 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p>WT: 공유경제 거버넌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1: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WT-2: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조성 • WT-3: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제2절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체계



2. 정책목표

- ①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② 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된 공유문화 확산
- ③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자원의 활용 및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4대 추진 전략

- 전략 ① 공유경제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기반 구축
 -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 공유경제 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 전략 ② 공유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촉진
 -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 지역사회에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전략 ③ 주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통한 공유문화 확산
 -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 전략 ④ 공유경제의 협력적 구축으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문제 해결
 -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제3절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1. 4대 정책과제와 11개 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1. 공유경제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기반 구축	1-1.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1-2. 공유경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1-3.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2. 공유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촉진	2-1.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2-2.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2-3.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3. 주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통한 공유문화 확산	3-1.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3-2.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4. 공유경제의 협력적 구축으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4-1.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4-2.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조성
	4-3.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2. 11개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전략 1 공유경제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기반 구축

1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 공유경제 모델 사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정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충북본청과 충주, 진천만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그 외 9개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임
 - 조사표 조사결과에서는 10개 시군이 공유경제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함에 따라 본청에 조례가 도입되었으므로, 시군의 경우도 공유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의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고 사업별 활성화 조례 제정

- 충청북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추후 오송지역에 설치될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공유자원화시키고, 해당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충북에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기계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모든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님에 따라 공유경제 정책의 일환 정립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의 농업면적은 98,041헥타르로 특별·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기계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화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임

2 공유경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지원

□ 충북 전역의 공유경제 기초 마련을 위한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 공유경제 자원이나 사업, 정보, 시군간 연계 등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추진이나 추진이 가능한 도청 중심의 공유경제 정책 제안
-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의 실험장 조성
- 공동육아, 경로당의 공유자원화. 플랫폼 업체와의 MOU체결 등을 통해 도립·시립·군립 문화센터에서 기존에 상영하던 영화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안

□ 시 단위의 주민센터를 거점화하여 세종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모델을 벤치마킹

- 새로운 주민센터를 건립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있는 유휴 공간, 인접 학교의 운동 시설(체육관) 등을 도 또는 시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공유자원화 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도내 위치한 유휴부지의 임대 등을 통한 새로운 공유 자원 개발

3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법적 제약 선결

□ 공유자원 공급자 및 이용자 사전, 사후 지원

- 일본사례를 살펴보면 미소노 지구의 경우 사업자(AsMama)에 의한 사전 설명회 개최,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를 위한 지원으로 설명회, 교류회 개최 중에 ‘보육셰어’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각종 현실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했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음
- 이에 각각의 사업 시행 전 좀 더 현장 적합도 높은 사전준비를 통해 공유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 전 후 지원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 법적 제약 사항 검토 및 선결 노력

- 사용빈도가 높은 공유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역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법규제를 고려하며 운행형태의 서비스 제공체제 등을 검토하여 제약요건을 선결할 필요가 있음
- 즉, 일본사례의 경우 도로운송법 제78조의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조항 즉, 시정촌,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 의해 정해진 자가 공공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아 지역 혹은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의 용도를 제공하는 경우와 유상 운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외규정을 두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련 사항들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전략 2 공유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촉진

4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 **청주시 오송 방사광가속기 주변의 발굴을 통한 공유 연구 클러스터 조성**
 - 대학이 입지한 곳에 주로 분포한 연구시설을 청주시내의 오송 방사광가속기 입지와 연계된 공유 연구 클러스터 조성(예를 들어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에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2차 연구 시설 등을 확보하여 연구단지화)

- **도내 생태자원 활용을 통한 체험학습장 및 문화시설 활성화**
 - 속리산, 월악산, 월출산 국립공원 주위의 생태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 발굴 및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서울시는 공유허브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서울시의 대표적 공유경제 사례로 불리는 공구대여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청주시의 경우에도 청주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자원을 관리 중에 있음
 - 비교적 예산이 풍부하고 자원이 많은 청주시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한 공유경제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별도의 플랫폼이 없음
 - 이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충청북도 차원에서 도내의 공유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1 | 공유자원 온라인 플랫폼(서울시, 청주시)



5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충청북도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 사업 육성: 도시 및 농촌지역의 니즈조사 및 발굴

- 충북은 수도권에 근접한 입지로서 충주, 청주 등 도시지역과 영동, 음성, 증평군 등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색이 있음에 따라 충북지역의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임
- 미국 톨사시의 경우 동네 도구 창고 사업이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필요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재봉틀이나 각종 수리기구가 그에 해당됨
- 충북의 경우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과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특화물품을 예시 및 모집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도내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개방하여 공유자원의 관광자원화(유형공유 모델)

- 공공기관의 연수원이 갖는 장점은 비록 시설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숙박비 등이 다른 민간의 시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가격적 우위를 지니고 있음
- 충주호, 속리산, 단양8경 등 충청북도에 소재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연수원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요해 보임

6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공간공유를 넘어선 무형자산(재능 및 지식) 공유의 확산

- 조사표 조사결과, 충청북도와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 중인 78개의 사업 중 41%의 사업이 무형자산인 지식공유 사업임
- 현재 주로 활용되는 형태는 재능 및 인력공유의 형태로서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공유를 통한 인력의 양성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아동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시행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의 수리워크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경제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사회간 협력강화가 핵심일 것인데, 특히 군지역의 경우 한 두 개 시군내 순회는 그 이용자수가 낮아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시군내 뿐만이 아니라 시군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자원의 활용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전략 3 주민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공유문화 확산 및 광역화

7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 도내 기사행 공유사업 및 신규 공유자원의 인지도 제고

- 옥천군의 다람쥐 택시, '누구나' 시설, 귀농인 주거시설, 영동군의 가족센터 이벤트룸 및 공유부엌, 진천군의 공유오피스 지원 등 충북 내 시군의 공유경제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반면 인식조사 결과 충청북도 내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공유경제개념과의 매칭이 안되어 간과되고 있는 원인임에 따라 홍보물 제작 및 게시를 통해 공유경제의 쉬운 설명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 시행하고 있는 도나 시군의 기존사업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져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친생활 물품 대여 사업 우선 추진으로 생활형 공유경제 개념 강화

- 서울시 사례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공구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우선 활성화하였음

-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지역별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장소들을 통해 구매의 필요성은 높지 않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물품의 구비는 구매도 있겠지만, 각 가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고, 연말 세액공제 등을 통해 혜택을 되돌려주어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

□ 11개 시군별 공유정책 사업의 광역화 및 인근 시도 시군단위와의 연계

- 비수도권의 가장 취약한 점은 바로 인구로서 공유경제 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도 인지도나 사용빈도 등이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충북의 경우도 인구감소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으므로 시군별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시행할 경우, 시설이나 서비스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좁게는 인근 시군과 연계 및 광역화하여 사업범위를 광역화 시켜서 시군민 등 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넓게는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인근 시도의 시군(여주, 이천, 안성, 천안, 연기, 금산, 원주, 영월, 영주, 문경, 상주)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상호협력 및 광역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8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 농촌지역이 많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이동수단의 공유자원화 도입

- 옥천군에서는 “시골마을 다람쥐택시”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여 교통 불편 지역 및 버스 미운행지역의 택시비 지원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충청북도가 농촌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에도 확산할 것을 고려할법 함

-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은 공유자원 중 주차장의 갯수가 가장 큰데, 이는 차량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임.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버스 배차 시간이 길고, 택시 역시 잘 다니지 않으며, 주 거주자가 노년층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함
- 카셰어링과는 다른 카풀 제도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본의 미야기현과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one-stop형태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이바라키 미토시의 경우 커뮤니티 조성을 시행함에 있어 SNS어플리케이션인 ‘마치마치(마을마을)’ 를 이용하여 전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신, 지역의 정보를 가시화하여 전입자가 지역 커뮤니티에 참가하기 쉬운 토대를 구축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음
- 즉, 일본사례에 따르면 지역 특화형의 SNS의 활용에 의해 주민간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간 세어에 의한 커뮤니티 활동 거점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따라서 공유경제 자체가 IT에 기반하여 발달한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유경제 정책과 동시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one-stop 플랫폼 구축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온라인,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각 지역의 주민센터, 경로당 등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장소에 별도의 홍보물 제작 및 게시

-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고령층 비중이 높고, 따라서 정책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들 연령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일본 미소노 지구의 설명회, 교류회 개최 중에 ‘보육셰어’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지원, 이바라키 미토시의 지자체와 ‘마치마치’ 공동 주최자가 지역 내 점포를 이용한 주민교류회 실시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상가의 지원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따라서 IT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인지도 향상 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각종 시설, 출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유인물을 설치, 배부 실시하는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전략 4 공유경제의 협력적 구축으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9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오송역, 청주공항 등 광역교통시설 위주의 카셰어링 사업의 활성화**
 -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 꼭 공공 주도로 확산될 필요는 없으며 공공 주도로 확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의 카셰어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주차비 면제 등을 통한 적극 유치하여 광역교통시설도 활성화하고, 공유경제도 활성화
- **성공사례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략**
 - 지역의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이 필요
 -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참조 필요

10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조성

-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한 정책 발굴 및 집행**
 - 충청북도 내에는 총 495개의 시민단체(비영리기관)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비영리기관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시민단체들 중 공유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연관된 단체들과 분기 혹은 반기별 정기적 교류를 통해 도내의 필요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운영모델 연계 및 광역화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비 예산 매칭
- 시도에서 형성하고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 운용과 충청북도에 주관의 Top-Down 형태의 양방향 사업의 추진

11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 충청북도 산하 공유경제 전담 조직의 신설

- 충청북도 공유경제 지원조례에는 15조에 공유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공유사업 78개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 중이지만, 해당 사업을 운용중인 부서는 공유경제가 주무가 아닌, 교육청소년, 농업정책, 경제 등 다른 업무가 주무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유경제의 확산보다는 해당 부서의 주무업무에 치중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
- 공유경제 지원 조례에서 밝힌 센터 외에도 충청북도 도청 내에 공유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전담 사업을 운영 및 관리토록 해야 함
- 공유누리에 충청북도에 등록된 자원은 총 1,289개이지만 본 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 산하기관 차원에서 공유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7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충청북도 산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농기구임대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공유사업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수한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그 강점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조직에 기초자치단체 참여

- 현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참여 구성원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Bottom-Up형태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도 단위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생각하는 필요 사업들이 있을 것이나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화 될 수 없는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음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4절 지원체계

- 선행연구(김상민 외, 2019; 성영조 외, 2016)에 의하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전담조직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향후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도적 추진 방향과 전담지원체계 구축, 성과관리방향을 제시함

1.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2022년도에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조례 제5조에 따라 본 연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외부환경 및 행정수요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확산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충북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은 충주시와 진천군 2곳으로서, 충주시는 2018년도, 진천군은 2019년도에 ‘공유촉진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충주와 진천군 모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향후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나머지 9개 시군의 조례제정 확산을 유도하고, 이 때 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11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공유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시군별 전담조직의 마련

- 충청북도의 경우 공유경제 관련 전담조직이 별도로 없으며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공동체 정책 및 사회적경제 정책 차원에서 공유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충북도 및 시군 대상으로 시행했던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8.26~9.6)에서 청주시, 옥천군 등 시군과 제천시립도서관, 진천농업기술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공유경제 정책 사업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관련 부서에서 복지, 농업, 교육관련 부서까지 매우 다양한 부서에서 매우 의미있는 공유경제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을 시군별로 전담부서화하여 도와 연계·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추진할 경우 공유경제의 개념 도입은 향후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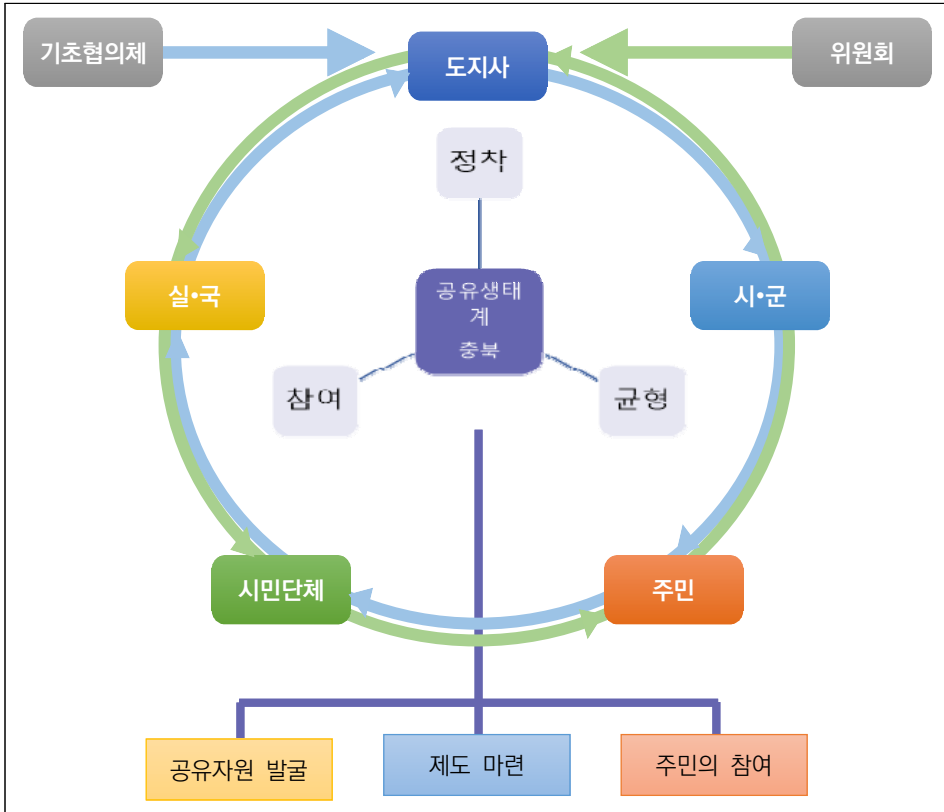
| 표 5-3 | 조사표 응답 충북 10개 시군 및 6개 공공기관 공유경제 정책사업 운영부서

구분	사업수	구분	사업수
경제과	10	경제정책실	1
가족행복과	6	농업유통과	1
농촌활력과	6	농업지원과	1
농업정책과	5	농촌지원과	1
교육청소년과	4	도시교통과	1
여성가족과	4	미래전략과, 건설교통과	1
행복교육과	4	미래전략과, 행복돌봄과	1
농업기술센터	3	사회복지과	1
주민행복과	3	산림과	1
경제기업과	2	성장정책과	1
복지정책과	2	스마트농업과	1
일자리경제과	2	시립도서관	1
지역개발과	2	여성청소년과	1
행복돌봄과	2	영춘면	1
경제기업과, 농업유통과	1	체육시설사업소	1
경제일자리과	1	평생학습과	1
Total		73	

□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민관협력과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공유경제 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사업초기 부터 탄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민간의 사업 아이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공공영역에서 지원가능한 공유 자원의 발굴과 IT 활용, 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의식을 고려한다면 특히 민간기업 및 공익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충북도와 도내 관련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이들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경제추진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자원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관련제도의 마련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림 5-2| 충북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구축(안)



3. 성과관리체계의 마련

□ 성과평가의 의의²³⁾ 및 방향

- 성과관리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자원의 투입과 운영과정, 산출결과의 연계, 목표의 설정과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이 포함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조경훈·박형준, 2021)

23) '김진·김성주(2023), 2023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정부 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관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함²⁴⁾
 -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관리는 조직의 전략적 관리로써 조직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성과평가는 2001년 1월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충북에서 공유경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 및 시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의 형태로 추진될 것이며 이에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평가 대상은 크게 1) 주요 재정사업 2) 민간위탁사업 3) 지방보조사업으로 나뉘며 주요 재정사업은 자체적으로 내부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보조사업은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을 의미함

24)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2조 6호

[표 5-4] 지방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 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출처: 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2020)

-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기수립하여 성과평가제도를 운영 중인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그림 5-3] 공유경제 정책사업 평가



출처: 인천연구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9.

□ 성과평가의 실시

- 공유경제 정책 사업의 성과평가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선행 성과평가 제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목적, 수혜자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효과성 등 사업계획상의 적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정량적 평가
 - 사업추진 건수, 예산, 참여자 수 등 정량적 평가가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사업 참여자(중간조직, 공급자,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 공유경제 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중간조직의 참여자나 공유자원 공급자, 사용자인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이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일 것임
- 이상의 성과평가 방안을 바탕으로 성과지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표 5-5 】 공유경제 성과지표(안)

세부 추진과제	성과지표(안)	성과목표				
		'24	'25	'26	'27	'28
1-1. 공유경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확립 및 활용성 증대기반 구축	조례제정 수 시행계획 수립 수	3	5	8	10	11
1-2. 공유경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안	정책 제안 수					
1-3. 공공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발굴 수					
2-1. 기존 인프라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신규 공유자원 발굴 및 플랫폼화	발굴 수 MOU 건수					
2-2.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발굴 및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발굴 수 협약 건수					
2-3.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발굴 수 협약 건수					
3-1. 공유경제 개념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홍보 건수 참여자 수					
3-2. 플랫폼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의 증대 및 추가적 수요 확보	수요조사 건수 참여자 수, 만족도					
4-1. 신규 자원의 공유경제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교육건수 인센티브 예산, 건수					
4-2.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탈 지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거버넌스 문제 해결	만족도					
4-3.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조정기구 운영	협약 건수 조정 건수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 강남기·고재중·김성천·이숙영·김준우. (2023).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입법정책연구원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상남도
- 김민정. (2015).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민창. (2022). 「코로나 19이후 공유경제 활성화 대응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공유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7(1): 197-220
- 김상민·임태경. (2019)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전철. (2016).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 사회적경제추진단. (2021). 「2021년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 성영조. (2016).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 송영현·신동호·김종화·홍원표·전지훈·최돈정·강수현·전춘복. (2019).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충남연구원
- 윤신희. (2022). 「고양시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전지훈·송영현·홍은일. (2020). 「충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정경석. (2016).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최유성·안혁근. (2018).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한국행정연구원
- 함창모. (2018).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 도입방안」. 충북연구원
- 황영모·신동훈. (2016). 나뉘쓰는 공유경제 도민의식과 지역사회 대응방향.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 황영모. (2019).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북연구원
- 황영모·신동훈. (2015).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17).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중심 -

-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II]
- Botsman, R., (2013). The Futher of Collaborative Consumption-Dancing with Disruption, 스마트클라우드쇼 2013 국제컨퍼런스 기조강연
- Benkler, Y. (2004).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The Yale Law Journal*, 114(2), 273-358
- Botsman, R., &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1
- Codagnone, C., & Martens, B. (2016). Scoping the sharing economy: Origins, definitions, impact and regulatory issues. Cristiano Codagnone and Bertin Martens (2016). Scoping the Sharing Economy: Origins, Definitions, Impact and Regulatory Issues.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1
- European Parliament. (2016a). An Economic Review on the Collective Economy: In-Depth Analysis for the IMCO Committee. IP/A/IMCO/2016-11. PE 595.358
- http://www.pwc.fr/fr/assets/files/pdf/2015/05/pwc_etude_sharing_economy.pdf
- Pais, I., & Provasi, G. (2015). Sharing economy: A step towards the re-embeddedness of the economy?. *Stato e mercato*, 35(3), 347-378
- PwC. (2015).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 Schor, J. (2014). "Debating the Sharing Economy," Great Transition Initiative: Toward a Transformative Vision and Praxis. <http://www.greattransition.org/publication/debating-the-sharing-economy>. p.4
- Vaughan, R., & Hawksorth, J. (2014). The sharing economy: How will it disrupt your business. Megatrends: The collisions. PwC Presentation

부 록

부록 1. 공유경제 정책사업 조사 결과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지수 (명)
단양군 영춘면	총무팀	주민소통문화공간 운영	공간공유(회의실)	영춘면민	자체사업	1,500
단양군청	경제과	2024년 총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유류인력 수요(퇴직, 재취업 등) 반영,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유류인력 수요(퇴직, 재취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	도비보조사업	60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여성회관 지원	강의실 등 공간 이용 허가	보은군 여성단체, 일반주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자체사업	1,000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공동육아나눔터	자녀양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육아정보 공유 등	보은군 부모, 자녀		1,000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보은군청청소년센터 운영	동아리실, 청소년회의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	관내 청소년(9~24세)	자체사업	40,000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총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일부 지원	도내 구직자 및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4,455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총북형 도시농부 사업	도시농부 육성, 인력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도시농부, 도시농부 이용 농가 및 법인	도비보조사업	4,000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업인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경장지 주소 또는 주민등록 주소가 보은군인 농업인	자체사업	1,500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오전 시설이용, 오후 초등돌봄, 돌봄품앗이 운영 지원	13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	국고보조사업	3,000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가족센터운영 (교류소통공간)	이벤트룸, 공유부역 대관	영동군 거주자	국고보조사업	835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공간 및 서비스 제공	주민	자체사업	77,897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대관	공간공유(강의실 등)	교회, 학교, 각종 단체 등	자체사업	15,000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충북학사 도서관	공간공유(열린 학사 운영)	영동군 대학생	도비보조사업	4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서울영동학사	공간공유(열린 학사 운영)	영동군 대학생	자체사업	4
영동군청	경제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유희인력 지원	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상공인	도비보조사업	4,500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일반 주민 및 시외버스 이용객	도비보조사업	
영동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장비 공유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있는 농업인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8,900
영동군청	체육시설 사업소	공공체육시설 대관	공공체육시설 대관(체육관, 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자체사업	10,000
옥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촌활력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공유	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	자체사업	3,300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옥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업정책과	총부형 도시농부 육성	재능공유(인력)	(도시농부참여자)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고용농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자 등	도비보조사업	9,000
옥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지역주민 재능 공유(개인특기)	관내 귀농·귀촌인	도비보조사업	1,010
옥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촌활력과	귀농인의 집	주거시설 12개소(郡 소유 3, 마을회 9) / 계약기간 1년, 유상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 동지역 거주자)	국고보조사업	12
옥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주거시설 5개소(마을회 5) / 계약기간: 자녀 졸업 시까지, 유상	관내 교육이주를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 동지역 거주자)	자체사업	15
옥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희망동지	주거시설 2개소(郡 소유 2) / 계약기간 2년, 유상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 동지역 거주자)	도비보조사업	6
옥천군청	경제과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시설운영	공간공유(회의실3, 프로그램실1, 공유부엌1, 공유오피스1, 휴게공간1)	옥천주민 누구나	자체사업	4,000
옥천군청	복지정책과	통합복지센터 운영	공간공유(회의실)	관내 기관·단체 등	자체사업	13,000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18세 미만 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돌봄공간 공유)	청성 지역 거주 18세 미만 아동	자체사업	25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옥천군민도서관 운영	강의실공유(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독서문화), 자료실공유(어린이·디지털·종합자료실), 주차장공유	옥천군민	도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65,000
옥천군청	복지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녀돌봄공간제공, 상시프로그램운영, 돌봄맞이활동지원	관내 거주 부모 및 자녀(7세이하)	국고보조사업	500
옥천군청	경제과	옥천군일자리센터운영 (취업상담사 배치)	지식공유(일자리정보 공유)	옥천주민 누구나	자체사업	2,000
옥천군청	경제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재능공유	관내 소재 성장가능성 및 소기업 등	도비보조사업	1,000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찾아가는 대학진학 멘토링	지식 공유	관내 중고등학생	자체사업	1,000
옥천군청	미래전략국 행복교육과	충북학사 도서관관 운영지원	열린 학사 운영	서울소재 대학생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36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 불편지역 택시비용 지원)	택시공유	옥천군 다람쥐택시 운행대상 마을	군특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군비	12,683
옥천군청	경제과	의료기기보육센터 공동연구장비 공유	연구장비 공유	관내 센터 입주기업	자체사업	70
옥천군청	경제과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연구장비 공유	연구장비 공유	관내 센터 입주기업	자체사업	50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육천군청	경제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재능공유(인력)	도내 소재 제조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	도비보조사업	4,490
육천군청	산림과	영농부산물 파쇄기 대여	물건 공유(파쇄기 대여)	군내 농업인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357
육천군청	행복교육과	육천군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공간공유(자료실), 도서(인쇄)자료 등 정보서비스 공유	육천군민	도비보조사업,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자체사업	20,000
육천군청	육천군농업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재능공유(인력 지원)	관내 농가 등	국고보조사업	3,635
육천군청	육천군농업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재능공유(인력 지원)	관내 농가 등	자체사업	3,635
육천군청	육천군농업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공간공유 (휴식및 문화공간 제공)	도로이용객 및 쉼터 방문객	국고보조사업	2,300
육천군청	경제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재능공유(인력)	도내 소재 제조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	도비보조사업	4,490
육천군청	경제과	찾아가는 구직자 취업상담 멘토링	재능공유/정보공유	육천군 관내 구직자	국고보조사업	100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공간 제공)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지원) 지역사회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돌봄공동체를 구성 및 운영, 다양한 활동수행 (놀이활동지원) 아이들의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생	국도비보조사업	6,490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재능공유	도내 20세~75세 유희인력, 제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도비보조사업	5,000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도시의 유희인력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 인력 알선	농가 및 도시농부	도비보조사업, 기타보상금	2,000
음성군청	농업지원과	농업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 농기계 운전 안전교육, 농기계 수리 기본교육 등	음성군민, 음성에 경작지가 있는 타시군 농민	군비	6,000
제천시립 도서관	열람팀	열린 도서관 시설 나눔 서비스	공간공유	도내 및 제천시 공공기관 및 단체	자체사업	2,000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문화센터운영	단체 사무실 임대(2개소), 대강당 및 소회의실 대관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제천세로일하기센터, 법인 및 개인	자체사업	5,000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안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운영, 공동육아 지원, 놀이활동 지원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	국고보조사업	29,241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제천시청소년센터 운영	동아리실, 회의실, 포켓볼, 댄스연습실, 노래방 등 운영	9 ~ 24세 청소년	자체사업	6,000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제천시청소년꿈뜨락 운영	밴드연습실, 당구장, 댄스연습실 등 운영	9~24세 청소년	자체사업	40,000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 사업	공간공유(회의실 2, 업무공간 1, 공유오피스 1)	사회적경제 기업	자체사업	1,000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돌봄	관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국고보조사업	1,811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행복돌봄나눔터 운영	아동돌봄 서비스	관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자체사업	960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34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시설 대관(다목적회의실, 공유부엌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증평군민	국도비보조사업	1,000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관내 기업 및 구직자	도비보조사업	1,000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도시의 유희인력 활용으로 영농인력 지원	도시농부 근로를 원하는 도내 비농업인, 도시농부 고용을 원하는 농가	도비보조사업	2,500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증평군 창의마크 운영	공간공유(프로그램실, 동아리실, 1인 스튜디오실, 요리교실, 실내용이터 등)	증평군민	군비	7,236
진천군 농업기술 센터	농기계지원팀	농기계 임대(공유)	중부 4군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물품(농기계) 임대 공유	중부4군 농업인	자체사업	10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 운영	공간공유	관내 청소년	자체사업	13,778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덕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공간공유	관내 청소년	자체사업	46,388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간공유	관내 청소년	자체사업	61,974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공간공유(사무실)	공공기관 연관기업	국도비보조사업	30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주차장, 공연장, 전시실 공유	인근주민, 학원, 각종단체	자체사업	5,000
진천군청	평생학습센터	충북혁신도시 공유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장소 제공	진천군, 음성군 주민 누구나	자체사업	1,200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두런두런(Do run Do learn) 운동해-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	재능공유	관내 청소년	자체사업	60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인력 공유	도내 농가 및 도시유류인력	도비보조사업	5,000
충북인재 평생교육 진흥원	충북인재평생 교육진흥원 인재양성팀	충북인재 나눔 플랫폼 (충북인재 재능나눔, 충북인재 멘토링)	인력 공유	충북도민(중고대학(원)생)	자체사업	350
충주시청	경제기과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재능 및 인력 공유	도내 유류인력 및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영세 소상공인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3,750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공동육아 나눔터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및 초등돌봄	영유아, 초등저학년, 보호자 등	국고보조사업	33,454

소속	담당부서	사업명	제공서비스	주요수혜대상	사업유형	이용자수 (명)
충주시청	시립도서관	도서관 시청각실 대관	시청각실 공유	충주시민	자체사업	1,000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행정지원과	남부출장소 청사시설 개발	공간공유(회의실)	남부3군 군민	자체사업	1,000
충청북도 본청	경제기업과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생산시설(장비) 공유	도내 제조창업 기업 등	도비보조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
충청북도 본청	바이오정책과	벤처 및 스타트업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도내 바이오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기업	도비보조사업	10
충청북도 본청	스마트농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공유	관내 및 인접시군 농업인	국고보조사업	60,000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행정지원과	도민 사랑방 운영	독서공간 및 컴퓨터 사용 공간 공유	도민	도비보조사업	2,000

부록 2. 설문지(도민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목적: 충청북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유경제의 정의 및 특징:

- 일반적으로 “개인의 유희화된 자산을 개인만의 소유가 아닌 타인과 공유(교환-대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자본주의’로 정의될 수 있음
-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혜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Platform Cooperativism)’에 기반

□ 공유경제의 예시:

공유경제 유형 및 분류		주요내용	대표 사례
유형 자원	공간 공유	유희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주거, 주차장, 숙박, 사무공간 예시) 에어비앤비, WeWork, 공유주방, 공유 오피스
	교통 공유	유희상태에 있는 탈 것을 시간단위로 임대하는 사업	카셰어링 (car-sharing), 공유 킥보드 예시) 우버, Socar, Green Car
	물건 공유	각종 물건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판매, 대여, 교환 등의 방식 모두 포함	공구, 의류, 도서 예시) eBay(이베이), 당근마켓, 파라바라, 주민 도서관
무형 자원	지식 공유	무형적 자원들을 공유하는 서비스	경험, 재능, 시간, 정보 및 서비스 예시) 구인구직(알바몬), 지식공유(위스폼) 등

□ 충청북도 공유경제(공공기관 운영) 예시: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공간 공유	미래여성플라자 공유시설 대관	대강당 및 문화이벤트홀, 영상미디어실 등 7개소 공간
	공동 육아 나눔터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 및 자녀 돌봄 활동 인프라 구축
	청소년 창업공간 / 복합문화센터 설치	공유공간, 창업공간, 동아리방 및 사무공간 조성
	열린 학사 운영	서,동서울관 시설 개방(열린숙실 7실, 열린회의실 4실) / 온라인 사용 신청
	청사시설 개방 운영	북부권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시설 무료 개방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충북대학교 전문랩에서 구체화 된 상품 등을 다수 기업이 공장 활용하여 양산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재능 공유	충북 인재 멘토링	1:1 온오프라인: 진로, 진학 상담, 학업 동기부여 및 자기 주도적 학습
	충북인재 재능나눔	고교생 및 대학(원)생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 재능 공유
	도내 고교생 멘토링 지원사업 협업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사업 연계 및 공동 추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유휴인력 수요(퇴직, 재취업 등) 반영,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충북형 도시농부육성	도시 유희인력 활용으로 영농인력 부족 해소
물품 장비 공유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공유):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 확산 촉진
	공동 연구장비 공유사업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공유(충북바이오 산학융합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충청북도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해당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내용은 통계 및 연구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개별 응답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기간 2024년 8월 13일 까지

조사기관

(우편

제출처)

및 문의

(이메일

제출처)

충청북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김윤승)

김성주(033-769-9874 / sjkim@krila.re.kr, 지방재정연구센터장)

김윤승(033-769-9876 / yskim@krila.re.kr, 부연구위원)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 질문

질문 1) 귀하는 공유경제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질문 2) 귀하는 공유경제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질문 2-1로 이동 / 아니오: 질문 2-11로 이동)

① 예	② 아니오 (질문2-11로 이동)
-----	--------------------

질문 2-1) 공유경제에 직접 경험해 보았다면 참여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공유경제 이용자	② 공유경제 공급자	③ 둘 다
------------	------------	-------

질문 2-2)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설문지 첫 페이지에 제시된) 공유경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질문 2-3)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유경제를 사용해 보았다면 어떠한 서비스 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질문 2-5로 이동)

공유경제 유형		중복체크 가능(√)
공간 공유	미래여성플라자 공유시설 대관	
	공동 육아 나눔터	
	청소년 창업공간 / 복합문화센터 설치	
	열린 학사 운영	
	청사시설 개방 운영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재능 또는 일자리 공유	충북 인재 멘토링	
	충북인재 재능나눔	
	도내 고교생 멘토링 지원사업 협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충북형 도시농부육성	
물품 장비공유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 연구장비 공유사업	
기 타 (직접서술)		

질문 2-4) 위에 제시된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해보았다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질문 2-5) (민간/공공 모두 포함)공유경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공급해 보았습니까(복수응답 가능)?

공유경제 유형		서비스 이용경험 중복 체크(√)	서비스 공급경험 중복 체크(√)
물품 공유	① 생활용품 공유 (아동용품 - 장난감, 육아 용품 등)		
	② 생활용품 공유 (취미용품 - 낚시대 등)		
	③ 생활용품 공유 (기타 생활용품 - 옷, 식기 등)		
	④ 농기계 공유		
	⑤ 연구장비 공유		
시설 (공간) 공유	⑥ 공유 주차장		
	⑦ 창업공간/제조공유공간		
	⑧ 체육관		
	⑨ 회의실(비즈니스 공간)		
	⑩ 강의실 / 강당		
	⑪ (공유) 부엌		
	⑫ 숙박 공간		
이동수단 공유	⑬ 승차 공유(카풀 등)		
	⑭ 차량 공유		
	⑮ 자전거 공유		
	⑯ 다른 이동수단 공유(공공 킥보드 등)		
재능 및 일자리 공유	⑰ 재능/지식 서비스		
	⑱ 멘토링 서비스		
	⑲ 온라인 교육(예: Mooc 등)		
	⑳ 일자리 공유(지원)(충북형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 등)		
21. 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22. 육아 나눔터			
23. 기타 (직접 서술)		()	()

질문 2-6) 공유경제를 경험해보았다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상위3개 기입)

질문 번호	내용	서비스 이용 이유 우선순위 상위 3개	예시
①	편리하기 때문에		3
②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2
③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1
④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⑤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라서 호기심에		
⑥	여분의 서비스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⑦	자원의 절약 및 보호를 위해		
⑧	기타 (체크란에 서술)	()	

질문 2-7) 공유경제를 경험해보았다면 공유경제 서비스의 접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다?
(복수선택 가능)

질문 번호	내용	중복 체크(√) 가능
①	스마트폰 (앱) 활용	
②	유/무선 전화	
③	인터넷 활용(홈페이지 접속)	
④	공공기관 직접 방문(도청, 군청, 읍사무소 등)	
⑤	직접 방문(공유경제 서비스 제공기관)	
⑥	기타	()

질문 2-8)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해보았다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질문 2-9)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해보았다면 주변에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질문 2-10) 공유경제 서비스가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질문 2-11) 공유경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상위 3개 기입)

질문 번호	내용	경험하지 못한 이유 우선순위 상위 3개	예시
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
②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2
③	공유경제가 아니어도 다른 적절한 수단이 존재해서		1
④	공유경제(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서(정보부족)		
⑤	공유경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용하는 절차를 알지 못해서		
⑥	이용 절차가 까다로워서		
⑦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⑧	비용이 비싸서		
⑨	기타 (체크란에 직접 서술)	()	

질문 2-12) 공유경제의 사용 및 효과와 관련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번호	공유경제 인식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다					
②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③	공유경제 서비스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④	공유경제 서비스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⑤	공유경제 서비스의 이용은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⑥	나는 새로운 것을 남보다 더 빨리 시도해 보고 싶다					
⑦	나는 온라인 구매와 결제 시스템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⑧	나는 디지털 기술을 다루거나 관련된 일을 잘 소화하는 편이다					
⑨	내가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⑩	내가 공유경제 서비스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⑪	내가 공유경제와 관련된 인터넷 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⑫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유경제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다					
⑬	제공된 안내(메뉴얼)가 주어진다면 참고하여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⑭	내 주변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을 권유한다					
⑮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이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다					
⑯	나는 친구들이 권유한다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다					
⑰	나의 주변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⑱	나는 공유경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					
⑲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⑳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질문 3) 귀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추후에 (재)경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질문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유경제 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어느정도 많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질문 5) 공유경제 서비스의 사업의 향후 발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다소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질문 6) 귀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상위 3개 기입)

질문 번호	내용	공유경제 활성화 저해 요인 우선순위 상위 3개	예시
①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이해) 부족		3
②	공유경제 필요성 부족		2
③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		1
④	지역 내 공유경제 자원 부족		
⑤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⑥	공유경제 참여자 간 신뢰 부족		
⑦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족		
⑧	기타		

질문 7) 귀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의 역할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상위 3개 기입)

질문 번호	내용	공유경제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 우선순위 상위 3개	예시
①	홍보를 통한 도민의 관심 유도 및 참여 독려		
②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③	공유경제 관련 제도(법령 등) 개선 및 지원		
④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⑤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⑥	중개 수수료 인하		
⑦	지역 공유기업 인증제도 운영		
⑧	공유경제 참여자 보호 및 보증		
⑨	공유서비스 직접 발굴 및 지원		
⑩	기타		

질문 8) (수요자 입장에서) 앞으로 본인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상위 5개 기입)

공유경제 유형		우선순위 상위 5개	예시
물품 공유	① 생활용품 공유 (아동용품 - 장난감, 육아용품 등)		
	② 생활용품 공유 (취미용품 - 낚시대 등)		5
	③ 생활용품 공유 (기타 생활용품 - 옷, 식기 등)		
	④ 농기계 공유		
	⑤ 연구장비 공유		4
시설 (공간) 공유	⑥ 공유 주차장		
	⑦ 창업공간/제조공유공간		3
	⑧ 체육관		
	⑨ 회의실(비즈니스 공간)		
	⑩ 강의실 / 강당		2
이동수단 공유	⑪ (공유) 부엌		
	⑫ 숙박 공간		1
	⑬ 승차 공유(카풀 등)		
	⑭ 차량 공유		
	⑮ 자전거 공유		
재능 및 일자리 공유	⑯ 다른 이동수단 공유(공공 킥보드 등)		
	⑰ 재능/지식 서비스		
	⑱ 멘토링 서비스		
	⑲ 온라인 교육(예: Mooc 등)		
	⑳ 일자리 공유(지원)(충북형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 등)		
㉑ 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㉒ 육아 나눔터			
㉓ 기타 (직접 서술)			

질문 9) (공급자 입장에서) 본인이 소유한 공간, 물건, 재능 등을 충북도민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참여하고 싶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상위 5개 기입)

공유경제 유형		우선순위 상위 5개	예시
물품 공유	① 생활용품 공유 (아동용품 - 장난감, 육아 용품 등)		
	② 생활용품 공유 (취미용품 - 낚시대 등)		5
	③ 생활용품 공유 (기타 생활용품 - 옷, 식기 등)		
	④ 농기계 공유		
	⑤ 연구장비 공유		4
시설 (공간) 공유	⑥ 공유 주차장		
	⑦ 창업공간/제조공유공간		3
	⑧ 체육관		
	⑨ 회의실(비즈니스 공간)		
	⑩ 강의실 / 강당		2
	⑪ (공유) 부엌		
이동수단 공유	⑫ 숙박 공간		1
	⑬ 승차 공유(카풀 등)		
	⑭ 차량 공유		
	⑮ 자전거 공유		
재능 및 일자리 공유	⑯ 다른 이동수단 공유(공공 키포드 등)		
	⑰ 재능/지식 서비스		
	⑱ 멘토링 서비스		
	⑲ 온라인 교육(예: Mooc 등)		
	⑳ 일자리 공유(지원)(충북형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 등)		
	㉑ 금융 (P2P 대출 클라우드 펀딩 등)		
	㉒ 육아 나눔터		
	㉓ 기타 (직접 서술)		

질문 11) 귀하는 공유경제의 역할 및 선호와 관련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번호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다양한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 보다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공유하고 줄이면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④	공유경제에 많은 (민간)사업주체가 참여한다면 선택의 폭과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⑤	공유경제 서비스는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⑥	공유경제 서비스 종류(선택의 폭)가 늘어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⑦	나는 전자상거래를 자주 이용한다					
⑧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뢰한다					
⑨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있어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⑩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주위 친구들에게 권할 적이 있다					
⑪	공유경제 서비스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⑫	공유경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⑭	공유경제 활성화에 있어 정부(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⑮	공유경제 활성화에 정부(지자체) 지원(예산, 지원금, 기술개발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하다					
⑯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기본적인 제도나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⑰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을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⑱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에 있어 정부(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					
⑲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⑳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공유자원(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응답자 일반사항

기본 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기본 Q2) 귀하의 연령과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연령	②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석사이상)
만 세					

기본 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타 지역 거주 시(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타 지역 거주 체크하고 근무
(통근/통학)지역 체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타 지역 거주	
동	읍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읍		면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기본 Q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								
공무원	서비스· 판매	농업/ 어업	사무직	관리· 전문직	현장 (생산)직	기타		
						학생	무직	기타

기본 Q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일 경우)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소속												
총복 본청	시				군			기타				
	본청	구	동	읍	본청	읍	면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중앙 부처	기타 (직접서술)	

정책연구 2024-25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저 자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행 일 2024년 9월 30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

